



정책자료 2021-02

2021 인구포럼 운영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자료 2021-02

2021 인구포럼 운영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792-4 93330
<https://doi.or.kr/10.23060/kihasa.f.2021.02>



제1장 2021 인구포럼 개요	5
제1절 2021 인구포럼 개요	7
제2절 제24회 인구포럼 개요	9
제3절 제25회 인구포럼 개요	11
제4절 제26회 인구포럼 개요	13
제5절 인구포럼 영상제작	14
제2장 제24회 인구포럼 : 코로나19 시기 인구 변동과 정책적 함의 17	
제1절 코로나19 시기의 연애, 결혼, 출산 변동	19
제2절 코로나19 사망률 국제 비교: 연령별 인구 비중·확진율·치명률 분해 분석 ..	46
제3절 코로나19 시기의 수도권 인구 이동 빅데이터 분석	78
제4절 종합 토론	87
제3장 제25회 인구포럼 : 신중년 노후준비: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97
제1절 신중년 노후준비 현황과 경험	99
제2절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103
제3절 좌담회	116

제4장 제26회 인구포럼 : 청년의 노동과 결혼·출산: 젠더와 계층의 교차로 127

제1절 비혼의 확산과 불안정한 젠더혁명 129

제2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성 근로자의 출산의 기회비용 140

제3절 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 변화: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155

제4절 종합 토론 165

제5장 인구포럼 영상제작 179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2021 인구포럼 개요

제1절 2021 인구포럼 개요

제2절 제24회 인구포럼 개요

제3절 제25회 인구포럼 개요

제4절 제26회 인구포럼 개요

제5절 인구포럼 영상제작



제 1 장 2021 인구포럼 개요

제1절 2021 인구포럼 개요

1. 운영 목적

- 인구포럼은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사회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며, 나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운영됨.
 - 연구 성과 확산은 물론 인구문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 관련 사회 대응에 대한 대국민 접점의 기제로써 활용

- 전 세계가 COVID-19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에 따른 문제를 경험하여 이에 대한 인구 변화등을 모색할 필요가 요구됨.
 - 내실있는 기본계획 수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염두한 전방위적 논의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과 지방에서 새로운 정책 관점을 받아들이는 시점 간의 미스 매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간격을 좁히기 위한 수단이 요구됨.

- 이에 총 세 차례의 포럼을 기획 및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2. 인구포럼 연역

-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에서는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2014년에서부터 인구포럼을 진행하여 옴. 이에 인구포럼의 연속적인 개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2021년부터 2014년 이후의 개최된 인구포럼의 차수를 이어받아 행사를 진행함.

〈표 1-1〉 인구포럼 연역

차수	개최일	주제
제1회	14.2.11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이슈 진단과 과제
제2회	14.2.21	통일한국의 적정 인구: 통일 대박으로 가는 길
제3회	14.6.19	저출산 위기 극복의 첫걸음,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출생·성장
제4회	14.7.1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세대간 소통 (대학원생 발표)
제5회	14.9.5	한·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비교 국제 세미나
제6회	14.11.14	한국사회의 저출산, 해법을 찾는다
제7회	15.7.23	고령사회대책 토론회
제8회	15.12.8	저출산현상에 대한 청소년·청년층의 이해와 현실
제9회	16.4.2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
제10회	16.7.7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체계 구축: 당면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
제11회	16.9.9	100세 시대, '노인'연령의 의미는?
제12회	16.12.1	저출산고령화 최근 이슈와 정책 방향
제13회	17.2.24	주요 저출산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제14회	17.10.27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정책에 대한 다학제적 검토
제15회	17.12.11	경쟁에서 공생으로의 인구 패러다임의 변화
제16회	17.12.19	저출산 대응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강화

차수	개최일	주제
제17회	18.7.5	저출산·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
	18.7.6	
제18회	18.8.2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개편을 위한 전문가 포럼
제19회	19.5.28.	대기환경과 저출산·고령화
제20회	19.7.25.	인구현상 공감(共感)하기!
제21회	20.6.3.	젠더관점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회구조 분석
제22회	20.7.23.	세대 공감(共感)
제23회	20.12.4.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내외 노인 돌봄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표 1-2〉 2021 인구포럼 진행 일정

진행회차	주제	일시 및 장소	담당자
제24회 인구포럼	코로나19 시기 인구 변동과 정책적 함의	- 2020. 5. 13.(목) - 유튜브 생중계	- 신윤정 연구위원
제25회 인구포럼	신중년 노후준비: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 2020. 8. 19.(목) - 유튜브 생중계	- 황남희 연구위원
제26회 인구포럼	청년의 노동과 결혼·출산: 젠더와 계층의 교차로	- 2020. 12. 3.(금) - 유튜브 생중계	- 최선영 부연구위원
인구포럼 영상제작	신중년이 나타났다	- 2020. 12. 17.(금) - 유튜브 녹화	- 황남희 연구위원

주: 2021년의 경우,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은 무관중으로 진행함. 단 보다 활발한 교류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변경함.

제2절 제24회 인구포럼 개요

1. 개요

□ 주제 : 코로나19 시기 인구 변동과 정책적 함의

□ 개최목적

○ 코로나19 시기의 인구의 변동을 결혼/출산, 사망, 이동으로 나누

어 파악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적 합의 도출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14:00~17:00
- 장소: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
-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구학회
- 방법: Youtube 생중계

□ 주요내용

- (주제 발표 1) 코로나19 시기의 연애·결혼·출산 변동
- (주제 발표 2) 코로나19 사망률 국제 비교: 연령별 인구 비중·확진율·치명율 분해 분석
- (주제 발표 3) 코로나19 시기의 수도권 인구 이동 빅데이터 분석
- 종합토론

2. 세부일정

□ 제24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인구학회 공동주최 인구포럼

〈표 1-3〉 제1차 인구포럼 세부일정

순서	시간	세부내용
개회식	14:00-14:15	개회사: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축사: 은기수 한국인구학회장
발표	주제1	14:15-14:45 코로나19 시기의 연애·결혼·출산 변동 최슬기 교수(KDI 국제대학원), 계봉오 교수(국민대학교)
	주제2	14:45-15:15 코로나19 사망률 국제 비교: 연령별 인구 비중·확진율·

순서	시간	세부내용
주제3	15:15-15:45	치명율 분해 분석 신윤정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19 시기의 수도권 인구 이동 빅데이터 분석 김영룡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15:45-16:00	휴식
종합토론	16:00-17:00	전광희 교수 (충남대학교)
		김근태 교수 (고려대학교)
		우혜경 교수 (공주대학교)
		이상림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절 제25회 인구포럼 개요

1. 개요

- 주제 : 신중년 노후준비: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 개최목적
 - 신중년의 노후준비 현황과 경험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생애전환기 노후준비 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14:00~16:00
 - 장소: The Plus 스튜디오(서울 영등포구)
 -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방법: Youtube 생중계

□ 주요내용

- (인터뷰 영상) 신중년 노후준비 현황과 경험
- (주제 발표) 생애전환기 노후준비 지원정책
- (좌담회) 생애전환기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발전방안

2. 세부일정

□ 제25회 인구포럼 세부 일정

〈표 1-4〉 제25회 인구포럼 세부일정

시간	순서	세부내용
14:00-14:05	개회식	개회사: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환영사: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14:05-14:25	인터뷰 영상	신중년 노후준비 현황과 경험(인터뷰 영상)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이용·미이용자 7명
14:25-15:00	주제발표	생애전환기 노후준비 지원정책 황남희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00-15:10		휴식
15:10-16:00	좌담회	좌장: 이금룡 학회장(한국노년학회) 토론: 성혜영 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황윤주 센터장(서울50+재단) 김연숙 과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비스 이용자 2명

제4절 제26회 인구포럼 개요

1. 개요

□ 주제 : 청년의 노동과 결혼·출산: 젠더와 계층의 교차로

□ 개최목적

- 청년의 노동과 결혼·출산을 젠더와 계층관점으로 파악하여 향후 청년정책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년 12월 3일(금) 14:00~16:00
- 장소: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실
- 방법: Youtube 생중계

□ 주요내용

- (주제 발표 1) 비혼의 확산과 불완전한 젠더혁명
- (주제 발표 2)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성 근로자의 출산의 기회비용
- (주제 발표 3) 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 변화: 탈 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 종합토론

2. 세부일정

□ 제3차 인구포럼 세부 일정

〈표 1-5〉 제26회 인구포럼 세부일정

순서	시간	세부내용
개회식	14:00-14:05	개회사: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축사: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좌장: 최인이(충남대학교 교수)		
주제 발표1	14:05-14:25	비혼의 확산과 불완전한 젠더혁명 최선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 발표2	14:25-15:45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성 근로자의 출산의 기회비용 최세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 발표3	15:45-15:05	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 변화: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이상직(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15:05-15:15	휴식
종합토론	15:15-16:00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선유(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5절 인구포럼 영상제작

1. 개요

□ 주제 : 신중년이 나타났다

□ 목적

- 베이비붐세대의 단계적 은퇴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중년세대
에 대한 개념과 특성, 현황 등을 짚어보고 향후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모색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년 12월 17일
- 장소: 예쁜오늘렌탈 스튜디오
- 녹화시간: 1시간 반 내외

□ 출연진

역할	성명 및 직위(소속)
진행자	최동석 아나운서
원내 전문가1	이윤경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원내 전문가2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원내 전문가3	조성은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원의 전문가1	김미곤 원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영상 구성

○ 세대 구분과 신중년

- 정부의 신중년 대상 정책 관련 뉴스기사 송출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KTV, 공중파 등 뉴스 검색
- 다른 세대가 바라보는 신중년 송출 → 인터뷰 영상 제작???
- 10~40대, 7~80대 10명 내외?? : 보사연, 그 외 국민

- 신중년 세대 구분의 필요성
- 신중년 세대의 특성: 은퇴전환기 특성, 세대 자체의 특성

○ 신중년의 다양성

- 생애일자리 경험, 소득수준, 성별 등

○ 신중년의 일상과 관심사

- 일, 은퇴
- 여가, 사회공헌
- 가족과 부양, 사회관계
- 주거이동, 지역이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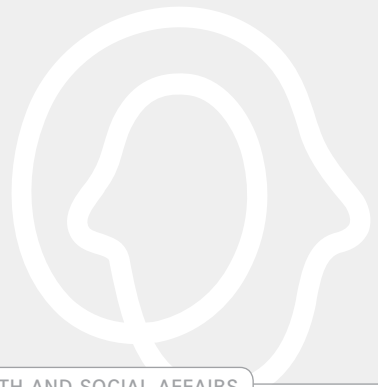
○ 신중년의 노후준비

- 노후준비 방법, 노후준비수준 등

- 신중년 지원 정책 및 지원 기관 영상/자료 송출

○ 중년의 안정적인 노후정착을 위한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 일반적인 노후지원정책 : 소득보장, 고용 등 → 소득보장, 고용, 노인일자리에서 신중년의 특성을 반영한 변화
- 신중년 특화된 중앙정부 정책, 지자체 정책



제2장

제24회 인구포럼 : 코로나19 시기 인구 변동과 정책적 함의

제1절 코로나19 시기의 연애·결혼·출산 변동

제2절 코로나19 사망률 국제 비교: 연령별 인구 비중·
확진율·치명율 분해 분석

제3절 코로나19 시기의 수도권 인구 이동 빅데이터 분석

제4절 종합 토론



제 2 장

제24회 인구포럼 : 코로나19 시기 인구 변동과 정책적 함의

제1절 코로나19 시기의 연애, 결혼, 출산 변동¹⁾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시기에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2020년 1월부터 일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으며, 2020년 2월부터 국내에서 백신접종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위기상황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연애, 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의도와 행동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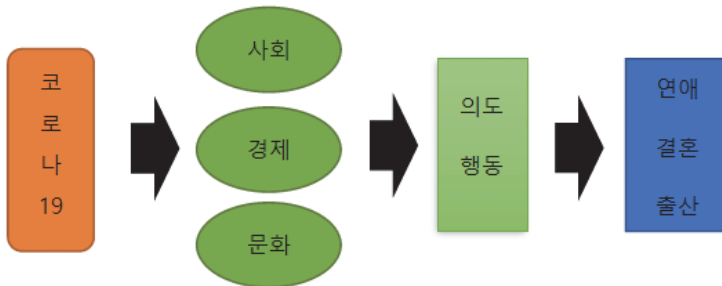
과거 사망률이 급증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속에서 출산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출산율의 하락 위험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일 년이 되는 시점부터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제 영향력은 2021년에야 드러난 것으로 예상되었다(최슬기 2020). 2021년 2월 통계청인구동향 자료에 의하면 전년 동월 대비 혼인은 21.6% 감소하였고, 출생아수는 5.7% 감소하였다.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그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에는 시간

1) 최슬기(KDI국제정책대학원), 계봉오(국민대학교)

이 더 필요하겠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 경제, 문화적 결정 요인을 직접 분석하기보다는 생애 과정에서 현상으로 드러난 의도와 행동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가 연애, 결혼, 출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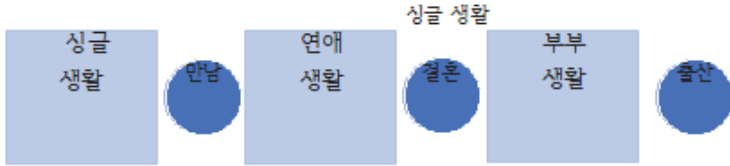
[그림 1] 연애 결혼 출산의 의도 및 행동과 그 결정요인들



연애, 결혼, 출산은 단계별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이다²⁾. 그림2는 이러한 경로를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시작은 싱글이었던 두 성인남녀의 만남이다. 만남은 미팅이나 소개팅처럼 의도적인 이성간의 만남일수도 있고, 일이나 동호회 등의 활동을 통한 자연스런 만남일수도 있다.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 속에서 상호간에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면 연애 단계로 접어든다. 연애생활을 하던 중 일부는 결혼을 통해 부부생활로 변모하게 된다³⁾.

2) 모든 사람들이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단계적 생애과정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결혼없이 출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혼출산처럼 연애와 결혼 두 과정을 모두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이 때 결혼은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후 분석에서도 부부생활을 동거부부와 기혼부부 각각을 따로 다루기로 한다.

[그림 2] 결혼과 출산에 이르는 이행 경로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젊은 세대의 만남은 어떠한지, 결혼에 대한 생각은 달라졌는지, 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코로나 19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의도와 행동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추출한 결혼과 출산 이행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해본다.

2.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연애, 결혼, 출산의 변화

2-1. <코로나 19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 설문조사

<코로나 19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는 젊은 세대의 가족 및 결혼가치관을 주제로 KDI국제정책대학원(조사책임자 최슬기 교수)에서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회조사이다. 25~49세 한국인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의 사례수는 2천명인데 성, 연령(5세간격), 지역(17개 시도)별 인구비례에 맞춘 할당표집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엠브레인 인터넷패널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설문 방식으로 조

사는 이루어졌다.

필드조사 시기는 2021년 2월 5일부터 10일까지이다. 이 시점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약 1년이 지나간 시기이다. 2020년 봄의 1차대유행에 이어, 8월의 2차대유행, 12월의 3차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이었다. 해외에서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아직 국내에 백신이 도입되기 이전 상황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이었다.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조사문항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의도나 행동의 변화를 묻는 것들이다.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현 상황과 그 이전을 비교한다면, 요즘 귀하의 XXX는 달라졌습니까?”라는 형태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조사가 이루어진 2021년 2월초와 코로나19 위기상황 이전인 2020년 1월 이전, 즉 약 1년이라는 시차를 둔 두 시점을 비교해서 응답자가 생각한 의도나 행동의 변화를 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2천명 중, 사별 및 이혼을 한 55명을 제외한 1,945명이 분석대상이다. 사별 및 이혼의 경우, 미혼이나 기혼과 특성이 다를 수 있는데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생애과정별 조사대상의 분포는 표1과 같다. 기혼자 959명은 자녀수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출산에 대한 의도와 행태 변화는 응답자의 연령이나 출산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없이 출산을 종료했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설사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더라도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자녀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기혼자 생애과정을 세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연령이나 출산계획의 영향력 차이를 통제하는 효과도 있다.

〈표 1〉 생애과정별 샘플의 분포

유형	미혼, 애인없음	미혼, 연애중	동거중	기혼 자녀0명	기혼 자녀1명	기혼 자녀2명	기혼 자녀3+
전체 1945명	602명	306명	78명	205명	287명	403명	64명

2-2. 희망자녀수 변화

코로나19 이전시기 대비 희망자녀수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모든 집단에서 대다수는 ‘변화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애인이 없는 미혼 응답자는 82.6%가 ‘변화없다’고 답하여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동거중, 자녀가 0명이나 1명인 응답자는 각각 69.2%, 69.8%, 66.9%가 ‘변화없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희망자녀수 변화를 경험한 비중이 컸다. 변화를 경험한 이들 중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변화가 훨씬 더 많았다. 애인이 없는 미혼 중에서 ‘많아졌다’는 1.2%에 그친 반면, ‘줄어들었다’는 16.2%이었다. 연애중인 미혼에게서는 ‘많아졌다’는 0.6%이었고 ‘줄어들었다’는 21.6%이었다. 자녀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동거중이나 기혼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 분명해졌다. 동거중에서는 3.9%가 ‘많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26.9%는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기혼에서는 자녀수 0명과 1명은 ‘줄어들었다’가 각각 28.8%와 28.6%로 부정적인 응답자가 상당수에 이르렀다. 반면에 ‘많아졌다’는 응답은 각각 0.5%와 4.6%에 불과했다. 모든 집단에서 많아졌다라는 긍정적 응답을 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줄어들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더 컸다

4) 희망자녀수는 원하는 자녀수를 의미한다. 이는 이상적인 자녀수를 묻는 이상자녀수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 조사에서 희망자녀수로는 1.61명이 이상자녀수로는 2.05명이 평균값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코로나19 이전 대비 희망자녀수 변화

유형	(명, %)						
	미혼, 애인없음	미혼, 연애중	동거중	기혼 자녀0 명	기혼 자녀1 명	기혼 자녀2 명	기혼 자녀3+ 명
매우 줄어들었다	8.6	13.4	11.5	17.6	10.1	7.0	10.9
약간 줄어들었다	7.6	9.2	15.4	12.2	18.5	16.6	20.3
변화없다	82.6	76.8	69.2	69.8	66.9	73.7	67.2
약간 많아졌다	0.5	0.3	2.6	0.5	4.2	2.2	0.0
매우 많아졌다	0.7	0.3	1.3	0.0	0.4	0.5	1.6
전체 (사례수)	100% (602명)	100% (306명)	100% (78명)	100% (205명)	100% (287명)	100% (403명)	100% (64명)

2-3. 싱글생활에서의 변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싱글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미혼이며 애인이 없는 602명 중에 결혼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남성의 60.7%, 여성의 33.6%이었다. 남성은 다수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답한 반면에, 여성은 다수가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코로나19 시기 결혼의향의 변화이다. 남성은 '달라지지 않았다'가 78.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더 하고 싶어졌다'와 '더 하기 싫어졌다'는 상반된 응답이 각각 10.3%와 10.9%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달라지지 않았다'가 73.4%로 남성보다 소폭 줄어들었고 '더 하고 싶어졌다'는 5.9%인데, '더 하기 싫어졌다'는 20.7%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의 4배 가까이 더 컸다. 미혼 여성에게서 결혼 의향에 부정적인 변화가 발견된 것이다.

싱글의 삶에서 연애 증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시점에 애인이 없는 미혼들 중에 2020년 2월 코로

나 19 확산 이후부터 조사시점까지 새로운 이성을 만나거나 소개받는 경험이 있는가 묻는 질문에 78.1%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약 1년동안 열명 중 두명만 이성을 만나본 경험을 한 것이다. 이 수치가 코로나19 이전에 대비 변화한 것인지 알기 위해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현 상황과 그 이전을 비교했을 때,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소개를 받는 빈도가 달라졌는가'하고 물었다. 응답자의 약 절반은 '변화없다'고 답하였다. '많아졌다'고 답한 경우는 남성은 0.9%, 여성은 0%로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여성의 31.7% 남성의 32%는 '매우 줄어들었다'고 답할 만큼 새로운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새로운 만남이 크게 줄었음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위기상황이 단기간에만 지속된다면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상황은 조사시점에 이미 일년을 넘어가고 있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싱글에서 연애생활로, 다시 결혼생활로 나아가는 생애과정의 변화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는 결혼과 출산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표 3〉 미혼이며 애인 없음

(유형1, n=602명, %)

질문	응답보기	여	남	남녀 합계
결혼의향		100.0	100.0	100.0
	하고 싶지 않다	66.4	39.3	51.5
	하고 싶다	33.6	60.7	48.5
이전 대비 결혼의향 변화		100.0	100.0	100.0
	더 하기 싫어졌다	20.7	10.9	15.3
	달라지지 않았다	73.4	78.9	76.4
	더 하고 싶어졌다	5.9	10.3	8.3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이성 만남/소개		100.0	100.0	100.0
	없다	78.2	78.0	78.1
	있다	21.8	22.1	21.9
이전 대비 새로운 만남 빈도		100.0	100.0	100.0
	매우 줄어들었다	31.7	32.0	31.9
	약간 줄어들었다	14.8	18.4	16.8
	변화없다	53.5	48.6	50.8
	약간 많아졌다	0.0	0.6	0.33
	매우 많아졌다	0.0	0.3	0.17

2-4. 연애생활에서의 변화

2020년 2월초 연애 중인 사람들은 결혼의향이 어떠했을까? 앞서 연애를 하지 않는 여성의 약 2/3가 '결혼이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에 반하여, 연애중인 여성은 67.3%가 '결혼이 하고 싶다'고 답하였다. 이 비중은 연애중인 남성의 76.4%는 소폭 작은 크기이지만 연애를 하고 있다면 다수는 결혼을 하고 싶어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유행중인 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결혼의향의 변화는 '달라지지 않았다'가 68.5%로 다수이었고, '더 하기 싫어졌다'가 19.8%, '더 하고 싶어졌다'가 11.7%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애인이 없는 미혼이랑 비교하자면 부정적인 응답규모는 비슷한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소폭 커졌다. 흥미로운 부분은 연애중인 남성 응답자들이다. 부정적인 응답자(7.6%)보다 긍정적인 응답자(12.5%)가 더 많았다.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한다면 애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애를 시작한 32명을 제외한 274명이 응답하였다. 여성은 78.9%가 '변화없다', 7%는 '좋아졌다'고, 14.1%는 '나빠졌다'고 답하였다. 남성은 74.2%가 '변화없다', 10.6%는 '좋아졌다'고, 13.6%는 '나빠졌다'고 답하였다. 남녀 모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현재 연애 중인 상대방과 결혼생각을 갖고 있는 153명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결혼계획이 달라졌는지 물었을 때, '변화없다'는 65.4%, '앞당길려고 한다'는 7.2%, '미룰 생각이다'는 27.5%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컸다. 남녀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3/4는 애인과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고, 2/3은 결혼계획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달라진 경우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았다.

유형2에 해당하는 연애 중인 상황의 가변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와중에 애인과의 결별한 경우가 늘어났다면, 이들이 해당 유형에서 탈락함으로써 애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표 4〉 미혼이며 연애 중

(유형2, n=306명, %)

질문	응답보기	여	남	남녀 합계
결혼의향		100.0	100.0	100.0
	하고 싶지 않다	32.7	23.6	28.4
	하고 싶다	67.3	76.4	71.6
이전 대비 결혼의향 변화		100.0	100.0	100.0
	더 하기 싫어졌다	19.8	7.6	14.1
	달라지지 않았다	68.5	79.9	73.9
이전 대비 애인과의 관계 (코로나19 시기에 연애를 시작한 32명을 제외한 274명 응답)		100.0	100.0	100.0
	매우 나빠졌다	1.4	1.5	1.5
	약간 나빠졌다	12.7	13.6	13.1
변화없다		78.9	74.2	76.6
	약간 좋아졌다	4.9	5.3	5.1
	매우 좋아졌다	2.1	5.3	3.7
코로나19로 인한 결혼계획 변화 (결혼생각을 갖고 있는 153명 응 답)		100.0	100.0	100.0
	미룰 생각이다	27.2	27.8	27.5
	변화없다	64.2	66.7	65.4
앞당길려고 한다	8.6	5.6	7.2	

2-5. 부부생활에서의 변화

동거 중인 부부의 생활은 어떠한가? 먼저 혼인신고 없이 동거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첫 자녀 출산전에는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었다(여성의 83.4%, 남성의 81%). 그렇다면 이들 중 상당수는 동거를 연애생활과 법적 결혼생활 사이에 중간단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동거 부부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하여, 여성은 ‘변화없다’가 72.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매우 좋아졌다’가 11.1%, ‘약간 좋아졌다’가 2.8%였고, ‘약간 나빠졌다’가 동일하게 13.9%로 강한 긍정이 소폭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은 52.4%가 ‘변화없다’고 답하였

고, ‘매우 좋아졌다’가 9.5%, ‘약간 좋아졌다’가 33.3.%이었고, ‘약간 나빠졌다’는 4.8%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부관계는 더 좋아졌다고 나타났다. 특히 남성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향후 2년내 출산계획은 ‘변화없다’가 여성은 77.8%, 남성은 69.1%로 다수이었다. 긍정적인 방향인 ‘더 낳기로 계획을 바꿨다’는 응답은 여성이 2.8%, 남성은 14.3%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긍정적인 응답 규모가 컸다.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반하여 부정적인 방향인 ‘출산시기를 미루기로 했다’는 여성이 2.8%, 남성이 4.8%가 응답하였고, ‘덜 낳거나 포기하기로 했다’가 여성은 16.7%, 남성은 11.9%에 달했다. 여성에게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한 경우가 더 두드러졌다.

〈표 5〉 동거 중

질문	응답보기	(유형3, n=78명, %)		
		여	남	남녀 합계
첫자녀 출산전에는 결혼 의향		100.0	100.0	100.0
	전혀 없다	2.8	9.5	6.4
	없는 편이다	13.9	9.5	11.5
	약간 있다	41.7	50.0	46.2
	매우 있다	41.7	31.0	35.9
부부관계 만족도(1~9점)	평균값	6.75	7.12	6.95
이전 대비 부부관계 만족도		100.0	100.0	100.0
	매우 나빠졌다	0.0	0.0	0.0
	약간 나빠졌다	13.9	4.8	9.0
	변화없다	72.2	52.4	61.5
	약간 좋아졌다	2.8	33.3	19.2
	매우 좋아졌다	11.1	9.5	10.3
향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전혀 없다	27.8	19.1	23.1
	없는 편이다	25.0	38.1	32.1

질문	응답보기	여	남	남녀 합계
	대략적으로 있다	38.9	19.1	28.2
	확실히 있다	2.8	11.9	7.7
	생각해보지 않았다	5.6	11.9	9.0
이전 대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덜 낳거나 포기	16.7	11.9	14.1
	시기를 미루기로	2.8	4.8	3.9
	변화없음	77.8	69.1	73.1
	시기를 앞당기기로	0.0	0.0	0.0
	더 낳기로	2.8	14.3	9.0

기혼이며 아직 자녀를 갖기 전인 부부의 경우(유형4-1) 부부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하여, ‘변화없다’가 여성은 77.6%, 남성은 79.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매우 좋아졌다’는 여성이 2.8%, 남성은 7.1%이었다. ‘약간 좋아졌다’는 여성이 9.4%, 남성이 7.1%이었다, 이에 반하여 ‘약간 나빠졌다’는 여성이 9.4%, 남성은 4.1%이었다. “매우 나빠졌다”는 여성 0.9%, 남성 2.0%로 드물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부정적인 경우로 바뀐 경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뀐 경우가 더 많았고 특히 남성에게서 이러한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향후 2년내 출산계획은 ‘변화없다’가 여성은 79.4%, 남성은 84.7%로 다수를 차지했다. 긍정적인 방향인 ‘더 낳기로 계획을 바꿨다’는 응답은 여성이 없었고, 남성은 2%에 불과했다.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는 응답을 한 경우도 여성은 1.9%, 남성은 1%에 불과했다. 이에 반하여 부정적인 방향인 ‘출산시기를 미루기로 했다’는 여성이 7.5%, 남성이 8.2%가 응답하였고, ‘덜 낳거나 포기하기로 했다’가 여성은 11.2%, 남성은 4.1%이었다. 응답자의 4/5 정도는 출산계획에 변화를 갖지 않았지만, 변화한다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이 더 많았다.

〈표 6〉 기혼이며 자녀0명

(유형4-1, n=205명, %)

질문	응답보기	여	남	남녀 합계
부부관계 만족도(1~9점)	평균값	7.12	7.43	7.27
이전 대비 부부관계 만족도		100.0	100.0	100.0
	매우 나빠졌다	0.9	2.0	1.5
	약간 나빠졌다	9.4	4.1	6.8
	변화없다	77.6	79.6	78.5
	약간 좋아졌다	9.4	7.1	8.3
	매우 좋아졌다	2.8	7.1	4.9
향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전혀 없다	28.0	25.5	26.8
	없는 편이다	14.0	9.2	11.7
	대략적으로 있다	22.4	26.5	24.4
	확실히 있다	23.4	29.6	26.3
	생각해보지 않았다	3.7	4.1	3.9
	현재 임신중이다	8.4	5.1	6.8
이전 대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덜 낳거나 포기	11.2	4.1	7.8
	시기를 미루기로	7.5	8.2	7.8
	변화없음	79.4	84.7	82.0
	시기를 앞당기기로	1.9	1.0	1.5
	더 낳기로	0.0	2.0	0.1

기혼이며 자녀가 한명인 부부의 경우(유형4-2) 부부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하여, '변화없다'가 여성은 73.6%, 남성은 67.9%로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였다. '매우 좋아졌다'는 여성이 2.4%, 남성은 1.9%로 소수였다. '약간 좋아졌다'는 여성이 8.8%인데, 남성이 16.7%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다, '약간 나빠졌다'는 여성이 11.2%, 남성은 11.7%이었다. "매우 나빠졌다"는 여성 4%, 남성은 1.85%에 불과했다. 앞서 동거나 자녀가 없는 부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부정적인 경우로 바뀐 경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뀐 경우가 더 많았

고 특히 남성에게서 이러한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향후 2년내 출산계획은 '변화없다'가 여성은 84.8%, 남성은 81.5%로 다수를 차지했다. 긍정적인 방향인 '더 낳기로 계획을 바꿨다'는 응답은 여성이 3.2%, 남성이 4.3%이었다..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여성은 0%, 남성은 0.6%로 매우 소수였다. 이에 반하여 부정적인 방향인 '출산시기를 미루기로 했다'는 여성이 4%, 남성이 3.7%가 응답하였고, '덜 낳거나 포기하기로 했다'가 여성은 8%, 남성은 9.9%에 달했다. 자녀가 없는 부부와 비슷하게 응답자의 4/5 정도는 출산계획에 변화를 갖지 않았지만, 변화한다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이 더 많았다.

〈표 7〉 기혼이며 자녀1명

(유형4-2, n=287명, %)

질문	응답보기	여	남	남녀 합계
부부관계 만족도(1~9점)	평균값	6.10	6.47	6.31
이전 대비 부부관계 만족도	매우 나빠졌다	4.0	1.85	2.8
	약간 나빠졌다	11.2	11.7	11.5
	변화없다	73.6	67.9	70.4
	약간 좋아졌다	8.8	16.7	13.2
	매우 좋아졌다	2.4	1.9	2.1
	향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전혀 없다	68.8	46.3	56.1
	없는 편이다	12.8	24.1	19.2
	대략적으로 있다	12.8	14.8	13.9
	확실히 있다	3.2	3.7	3.5
	생각해보지 않았다	1.6	8.6	5.6
	현재 임신중이다	0.8	2.5	1.7
이전 대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덜 낳거나 포기	8.0	9.9	9.1
	시기를 미루기로	4.0	3.7	3.8
	변화없음	84.8	81.5	82.9
	시기를 앞당기기로	0.0	0.6	0.4
	더 낳기로	3.2	4.3	3.8

기혼이며 자녀가 들인 부부의 경우(유형4-3) 부부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하여, '변화없다'가 여성은 74.6%, 남성은 77.7%로 가장 흔했다. '매우 좋아졌다'는 여성이 2.5%, 남성은 2.4%로 소수였다. '약간 좋아졌다'는 여성이 11.2%인데, 남성이 10.2%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다, 이에 반하여 '약간 나빠졌다'는 여성이 8.6%, 남성은 7.8%이었다. "매우 나빠졌다"는 여성 3.1%, 남성은 1.9%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부정적인 경우로 바뀐 경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뀐 경우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더 많았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향후 2년내 출산계획은 '변화없다'가 여성은 96.5%, 남성은 94.7%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미 2명을 가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출산계획을 완료한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출산을 앞당기거나 늘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한 경우는 여성이 0.5%, 남성은 1.9%에 불과했다.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여성이 3.1%, 남성이 3.4%로 역시 소수에 불과했다.

〈표 8〉 기혼이며 자녀2명

(유형4-3, n=403명, %)

질문	응답보기	여	남	남녀 합계
부부관계 만족도(1~9점)	평균값	5.95	6.41	6.19
이전 대비 부부관계 만족도	매우 나빠졌다	3.1	1.9	2.5
	약간 나빠졌다	8.6	7.8	8.2
	변화없다	74.6	77.7	76.2
	약간 좋아졌다	11.2	10.2	10.7
	매우 좋아졌다	2.5	2.4	2.5
	향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향후 2년내 출산 계획	전혀 없다	87.8	78.2	82.9
	없는 편이다	8.6	13.1	10.9
	대략적으로 있다	1.0	3.9	2.5
	확실히 있다	0.5	1.0	0.7
	생각해보지 않았다	1.5	3.4	2.5
	현재 임신중이다	0.5	0.5	0.5
이전 대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덜 낳거나 포기	3.1	2.9	3.0
	시기를 미루기로	0.0	0.5	0.3
	변화없음	96.5	94.7	95.5
	시기를 앞당기기로	0.0	0.0	0.0
	더 낳기로	0.5	1.9	1.2

기혼이며 자녀가 셋 이상인 부부의 경우(유형4-4) 부부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하여, ‘변화없다’가 여성은 56.8%, 남성은 77.8%이었다. ‘매우 좋아졌다’는 여성이 10.8%, 남성은 사례가 없었다. ‘약간 좋아졌다’는 여성이 8.1%, 남성은 18.5%이었다. 이에 반하여 ‘약간 나빠졌다’는 여성이 16.2%, 남성은 3.7%이었다. “매우 나빠졌다”는 여성 8.1%, 남성은 사례가 없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향후 2년내 출산계획은 ‘변화없다’가 여성은 91.9%, 남성은 92.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앞서 자녀 2명을 가진 부부와 마찬가지로 출산계획을 완료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산을

앞당기거나 늘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한 여성은 사례가 없었고, 남성은 3.7%에 불과했다.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여성이 8.1%, 남성이 3.7%로 역시 소수에 불과했다.

〈표 9〉 기혼이며 자녀3명 이상

(유형4-4, n=64명, %)

질문	응답보기	여	남	남녀 합계
부부관계 만족도(1~9점)	평균값	5.78	6.89	6.25
이전 대비 부부관계 만족도		100.0	100.0	100.0
	매우 나빠졌다	8.1	0.0	4.7
	약간 나빠졌다	16.2	3.7	10.9
	변화없다	56.8	77.8	65.6
	약간 좋아졌다	8.1	18.5	12.5
	매우 좋아졌다	10.8	0.0	6.3
향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전혀 없다	81.1	92.6	85.9
	없는 편이다	13.5	3.7	9.4
	대략적으로 있다	0.0	3.7	1.6
	확실히 있다	0.0	0.0	0.0
	생각해보지 않았다	5.4	0.0	3.1
	현재 임신중이다	0.0	0.0	0.0
이전 대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덜 낳거나 포기	5.4	3.7	4.7
	시기를 미루기로	2.7	0.0	1.6
	변화없음	91.9	92.6	92.2
	시기를 앞당기기로	0.0	0.0	0.0
	더 낳기로	0.0	3.7	1.6

3.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혼, 출산의 변화 추정

3-1. 추정 방법론

여기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및 출산의향의 하락이 실제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출산 의향의 하락(신윤정 외b 2020)과 결혼 건수의 하락(통계청 2021)은 결혼의 감소와 출산율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는 결혼 및 출산 이행율의 하락이 생애과정을 통해서 누적되는 효과에 주목하였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기준이 되는 결혼 및 출산 스케줄 (baseline marriage and fertility schedule)을 구성하고, <코로나 19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결혼 및 출산 의향의 변화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및 출산의 변화를 수치화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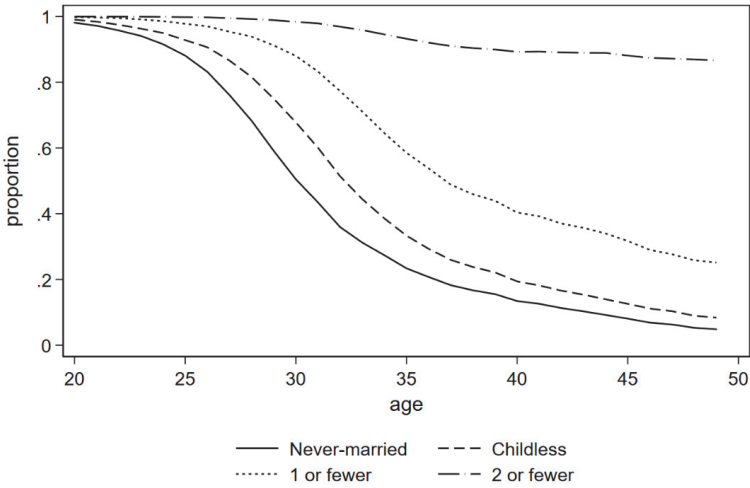
첫째, 이 연구는 평균초혼연령(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 SMAM) 접근 방식을 활용하였다. SMAM은 연령별 미혼자비율의 변화를 활용해서 평균초혼연령을 추정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론은 초혼연령 뿐만 아니라 출산순위별 평균출산 연령을 추정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원래 SMAM은 연령별 초혼이행확률에 대한 정보가 없는 조건에서 초혼 이행의 우측절단을 고려하면서 평균초혼연령을 추정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SMAM 방식에 따른 추정치는 특정 시점이나 특정 출생코호트의 경험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생산 연령(15-49세)인 코호트들의 과거 경험에 기반하는 기간평균(cross-sectional average)의 속성을 지닌다 (Guillot 2003; Kye 2012; Kye 2015). 따라서,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이와 같은 측정치들의 특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SMAM은 50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하지 않고 추정하는데(권태환/김두섭 2002),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과 더불어 초혼 혹은 특정 순위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추정치(생명표 방식) 또한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연령별 미혼자비율 및 출생아수 분포를 활용해서 SMAM 방식의 초혼연령 및 출생순위별 평균출산연령을 추정한다. 이 추정치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및 출산의향의 변화가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치(baseline)로 활용하였다.

둘째, <코로나 19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결혼 및 출산 의향의 변화와 위의 분석결과를 결합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및 출산 시기 변화를 추정하였다.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신윤정 외 2020a), 2년 이내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30.0%가 출산한 반면, 2년 이후에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21.6%,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1.1%만이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계획이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결혼 및 출산의향 및 계획의 변화가 실제 결혼이행이나 출산이행되는 과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체 미혼자 집단에서 결혼의향이 10%p 하락했을 때, 실제 결혼율이 10%p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향이나 계획이 100%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상황에서 결혼율은 10%보다 작은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몇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추정치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및 출산시기의 변화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및 출산의향 변

화가 실제 결혼 및 출산연령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3] 연령별 혼인상태 및 출생아수 분포



출처: 2015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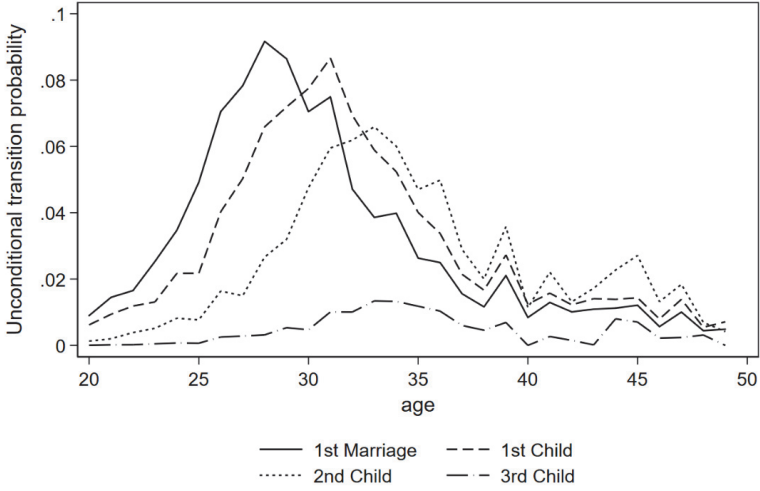
3-2.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준 분포 및 이행확률 분석결과

〈그림 3〉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추정된 20-49세 여성의 미혼자 비율 및 출생아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49세까지 미혼으로 남아 있는 여성의 비율은 4.9%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혼자와 결혼 후 무자녀인 여성을 합한 비율은 8.4%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자와 자녀수가 1명 이하인 여성의 비율은 25.1%, 2자녀 이하인 여성의 비율은 86.6%로 나타나 자녀수가 2명인 여성의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에 나타난 결혼 및 출산 패턴을 따르는 가상적인 코호트가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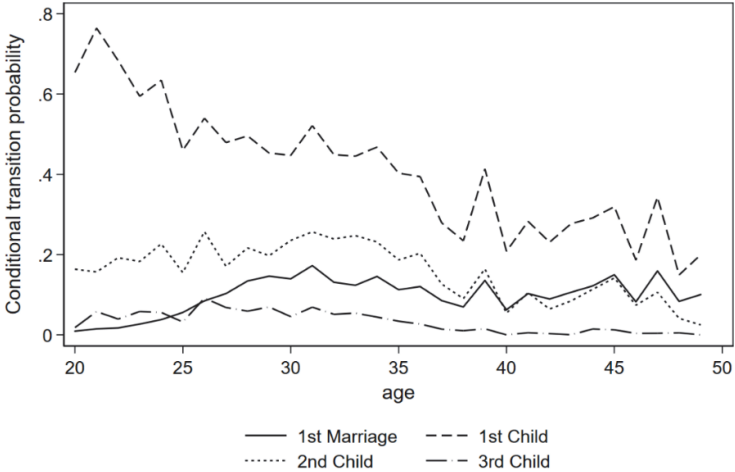
재한다면 그 코호트의 연령별 결혼 이행확률 및 출산순위별 출산이행 확률은 <그림 4>와 같을 것이다. <그림 4> 상단에 제시된 그래프는 비조건적 이행확률을 보여주는데, 앞선 이행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연령에 해당 이행을 경험할 확률을 보여준다. 하단에 제시된 그래프는 직전 이행을 경험한 여성들 중 해당 이행을 경험할 확률을 보여준다.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된 결과는 2015년 현재 한국 여성들의 혼인 상태 및 출생아수 분포에 기반한 것이며 특정한 시기나 출생 코호트의 결혼 및 출산 스케줄을 보여주지 않는다. SMAM 방식 추정은 이러한 상태 분포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결혼 및 출산이행 패턴을 따르는 가상적인 코호트의 평균 결혼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연령을 추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된 자료는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및 출산이행률의 하락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4] 결혼 이행 및 출산 이행 확률

A. 비조건적 이행 확률



B. 조건적 이행 확률



3-3.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표 10〉은 생명표 방식과 SMAM 방식으로 추정한 평균 초혼연령, 첫째아 및 둘째아 평균 출산연령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표 방식이 SMAM 방식보다 높은 평균연령 추정치를 산출하는데, 이는 SMAM 방식은 49세 까지 해당 이행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을 분석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표 10〉은 이와 더불어 조건부 이행 확률이 모든 연령에서 5-20% 감소했을 때의 추정치를 또한 제공하고 있다. 생명표 방식을 따르면 초혼, 첫째 출산, 둘째 출산으로의 조건부 이행확률이 5-20% 감소하면, 평균 초혼연령은 0.3~1.6세, 첫째 출산의 평균연령은 0.6~2.2세, 둘째 출산 연령은 0.9~2.9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MAM 방식의 추정에서는 증가 폭이 이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는 각 이행율의 하락에 따라 결혼 및 출산이행을 경험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 평균 초혼연령 및 출산순위별 평균 출산연령

	생명표 방식			SMAM 방식		
	초혼	첫째아	둘째아	초혼	첫째아	둘째아
원자료	31.8	34.0	38.9	30.9	32.6	35.2
5% 지연	32.1	34.6	39.8	31.2	33.1	36.1
10% 지연	32.5	35.1	40.4	31.4	33.4	36.4
15% 지연	32.9	35.7	41.1	31.6	33.7	36.6
20% 지연	33.4	36.2	41.7	31.8	33.9	36.9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표 11〉은 출산 완결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49세 여성의 혼인상태 및 출생아수 분포를 보여준다. 이행율의 하락 정도에 따라 모든 상태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행확률이 낮아짐에 따라 해

당 이행을 경험하는 여성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표 11〉 49세 여성의 상태 분포 (%)

	원자료	5% 지연	10% 지연	15% 지연	20% 지연
미혼	4.9	5.7	6.7	7.8	9.1
미혼+무자녀	8.4	9.6	11.2	13.1	15.2
미혼+1 자녀 이하	25.1	27.0	30.3	33.9	37.7
미혼+2 자녀 이하	86.6	87.3	88.5	89.7	90.8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앞선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 19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는 결혼계획과 출산계획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미혼자들 중 결혼의사가 부정적으로 바뀐 여성이 긍정적으로 바뀐 여성보다 12.5%p 더 많았으며, 무자녀 여성 중 자녀출산 계획이 부정적으로 바뀐 여성이 긍정적으로 여성보다 15.9%p 더 많았고, 한 자녀 여성에서의 변화는 8.8%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적으로 결혼의향 및 출산순위별 출산계획이 10%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 및 출산계획의 이러한 하락이 실제 출산에 완전히 반영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출산이행 확률을 10% 정도 하락시킨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표 10〉과 〈표 11〉에 제시한 10% 하락 시나리오의 추정이 가장 그럴듯한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생명표 방식을 따르면, 초혼 연령은 0.7세, 첫째아 출산 연령은 1.1세, 둘째아 출산 연령은 0.5세 정도 상승한다고 할 수 있으며, SMAM 방식을 활용하면 그 수치는 다소 작다. 또한 49세 현재 미혼율은 1.8%p, 무자녀자 비율은 2.8%p, 한 자녀 이하 여성의 비율은 4.2%p, 두 자녀 이하 여성의 비율은 1.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결혼의향이나 출산의향의 하락이 실제 혼인력과 출산력의 하락으로 완전

히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다소 작은 양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기준이 되는 결혼 및 출산 스케줄은 2015년의 혼인상태 및 출생아 수 분포로부터 추출했기 때문에 <표 10>과 <표 11>에 제시된 결과가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및 출산 이행률의 하락 정도를 정확히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이 분석은 코로나19가 초래하고 있는 결혼 및 출산계획 변화를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코로나19가 연애, 결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생애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녀가 없거나하나뿐인 부부에 있어 향후 2년내 출산계획은 ‘변화없음’이 가장 응답이 많았고,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또한 일시적으로 출산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보다는 아예 출산자녀수를 조정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였다.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계획을 종료한 경우가 많아서인지, 코로나19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코로나19 와중에도 부부관계 만족도는 소폭이지만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답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다. 코로나19라는 외부에서 주어진 위기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더 단단히 결속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연애중인 경우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관계가 나빠진 경우가 좋아진 경우보다더 많았다. 연애중인 커플들은 결혼계획을 앞당기기보다는 미루려는 움직임이 더 많았다. 결혼 의향은 남녀가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여성은 ‘더 하고 싶어졌다’보다 ‘더 하기 싫어졌다’

가 많았고, 남성은 그 반대이었다.

배우자가 있거나, 연애중인 응답자들에게서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현 상황과 그 이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흔한 응답은 ‘변화없음’이었다. 비록 긍정과 부정 응답을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방향성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다수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못한 싱글들은 새로운 만남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사시점에 애인이 없는 싱글들 중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년간 이성과 소개받거나 새로운 만남을 경험한 비중은 대략 20%에 불과했다. 이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전에는 몇%나 이성과의 교체를 경험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성과의 만남의 빈도변화를 묻는 응답을 보면 ‘변화없다’가 절반, ‘줄어들었다’가 나머지 절반이었다. 만남 결혼 출산이라는 이행 관문의 첫번째 단계에서 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코로나 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 문제는 이후 생애과정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행과정상의 문제가 결혼과 출산에 악영향을 줄 것임을 보여준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력의 하락이 추정되었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 방법은 기간 평균(cross-sectional average)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결혼 및 출산의 하락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결혼 및 출산의향이 10% 정도 하락했을 때 예상되는 혼인력 및 출산력 하락 정도를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신윤정, 이명진, 전광희, 문승현 (2020a). 출산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
- 신윤정, 임지영, 전광희, 계봉오 (2020b). 코로나19 이후 인구 변동 추이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
- 최슬기 (2020).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 통계청 (2021). 인구동향조사.
- Guillot, M. (2003) "The Cross-Sectional Average Length of Life (CAF): A Cross-Sectional Mortality Measure that Reflects the Experience of Cohorts" *Population Studies* 57(1): 41-
- Kye, Bongoh. 2015. "Cross-sectional average fertility (CAF): Properties and comparison with other measures". *The Journal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38(3): 113-139.
- Kye, Bongoh. 2012. "Cohort effects or period effects? Fertility decline in South Korea in the twentieth centur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1(3): 387-415.

제2절 코로나19 사망률 국제 비교: 연령별 인구 비중· 확진율·치명률 분해 분석⁵⁾

1. 서론

2020년 1월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2021년 4월 18일 현재 하루 동안 전 세계적으로 765,48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4천 1백 4십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21년 4월 18일 현재 3백 2만명에 달하고 있다(Our World in Data, 2021). 고전적인 역학 변천이 완료되었다고 믿었던 이후에 등장한 신종 감염병의 확산은 전 세계 보건 의료 체계에 위협을 주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초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인구 변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4월 18일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801명이다. 인구 백만명 당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5.13명으로 유럽과 미주 국가와 비교하여 전체 사망자 수는 적은 규모이다(Our World in Data, 2021). 하지만 코로나19 사망 위험이 고령자 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신종 감염병 확산과 더불어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 고령화 진행과 함께 국내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가 국내 사망에 갖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

5) 발표자 : 신경아 교수 (한림대학교)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유럽 국가의 인구학계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코로나19 사망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기대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Marois, Muttarak and Scherbov, 2020; Trias-Llimós, Riffe and Bilal, 202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코로나19 사망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Drefahl, Wallace, Mussino, Aradhya, Kolk, Brandén, Malmberg, and Andersson, 2020) 등을 들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특히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로는 인구 고령화 정도가 코로나19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Dowd, Andriano, Brazel et. al, 2020; Dudel, Riffe, Acosta et al., 2020; Medford and Trias-Limós(2020)). 선행 연구들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코로나19 사망률과 코로나19 치명률을 보이는 이유가 보건의료체계와 국민들의 건강 수준 등 보건학적 이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접촉 빈도에 영향을 주는 가족 혹은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가의 연령별 인구 구조 혹은 확진자의 연령별 인구 구조 등 인구학적인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 현황을 코로나19 사망자 수, 초과 사망, 치명률 등 주요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고 국제적인 비교를 수행하여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연령별 인구 구조가 코로나19 사망에 갖는 함의점을 살펴 볼 수 있는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전통적인 인구학적 연구 방법론인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내 코로나19 사망률이 주요 유럽 국가의 코로나19 사망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인구 고령화 수준 때문인지,

확진율의 차이 때문이지 혹은 치명률의 차이인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고령 사회 진전과 더불어 도래한 신종 감염병 시대가 주는 정책적 함의와 후속적으로 필요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코로나19 사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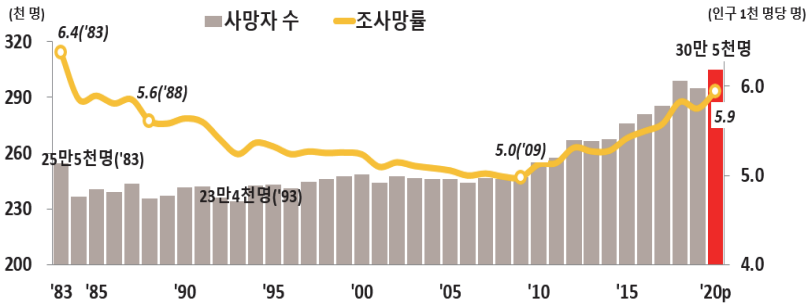
2020년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는 30만 5천 1백명이며, 인구 천명 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2020년 5.9명으로 전년 대비 약 3.4% 증가하였다(통계청 2021a). 통계청 「2020년 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사망률은 1983년 6.4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6~2009년까지 약 5.0명을 유지하였으나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2010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총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코로나19가 국내 사망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21년 4월 18일 현재 인구 백만명당 코로나19 누적확진자수는 한국이 2,236명으로 미국 95,679명, 영국 64,860명, 이탈리아 64,009명, 스웨덴 89,129명, 스페인 72,876명, 일본 4,232명으로 유럽 국가와 일본과 비교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적은 편이다(Our World in Data, 2021).

2021년 4월 18일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사망자수는 1,801명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초기인 2020년 2월 말부터 4월까지 약 250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후 8월말까지 약 300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2월 초까지 약 500명 수준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여 2021년 1월 초에 1,000명 수준을 넘어섰으며 2월 이후 급격한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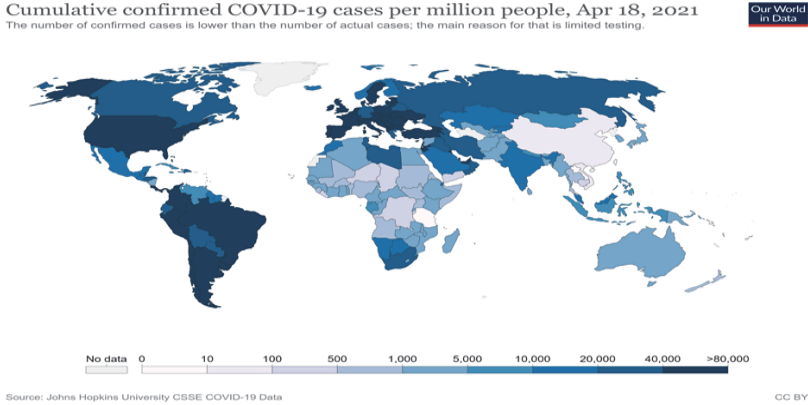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Our World in Data, 2021).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2021년 4월 18일 현재 인구 백만명당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가 35.13명으로 미국 1,713.63명, 영국 1,878.41명, 이탈리아 1,933.9명, 스웨덴 1,365.25명, 스페인 1,646.48명, 일본 75.98명 보다 낮은 수준이다 (Our World in Data, 2021).

[그림 1] 국내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추이 (1983~202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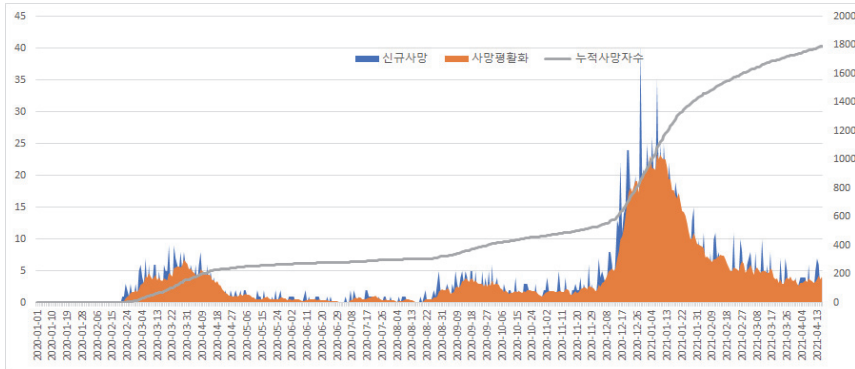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a)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

[그림 2] 인구 백만명 당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2021년 4월 18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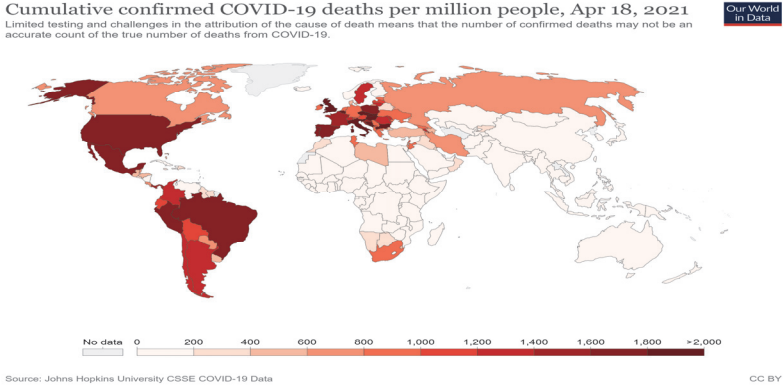
자료: Our World in Data (2021)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country/south-korea?country=~KOR>에
 서 2021년 4월 19일 인출

[그림 3]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사망자 수, 평활화신규사망자수, 누적사망자 수



자료: Our World in Data (2021)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country/south-korea?country=~KOR>에
 서 2021년 4월 19일 인출

[그림 4] 인구 백만명 당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 (2021년 4월 18일 현재)



자료: Our World in Data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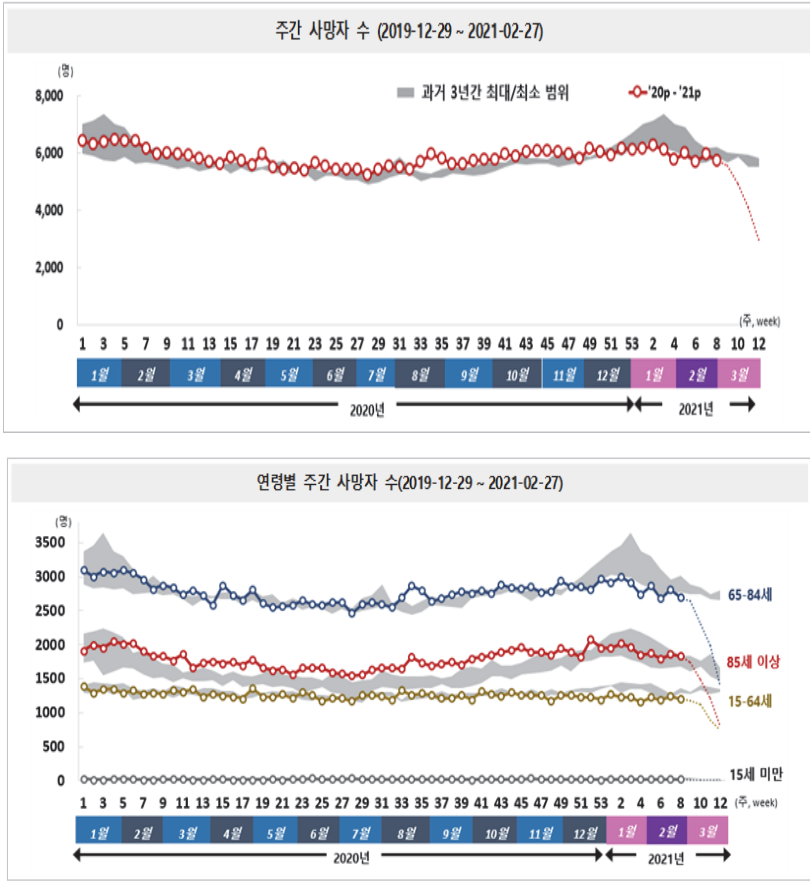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country/south-korea?country=~KOR>에서 2021년 4월 19일 인출

2020년도에 증가한 사망자 수가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아 증가한 것인지, 영향을 받았다면 그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코로나19 사망자 수 외에,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에 발생한 사망이 코로나19가 없었던 과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된 사망자 수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초과사망(excess mortality)은 위기 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이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기대되는 사망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더 높게 혹은 낮게 나타나는가를 보여 주는 측정치이다 (Checchi and Roberts, 2005). 통계청(2021b)은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수는 검사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과사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통계청(2021b)은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하는 초과사망 유형을 직접 원인, 간접 원인, 비관련으로 구분하

고, 직접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확진 검사 미 실시 사망, 코로나19 합병증 또는 후유증 사망, 간접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는 의료 이용 부족 및 격리로 인한 외부요인, 비관련성 사망에는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이상 기후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통계청(2021b)은 초과사망을 일정 기간에 통상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사망으로 정의하고 과거 3년 기간 동안의 최대 사망자 수를 넘는 경우를 초과 사망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2021년 2월말까지 지속적인 초과 사망이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부 주간에서 과거 3년 동안의 최대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과거와 최근 사망자 수를 비교할 때 신고시차,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이상 기후에 의한 사망 증가 등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⁶⁾.

6) 통계청(2021b)은 2019년 기준 사망 발생일 2개월 후 집계 시 확정 사망자 수의 약 98%를 포함하는 반면, 사망 발생일 1개월 후 집계 시 아직 사망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완전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신고 시차), 2018년 1~2월 한파, 2018년 7~8월 폭염, 2020년 2월 초 일시적인 한파 등이 초과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이상 기후), 2019년 사망자 수가 2009년 대비 19.5%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 증가하는 추세(고령화)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림 5] 통계청(2021)의 코로나19 시기 초과 사망 분석 결과 (2021년 4월 12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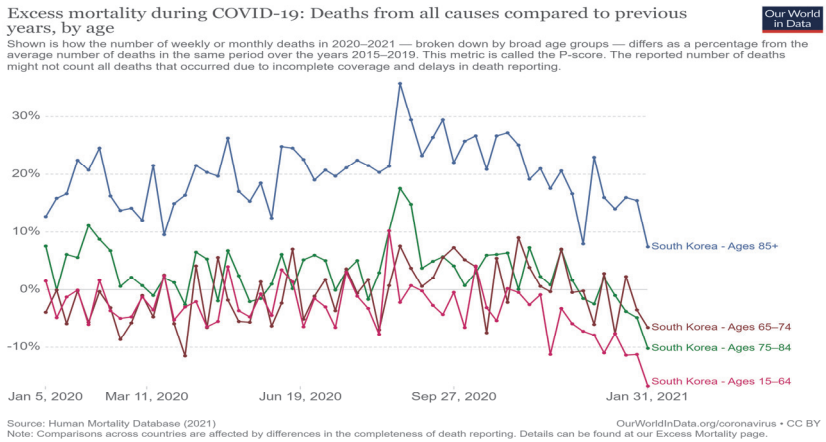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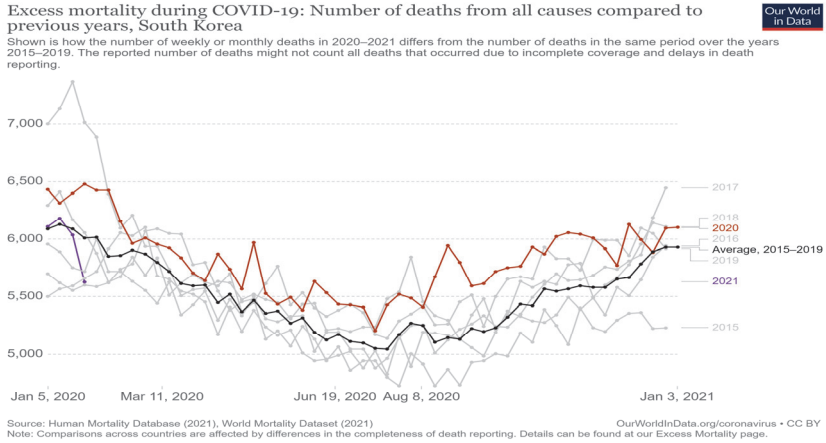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 코로나19 시기 초과 사망 분석 (2021년 4월 12일 기준)
https://kosis.kr/covid/statistics_excessdeath.do 에서 2021년 4월 20일 인출

한편, Our World in Data(2021)는 한 주 간 발생한 사망자 수에서 과거 5년 기간 (2015~2019) 동안 같은 주에 발생한 사망자 수의 평균을 뺀 값을 초과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5년 간의 평균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백분

비를 p-score 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1월 5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발생한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는 거의 모든 구간에서 2015~2019년의 평균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score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15-64세, 65-74세, 75-84세 연령 집단들은 -10%와 10% 구간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85세 고령자 집단들은 거의 모든 기간에서 10%가 넘는 초과사망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초과사망은 전체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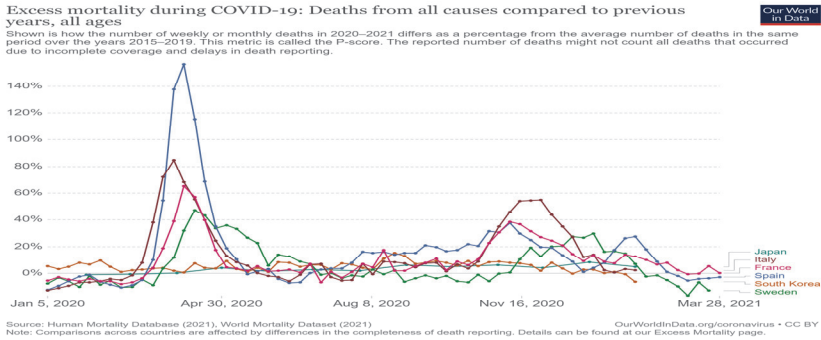
[그림 6] Our World in Data(2021)의 한국 초과사망 분석 결과



자료: Our World in Data (2021)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country/south-korea?country=~KOR>에서 2021년 4월 19일 인출

[그림 7] Our World in Data(2021)의 초과사망 국제 비교 분석 결과



자료: Our World in Dat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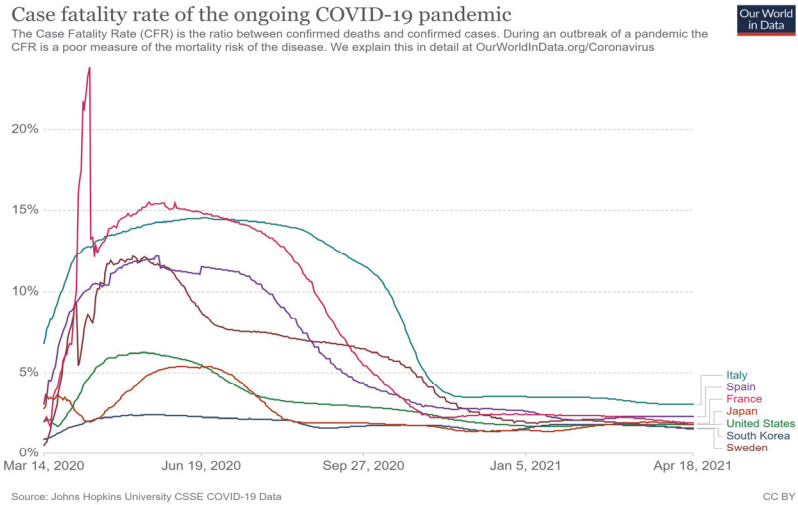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country/south-korea?country=~KOR>에서 2021년 4월 19일 인출

치명률(Case Fatality Rate: CFR)은 코로나19로 사망하였다고 보고된 사람의 숫자를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고 보고된 사람의 숫자로 나누는 수치이다. 따라서 치명률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망할 위험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엄밀하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코로나19로 감염된 사람의 숫자로 나누는 것이 보다 정확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 위험 정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19로 감염된 사람의 정확한 숫자를 알기가 어렵고, 보고되지 않은 코로나19 사망 혹은 확진되지 않은 채 사망한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명률이 코로나19에 따른 사망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치명률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 정도를 알려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은 2020년 5월 25일에 2.40%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18일 현재 1.57%이다. 유럽 국가의 치명률은 2020년 9월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21년 4월 18일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명률은 2~3%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 평균 치명률은 2.15%이다. 보다 완전한 치명률 수치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증식된 후에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은 사스(SARS-CoV)의 10%(Venkatesh and Memish, 2004; Munster, Koopmans, van Doremalen, van Riel, de Wit, 2020), 메르스(MERS-CoV)의 34%(Munster et al. 2020), 에볼라 바이러스의 40%(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Shultz, Espinel, Espinola and Reckemmer, 2016)보다 낮으며, 미국의 계절 독감으로 인한 치명률 0.1~0.2%(CDC, 2018)보다는 높다.

[그림 8] 코로나19 치명률 추이의 국제 비교 (2020년 3월 14일~4월 18일)



자료: Our World in Data (2021)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country/south-korea?country=~KOR>
 에서 2021년 4월 19일 인출

3. 선행 연구 결과⁷⁾

본 절에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함의를 줄 수 있는 코로나19 사망 관련 외국의 주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고령자 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인구 고령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고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국내 사망자 수는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다. 실로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것은 보건의료 체계나 사회적인 접촉 등 인구 외적인 요인 외에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심화되어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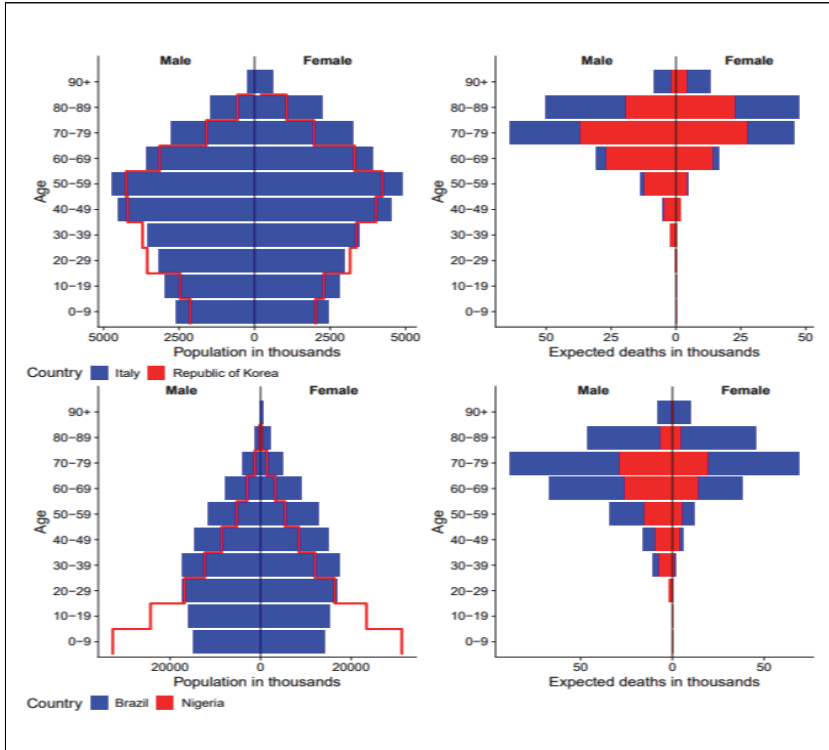
이러한 이슈에 대해 인구학 분야의 선행 연구들은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 사망이 인구 고령화 수준 때문인지, 혹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의 질을 대변할 수 있는 치명률의 차이 때문인지, 혹은 사회적 접촉 수준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확진율의 차이 때문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구학의 전통적인 분석 방법론인 분해 혹은 표준화 방법론은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적인 몇 가지 선행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Dowd와 동료들(2020)은 코로나19 사망률이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국가 간 코로나19 사망률 차이가 각 국가의 고령화 수준에 기인한 바가 클 것으로 보았다. 코로나19 감염율을 10%, 그리고 성별 및 연령별 치명률을 이탈리아 수준으로 고정한 후 총 인구 규모가 유사한 이탈리아와 한국, 브라질과 나이지리아 각각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는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고령화가 한국보다 심화된 이탈리아에서 총 사망자수는

7) 본 절의 주요 내용은 신윤정, 임지영, 전광희, 계봉오 (2020)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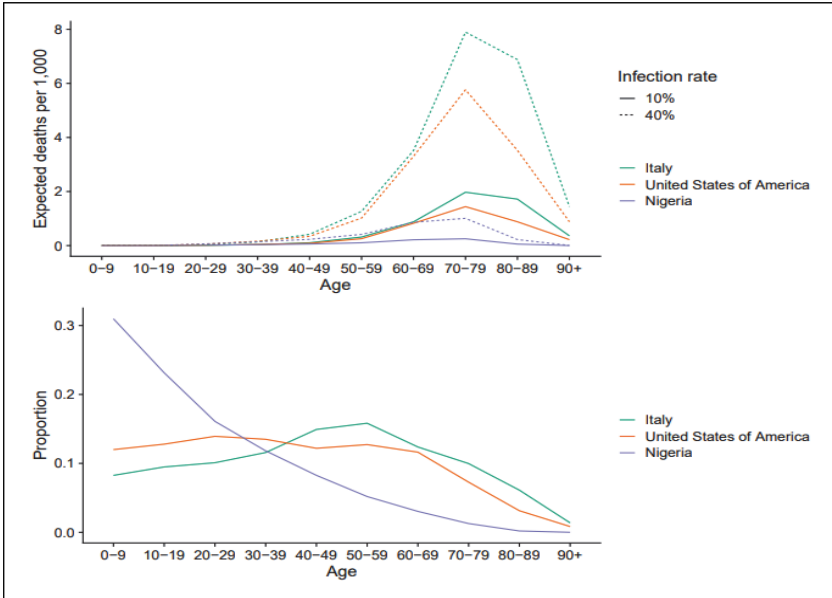
302,530명으로 추계된 반면에, 인구 고령화가 이탈리아보다 덜 심화된 한국에서 총 사망자 수는 이보다 적은 177,822명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브라질이 2%, 나이지리아가 0.2%로 브라질이 나이지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국가이다. 분석 결과, 브라질의 총 사망자 수는 452,694명으로 나타난 반면에, 나이지리아는 142,056명으로 더 적은 수준을 보였다. 감염율을 4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총 사망자 수는 인구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Dowd와 동료들(2020)은 코로나19 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연령 구조, 확진자의 연령 분포, 세대 간 접촉 빈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바가 크다고 보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인구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고령화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하여 고령층 고위험 인구 집단의 세대 간 접촉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초기에 확산될 때 주로 젊은 연령층이 많이 감염되었으나, 확산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세대 간 접촉 빈도가 높은 국가에서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상승하였고 결과적으로 높은 사망률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그림 9] 연령별 인구 구조와 기대 사망: 이탈리아·한국·브라질·나이지리아



주: 1. 왼쪽은 각 국가의 연령별 인구 구조, 오른쪽은 기대 사망자 수
 2. 감염률은 10%, 성별·연령별 치명률은 이탈리아 수준으로 가정함
 자료: Dowd et. al. (2020). Demographic science aids in understanding the spread and fatality rates of COVID-19, Fig1, p.9697, 신윤정 외 (2020) 157p. 에서 재인용.

[그림 10] 연령별 인구 구조와 기대 사망: 이탈리아·미국·나이지리아



주: 1. 상단 그래프는 인구 천 명당 기대 사망자 수, 하단 그래프는 각 국가의 연령 집단별 인구 비중
 2. 상단 그래프에서 실선은 감염률 10%, 점선은 감염률 40%, 성별·연령별 치명률은 이탈리아 수준으로 가정함

자료: Dowd et. al. (2020). Demographic science aids in understanding the spread and fatality rates of COVID-19. Fig. 2. p.9698, 신윤정 외 (2020) 157p. 에서 재인용.

Dudel, Riffe, Acosta와 동료들(2020)은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전형적인 로그 곡선을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코로나19 사망자 수 증가는 국가마다 전형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치명률 역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코로나19 사망에서 연령별 인구 구조가 주요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서로 다른 치명률을 보이는 이유는 확진자의 연령별 구조 때문이라고 보았다. 연구자들은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치명률이 국가마다 서로 다른 확진자의 연령별 구조 때문인지 혹은 연령별 치명률이 국가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중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미국(뉴욕시)로 하고 분석 기간은 2020년 4월 22일 (중국은 2020년 2월 11일)로 하였다.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확진자의 연령별 구조 혹은 연령별 치명률 중 어느 요인이 한국보다 높은 치명률을 가져왔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국가들은 한국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치명률 차이에 확진자의 연령별 구조의 차이가 기여하는 비중이 연령별 치명률 차이가 기여하는 비중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확진자의 연령별 구조가 분석 대상 국가들이 한국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국가의 연령별 인구 구조가 국가 간의 치명률 차이를 가져 온 주요 동력은 아니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확진자의 연령 구조는 전체 인구의 연령 구조를 반드시 따라 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 80세 인구 비중은 이탈리아 7%, 독일 6.5%로 유사하지만 80세 이상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탈리아가 24%, 독일이 11%로 차이가 난다. 연구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연령별 구조가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코로나19 검진 체계, 세대 간 접촉 빈도 등 감염 경로, 연령별 합병증 발병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포화 상태 등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의 코로나19 데이터의 질 (확진 건수 보고의 신속성 및 정확도, 확진 건수의 정의) 등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 단계도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Medford and Trias-Limós(2020)는 전체 인구의 연령 구조의 차이가 코로나19로 인한 연령별 사망자 비중을 얼마만큼 설명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으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각 국가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진단 건수자료는 Riffe, Acosta, Aburto, Alburez-Gutierrez,

Altová, Basellini et al. (2020)이 구축한 「COVID-19 Cases and Deaths by Age Database(COVerAge-DB)」를 이용하였으며, 위험에 노출된 인구 수 자료는 Human Mortality Database를 이용하였다. 직접 표준화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 국가가 이탈리아의 연령 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령별 사망자 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제 사망자와 이탈리아의 연령 구조를 가정한 사망자 모두에서 각 국가의 사망자 연령 분포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망자의 연령별 비중이 국가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이탈리아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가정하고 난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인구의 연령별 구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연령별 사망자 비중을 설명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을 국가별로 다르게 정의하거나, 검진 체계가 다르고, 감염 경로가 서로 다른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국가별 코로나19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는 전체 인구의 연령별 구조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 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달려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 국가별로 서로 다른 코로나19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4. 연구 방법 및 기술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된 대표적인 유럽 국가인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률 차이가 연령별 인구구성비 차이에 따른 것인지, 연령별 치명률 차이에 따른 것인지, 연령별 확진율 차이에 따른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 선행 연구 고찰에서 살펴본 Medford and Trias-Limós(2020)가 사용한 COVID-19 Cases and Deaths by Age Database(COVerAge-DB) 자료 중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COVerAge-DB 개발자인 Riffe et al.(2020)은 각 국가의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 수를 연령별 및 성별로 분석한 가장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의 2021년 4월 초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 자료, 그리고 프랑스의 2021년 3월 초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유럽 국가의 인구 비중 자료는 Medford and Trias-Limós(2020)가 분석에서 활용한 Human Mortality Database(2021)의 “사망위험노출인구(Exposure to Risk)”의 가장 최근 연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2020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는 Das Gupta(1993)의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한 국가의 코로나19 사망률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망률 =

$$\sum_{i=1}^{21} \text{연령별 코로나19 치명률}_i \times \text{연령별 코로나19 확진율}_i \times \text{연령별인구비중}_i$$

$i = 1$ (0 ~ 4세), 2 (5 ~ 9세), ..., 21 (100세 이상)

이 수식에 따라 국가1과 국가2의 사망률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코로나19 사망률¹

$$= \sum_{i=1}^{21} \text{연령별 코로나19 치명률}_i^1 \times \text{연령별 코로나19 확진율}_i^1 \times \text{연령별 인구비중}_i^1$$

코로나19 사망률²

$$= \sum_{i=1}^{21} \text{연령별 코로나19 치명률}_i^2 \times \text{연령별 코로나19 확진율}_i^2 \times \text{연령별 인구비중}_i^2$$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 1과 국가 2의 코로나19 사망률 차이는 연령별 코로나19 치명률 효과, 연령별 코로나19 확진율 효과, 연령별 인구비중의 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망률² - 코로나19 사망률¹

= 연령별 코로나19 치명률 효과 +
연령별 코로나19 확진율 효과 + 연령별 인구비중 효과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코로나19 사망률은 0.034명으로 프랑스 1.001명, 스웨덴 1.325명, 스페인 1.624명, 이탈리아의 1.859명보다 낮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5.8%로 프랑스 20.2%, 스웨덴 20.0%, 스페인 19.3%, 이탈리아 22.5%이며, 8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7%, 프랑스 6.2%, 스웨덴 5.2%, 스페인 6.2%, 이탈리아 6.9%이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한국보다 인구 고령화 정도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1,000명당 확진자 수는 한국이 2.134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반해, 프랑스 60.241명, 스웨덴 83.395명, 스페인 71.164명, 이탈리아 61.884명으로 유럽 국가의 확진자 수가 매우 높다.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치명률은 한국 0.016명, 프랑스 0.017명, 스웨덴 0.016명, 스페인 0.023명, 이탈리아 0.030명의

로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프랑스와 스웨덴과 유사한 수준이며, 스페인과 이탈리아 보다는 약간 낮다. 한편, 80세 이상 인구 집단만을 대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고령층의 치명률이 비교 대상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볼 때 분모에 해당하는 확진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8).

〈표 1〉 한국·프랑스·스웨덴·스페인·이탈리아의 연령별 인구 비중, 확진율, 치명률, 사망률 비교

국가명	연령	인구비중	확진율 (1,000명당)	치명률	사망률 (1,000명당)
한국 (2021. 4. 11)	0~4세	3.4%	1.104	0.000	0.034
	5~9세	4.5%	1.192	0.000	
	10~14세	4.5%	1.359	0.000	
	15~19세	5.0%	1.739	0.000	
	20~24세	6.4%	2.286	0.000	
	25~29세	6.8%	2.538	0.000	
	30~34세	6.1%	2.318	0.000	
	35~39세	7.4%	1.968	0.001	
	40~44세	7.5%	1.888	0.001	
	45~49세	8.5%	2.003	0.001	
	50~54세	8.4%	2.207	0.002	
	55~59세	8.2%	2.528	0.004	
	60~64세	7.4%	2.677	0.008	
	65~69세	5.1%	2.574	0.018	
70~74세	3.9%	2.286	0.043		
75~79세	3.1%	2.165	0.088		

8) 예를 들어 95~99세 코로나19 치명률은 프랑스가 0.126이고 우리나라가 0.424로 우리나라가 더 높다. 이는 프랑스의 경우 95~99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5,959명,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4,52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5~99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12명, 사망자 수는 90명으로 확진자 수와 비교하여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다.

제2장 제24회 인구포럼 : 코로나19 시기 인구 변동과 정책적 함의 67

국가명	연령	인구비중	확진율 (1,000명당)	치명률	사망률 (1,000명당)
	80~84세	2.2%	2.322	0.144	
	85~89세	1.1%	2.697	0.213	
	90~94세	0.4%	3.405	0.303	
	95~99세	0.1%	5.144	0.424	
	100세 이상	0.0%	1.336	0.551	
	계	100.0%	2.134	0.016	
프랑스 (2021. 3. 11)	0~4세	5.6%	10.641	0.000	1.001
	5~9세	6.1%	22.934	0.000	
	10~14세	6.2%	45.928	0.000	
	15~19세	6.1%	74.749	0.000	
	20~24세	5.6%	93.579	0.000	
	25~29세	5.7%	88.467	0.000	
	30~34세	6.1%	79.350	0.000	
	35~39세	6.3%	71.055	0.000	
	40~44세	6.2%	68.313	0.001	
	45~49세	6.8%	69.283	0.001	
	50~54세	6.7%	66.311	0.003	
	55~59세	6.4%	60.144	0.006	
	60~64세	6.1%	50.725	0.012	
	65~69세	5.9%	43.456	0.025	
	70~74세	4.8%	45.829	0.046	
	75~79세	3.3%	45.124	0.080	
	80~84세	2.8%	52.172	0.123	
	85~89세	2.0%	72.080	0.147	
	90~94세	1.0%	109.705	0.141	
	95~99세	0.3%	192.852	0.126	
100세 이상	0.0%	336.379	0.114		
계	100.0%	60.241	0.017		
스웨덴 (2021. 4. 8)	0~4세	5.9%	7.176	0.001	1.325
	5~9세	6.1%	23.378	0.000	
	10~14세	5.9%	63.212	0.000	
	15~19세	5.5%	108.621	0.000	
	20~24세	5.8%	115.661	0.000	

국가명	연령	인구비중	확진율 (1,000명당)	치명률	사망률 (1,000명당)
	25~29세	7.2%	107.861	0.000	1.624
	30~34세	6.8%	110.366	0.000	
	35~39세	6.3%	116.214	0.000	
	40~44세	6.2%	120.646	0.000	
	45~49세	6.4%	121.787	0.001	
	50~54세	6.7%	112.914	0.001	
	55~59세	5.9%	103.125	0.003	
	60~64세	5.5%	79.105	0.007	
	65~69세	5.3%	51.714	0.019	
	70~74세	5.5%	35.327	0.056	
	75~79세	4.0%	34.776	0.126	
	80~84세	2.6%	45.803	0.213	
	85~89세	1.6%	66.628	0.284	
	90~94세	0.7%	95.244	0.333	
	95~99세	0.2%	138.797	0.377	
	100세 이상	0.0%	215.583	0.426	
	계	100.0%	83.395	0.016	
스페인 (2021. 4. 8)	0~4세	4.5%	46.726	0.000	1.624
	5~9세	5.1%	54.697	0.000	
	10~14세	5.3%	68.690	0.000	
	15~19세	4.9%	83.361	0.000	
	20~24세	4.9%	92.055	0.000	
	25~29세	5.4%	88.433	0.000	
	30~34세	6.0%	77.317	0.000	
	35~39세	7.5%	68.217	0.001	
	40~44세	8.5%	70.378	0.001	
	45~49세	8.1%	74.176	0.002	
	50~54세	7.7%	73.681	0.004	
	55~59세	6.9%	72.301	0.007	
	60~64세	5.9%	67.390	0.015	
	65~69세	5.1%	58.001	0.031	
	70~74세	4.6%	55.367	0.058	
75~79세	3.4%	62.050	0.097		

국가명	연령	인구비중	확진율 (1,000명당)	치명률	사망률 (1,000명당)
	80~84세	3.0%	60.341	0.143	1.859
	85~89세	2.1%	86.971	0.188	
	90~94세	0.9%	127.432	0.244	
	95~99세	0.2%	206.301	0.315	
	100세 이상	0.0%	294.619	0.399	
	계	100.0%	71.164	0.023	
이탈리아 (2021. 4. 12)	0~4세	4.1%	29.767	0.000	
	5~9세	4.6%	39.955	0.000	
	10~14세	4.7%	54.428	0.000	
	15~19세	4.7%	66.335	0.000	
	20~24세	4.9%	72.397	0.000	
	25~29세	5.3%	70.641	0.000	
	30~34세	5.6%	66.623	0.000	
	35~39세	6.4%	60.870	0.001	
	40~44세	7.7%	59.255	0.001	
	45~49세	8.1%	66.567	0.002	
	50~54세	8.1%	71.275	0.004	
	55~59세	7.0%	72.845	0.008	
	60~64세	6.2%	62.464	0.018	
	65~69세	5.9%	51.152	0.037	
	70~74세	5.0%	54.870	0.068	
	75~79세	4.6%	50.189	0.115	
	80~84세	3.5%	64.849	0.171	
	85~89세	2.2%	77.346	0.224	
	90~94세	1.0%	101.379	0.260	
	95~99세	0.2%	155.249	0.289	
100세 이상	0.0%	169.377	0.316		
계	100.0%	61.884	0.030		

자료: 1. 치명률과 확진율 자료는 Riffe et al.(2020). COVerAGE-DB (<https://osf.io/mpwjq/>, 2021년 4월 15일 인출)에서 재구성
 2.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의 인구수는 Human Mortality Database(2021)의 “사망위험노출인구(Exposure to Risk)” (<https://www.mortality.org/>, 2021년 4월 15일 인출)의 최근 자료 이용. 한국의 인구는 통계청(2021c) 2020년 주민등록연앙인구
 주: 확진율 = (코로나19 확진자 수*1,000)/인구수, 치명률 = 코로나19 사망자 수/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률 = (코로나19사망자수*1,000)/인구수

[그림 11] 한국·프랑스·스웨덴·스페인·이탈리아의 연령별 인구 비중, 확진율, 치명률 비교



자료: 1. 치명률과 확진율 자료는 Riffe et al.(2020). COVerAGE-DB (<https://osf.io/mpwjw/>, 2021년 4월 15일 인출)에서 재구성
 2.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의 인구수는 Human Mortality Database(2021)의 “사망위험노출인구(Exposure to Risk)” (<https://www.mortality.org/>, 2021년 4월 15일 인출)의 최근 자료 이용. 한국의 인구는 통계청(2021c) 2020년 주민등록연앙인구
 주: 확진율=(코로나19 확진자 수*1,000)/인구수, 치명률 = 코로나19 사망자 수/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률 = (코로나19사망자수*1,000)/인구수

5. 분석 결과

분석 결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률이 한국보다 높은 것은 연령별 확진율 차이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과 [그림 11]에 따르면 비교 대상 유럽 국가의 코로나19 확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보다 높다. 국가 간의 코로나19 사망률 격차를 설명함에 있어 연령별 인구 구조는 그 다음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나, 확진율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치명률의 차이가 국가 간의 코로나19 사망률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과의 코로나19 사망률 차이가 각각 1.291명과 1.590명인 스웨덴과 스페인의 경우 확진율의 차이가 전체 사망률 차이를 설명하는 비중이 약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구 비중 차이가 설명하는 부분도 약 15% 내외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치명률의 차이가 코로나19 사망률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가 약 8%인데 반해, 스페인의 경우 치명률의 차이는 0.51%로 매우 낮았다.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한국과의 코로나19 사망률 차이가 가장 큰 이탈리아의 경우 확진율 차이가 설명하는 비중이 약 73%, 인구 비중이 설명하는 부분이 약 20%, 치명률 차이가 설명하는 부분이 약 7%로 나타났다. 한편, 프랑스와 비교한 결과 연령별 인구 구조와 코로나19 확진율은 프랑스가 한국보다 높은 코로나19 사망률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치명률은 한국과 프랑스 간의 코로나19 사망률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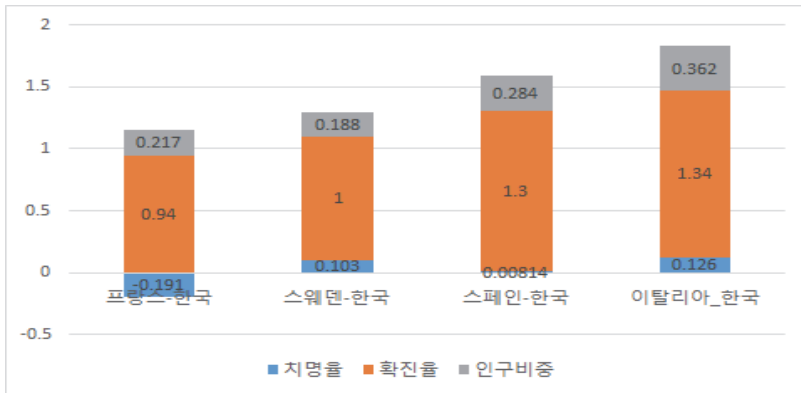
〈표 2〉 한국·프랑스·스웨덴·스페인·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률 분해 결과

국가	코로나19 사망률			분해 결과		
	유럽 국가	한국	차이	인구비중	확진율	치명률
프랑스 - 한국	1.001	0.034	0.966	0.217 (22.44)	0.940 (97.29)	-0.191 (-19.73)
스웨덴 - 한국	1.325	0.034	1.291	0.188 (14.55)	1.000 (77.48)	0.103 (7.97)
스페인 - 한국	1.624	0.034	1.590	0.284 (17.85)	1.300 (81.64)	0.008 (0.51)
이탈리아 - 한국	1.859	0.034	1.825	0.362 (19.82)	1.34 (73.26)	0.126 (6.92)

주: 확진율 = (코로나19 확진자 수*1,000)/인구수, 치명률 = 코로나19 사망자 수/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률 = (코로나19사망자수*1,000)/인구수

- 자료: 1. 치명률과 확진율 자료는 Riffe et al.(2020). COVerAGE-DB (<https://osf.io/mpwjq/>, 2021년 4월 15일 인출)에서 재구성
 2.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의 인구수는 Human Mortality Database(2021)의 “사망위험노출인구(Exposure to Risk)” (<https://www.mortality.org/>, 2021년 4월 15일 인출)의 최근 자료 이용. 한국의 인구는 통계청(2021c) 2020년 주민등록연앙인구

[그림 12] 한국·프랑스·스웨덴·스페인·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률 분해 결과



주: 확진율 = (코로나19 확진자 수*1,000)/인구수, 치명률 = 코로나19 사망자 수/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률 = (코로나19사망자수*1,000)/인구수

- 자료: 1. 치명률과 확진율 자료는 Riffe et al.(2020). COVerAGE-DB (<https://osf.io/mpwjq/>, 2021년 4월 15일 인출)에서 재구성
 2.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의 인구수는 Human Mortality Database(2021)의 “사망위험노출인구(Exposure to Risk)” (<https://www.mortality.org/>, 2021년 4월 15일 인출)의 최근 자료 이용. 한국의 인구는 통계청(2021c) 2020년 주민등록연앙인구

6.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본 고의 분석 결과는 한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이 코로나19가 확산된 대표적인 유럽 국가 보다 낮은 이유가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사회적 접촉 빈도 등 감염 경로가 코로나19 사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과 이를 엄격하게 준수한 시민 의식이 코로나19 사망률을 낮게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비약제적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수를 낮게 유지하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모든 장소와 지역 및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장소와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수리 인구학적 모형과 모바일 빅데이터 자료를 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시기 동안 이루어진 장소별 인구 이동 및 확진자 동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어떠한 장소와 어떤 인구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보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유럽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국 보다 고령화된 인구 구조가 한국보다 높은 코로나19 사망률을 보이는데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향후 한국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망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유럽 국가에서 노인 요양 시설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속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시설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산이 이루어진 바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노인 요양 시설 등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 부모 세대와 젊은 자녀 세대 간의 빈번한 교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높게 나타난 이유로 지적 되었다. 이러한 외국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가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가족 간의 모임을 자제하도록 한 거리 두기 정책은 코로나19 확산과 코로나19 사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남유럽 국가와 유사하게 가족 간 모임 및 친지 방문을 통하여 세대 간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감염병 확산 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명률의 차이가 국가 간 코로나19 사망률 차이를 설명하는데 서로 다른 크기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각 국가의 서로 다른 보건의료체계의 질과 접근성이 코로나19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질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신윤정, 임지영, 전광희, 계봉오 (2020) 코로나19 이후 인구 변동 추이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
- 통계청 (2021a). 2020년 인구동향 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 통계청 (2021b) 코로나19 시기 초과사망 분석 (2021년 4월 12일 기준)
- 통계청(2021c) 2020년 주민등록연앙인구
- CDC. (2018). Seasonal flu: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Influenza Burden*, 2018-19.
- Checchi, F., and Roberts, L. (2005). Interpreting and using mortality data in humanitarian emergencies. *Humanitarian Practice Network*, 52.
- Das Gupta, P. (1993). Standardization and Decomposition of Rates: A User's Manual. *Current Population Reports, Special Studies, P23-186*,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Bureau of the Census.
- Drefahl, S., Wallace, M., Mussino, E., Aradhya, S., Kolk, M., Brandén, M., Malmberg, B., and Andersson, G. (2020). Socio-demographic risk factors of COVID-19 deaths in Sweden: A national register study, Stockholm Research Reports in Demography, no 2020: 23.
- Dudel, C., Riffe, T., Myrskylä, M. van Raalte, A., and Acosta, E. (2020). Monitoring trends and differences in COVID-19 case fatality rates using decomposition methods: Contributions of age structure and age-specific fatality. 10.31235/osf.io/j4a3d (1 April 2020)
- Dowd, JD., Andriano, L., Brazel DM., Rotondi, V., Block, P., Ding, X. ... & Mills, M. C.. (2020). Demographic science aids in

- understanding the spread and fatality rates of COVID-19.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May 2020*, 117(18). 9696-9698; DOI:10.1073/pnas.2004911117
- Human Mortality Database. (202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and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Germany). <https://www.mortality.org/>
- Marois, G. Muttarak, R. and Scherbov, S. (2020). Assessing the potential impact of COVID-19 on life expectancy, Working pape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 Medford, A. and Trias-Llimós, S. (2020). Descriptive Finding Population age structure only partially explains the large number of COVID-19 deaths at the oldest ages, *Demographic Research* 43(19). 533-544. Retrieved from
- Munster, V. J., Koopmans, M., van Doremalen, N., van Riel, D., & de Wit, E. (2020). A novel coronavirus emerging in China—key questions for impact assessment.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82(8), 692-694.
- Our World in Data (2021).<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country/south-korea?country=~KOR>
- Riffe, T., Acosta, E., Aburto, JM., Alburez-Gutierrez, D., Altová, A., Basellini, U. . . . Zarulli, V. (2020). COVerAGEDB:COVID-19 cases and deaths by age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osf.io/mpwjq/>, doi: 10.17605/OSF.IO/MPWJQ
- Shultz, J. M., Espinel, Z., Espinola, M. and Rechkemmer, A.. (2016). Distinguishing epidemiological features of the 2013-2016 West Africa Ebola virus disease outbreak. *Disaster Health*, 3(3), 78-88.
- Trias-Llimós, S., and Riffe, T. and Bilal, U. (2020). Monitoring life expectancy level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amples of

the unequal impact in Spanish regions, PLOS ONE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241952>

Venkatesh, S. and Memish, Z.A.. (2004). SARS: the new challenge to international health and travel medicine. *EMHJ - Eastern Mediterranean Health Journal*, 10(4-5), 655-662, 2004 Retrieved from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119464>. accessed: 2020. 7. 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Ebola virus disease.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ebola-virus-disease> accessed: 2020. 7. 1.

제3절 코로나19 시기의 수도권 인구 이동 빅데이터 분석⁹⁾¹⁰⁾

1. 코로나19 시기 인구 이동 연구의 필요성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비대면, 비접촉 생활이 일상화되었다. 그로 인해 도시민들의 일상적인 공간 활용에 변화가 생겨났으며, 이는 단기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되어 중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대면경제, 재택근무, 원격수업 확대로 인해 도심으로의 유입 인구가 감소하고 고밀도 도시의 이점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각 지역의 산업 기반 및 특성에 따른 도시 간 불균형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의 특성, 도시 간 인구 이동, 코로나19의 확산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초기부터 도시 및 지역 연구자들에게 있어 주요 화두는 도시의 밀도가 감염병 전파의 주요한 요인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김동근 2020, 이왕건 2020). 지난 수십년 간 도시 연구의 큰 흐름에 있어 신도시주의(new urbanism)의 가치로 집적 효율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고밀도,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가 추구되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대도시를 덮치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초기에 뉴욕에서 엄청난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면서 도시의 역설(urban paradox)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Kolko 2020, Rosenthal 2020). 한국의 경우에도 코로나 1차 확산기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후 줄곧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대

9) 본 원고는 최종 결과물이 아니므로 인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김영룡(경기연구원, ylkim@gri.re.kr)

부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에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 밀도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주장과 오히려 도시의 의료 인프라가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반박 등이 있었다 (Fang and Sameh Wahba 2020, Florida 2020).

더 나아가 도시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산술적인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도시민들이 언제나 밀집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류 및 접촉의 빈도가 높다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즉 높은 도시 밀도로 인해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간의 네트워크적 특성에 의해 감염병이 확산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도시의 연결성과 감염병 확산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연구가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인구 이동(population flow)와 코로나19 확산의 관계, 도시들의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와 코로나 19 확산의 관계에 대한 연구 (Jia et al. 2020, The Economist 2020)는 감염병 시대 도시 간 인구 이동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2. 현대전화 기반의 유동인구 빅데이터

도시민의 일상적 삶(everyday life)에 있어 이동성(mobility)에 대한 연구는 이미 이론적으로 논의가 깊을 뿐 아니라(Sheller 2004, Urry 2004, Sheller and Urry 2006)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가 있어왔다. 국내에서는 전입신고 집계(국내인구이동통계) 및 설문조사(가통행실태조사) 기반의 데이터가 대표적으로 이동성 연구에 활용되었으며, 도시 공간에서의 일상적인 인구 이동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특정 시간과 지점에 조사원들을 파견하여 계수하는 방식의 조사(서울유동인구조

사)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입신고 집계는 거주지 이전의 전제 하에 장기적인 인구 이동을 보는 데에 적합하지만 보다 단기적인 이동을 파악하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설문조사 기반의 자료는 통근, 통학 등 보다 일상적인 이동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동선 공개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동인구 조사 역시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10여년간 실제 도시민들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술한 기존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González et al. 2008). 코로나19의 영향 역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연구들이 시의적절한 분석을 내놓았다 (Gao et al. 2020, Hong et al. 2020). 국내에서도 통신사의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가 있었다(강태경 외 2020, 김영룡 2020, 서울연구원 빅데이터분석팀 2020, 장요한 외 2020). 유동인구 빅데이터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지과 주소지 기준으로 유출입 인구 이동을 집계할 수 있어, 저장(stock)이 아닌 유량(flow) 기반의 빅데이터에 네트워크 개념과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접목한다면 감염병이 도시 네트워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Batty 2020, Nathan and Overman 2020). 실제로 2020년 1~2월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았던 중국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부터 휴대전화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가 차례로 소개되었다. 대표적으로 도시 간 네트워크 분석에 기반하여 우한으로부터의 인구 유출과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의 관계 및 도시 봉쇄 조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Jia et al. 2020).

3. 코로나19 시기의 수도권 유동인구 변화¹¹⁾

본 연구에서는 KT에서 수집하고 가공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 간에 이동한 유동인구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경기도 주소지의 가입자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시에서 포착된 경우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유출된 인구로 파악된다. 직장, 학교 등 주된 생활 지역이 거주 지역과 다른 경우 생활권을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이며 수도권의 경우 빈번하게 서울-인천-경기의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도시민의 일상생활을 잘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적으로는 일자별, 1시간 단위 시각별로 집계되며 공간적으로는 경기도 및 서울시의 읍면동 단위로 합역된 데이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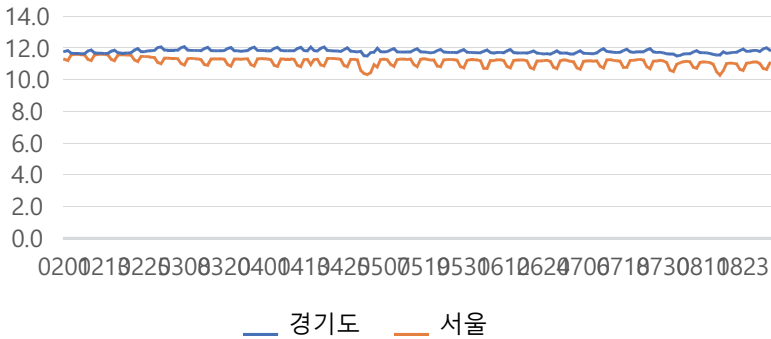
경기도 및 서울시의 총 유동인구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울로 향하는 유동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경기도 내 유동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통근 및 통학 통행이 잦은 주중은 물론, 여가 통행이 잦은 주말에도 비슷한 증가치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평일 기준 경기도→서울시 유출 유동인구가 많았던 반면, 2월 말 이후에는 감소하여 경기도 내 유동인구가 서울시 내 유동인구를 크게 상회했다.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등으로 통근 및 통학 통행이 감소하고, 여가 활동을 위한 서울 유출도 감소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8월 수도권 집단감염 폭증으로 경기도→서울시 유출인구는 2월보다 더욱 큰 폭으로 하락했다. 2월 말 1차 유행 시 주중(-16.7%), 주말(-14.2%)에 비해 8월 2차 유행 시에는 이보다 훨씬 급격한 수준(주중 -28.6%, 주말 -20.9%)으로 유동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기도 시군에서 서울 유출인구의 감소폭이 주중보다 주말에 컸으나 인천, 안성, 여주의 경우

11) 김영룡, 2020을 기반으로 작성

주말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발생 이전 주말 활동의 서울 의존도가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서울 의존도가 높은 부천, 광명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유출인구 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1차 유행 시 경기도 내 시군 유동인구를 보면, 성남(-1.6%), 과천(-0.6%)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도 시군에서 유동인구가 증가했다. 특히 양주(3.9%), 포천(4.2%), 여주(3.1%), 연천(8.1%), 가평(3.0%), 양평(6.9%)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인구가 적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원거리 이동을 자제하고 근거리 지역 내에 머무르며, 해외여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도권 근교 여행지 방문 유동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들은 2차 유행의 충격에도 광주(2.6%), 양주(4.4%), 포천(3.8%), 연천(6.1%), 가평(9.5%), 양평(2.6%) 등 유동인구가 증가했다.

[그림 1] 경기도 및 서울시의 일간 유동인구 추세 및 이동평균



자료: KT

〈표 1〉 1차 유행 시 주중 및 주말 유동인구 감소폭이 컸던 상위 10개 행정동

주중	증감률	주말	증감률
① 과천시 별양동	-20.2%	① 과천시 과천동	-26.0%
② 성남시 삼평동	-19.2%	② 안성시 미양면	-20.5%
③ 성남시 시흥동	-17.5%	③ 과천시 별양동	-19.5%
④ 수원시 매산동	-13.6%	④ 수원시 매산동	-15.5%
⑤ 안양시 신촌동	-13.3%	⑤ 광주시 도척면	-14.9%
⑥ 안양시 귀인동	-10.2%	⑥ 안양시 안양1동	-14.0%
⑦ 안양시 안양1동	-10.0%	⑦ 안양시 귀인동	-13.5%
⑧ 성남시 야탑1동	-9.4%	⑧ 안양시 신촌동	-12.0%
⑨ 성남시 서현1동	-8.6%	⑨ 성남시 복정동	-10.8%
⑩ 성남시 정자1동	-8.6%	⑩ 성남시 야탑1동	-10.4%

주: 주중은 2월 12일 대비 3월 4일, 주말은 2월 9일 대비 3월 1일의 유동인구 증감률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수원역 중심상권(매산동), 분당신도시 주요 상권(성남시 야탑1동, 서현1동, 정자1동), 안양1번가(안양1동)는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상권에 큰 영향을 끼쳤고, 판교테크노밸리(성남시 삼평동, 시흥동)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보통신기업 주도 재택근무 영향으로 주중 유동인구가 감소했다. 렛츠런파크(과천시 과천동), 안성팜랜드(안성시 미양면), 화답숲 및 곤지암CC(광주시 도척면) 등은 주말 방문객이 급감하여 유동인구 감소 폭이 컸다(표).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휴대전화 기반의 유동인구 및 유출입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전후로 한 수도권의 도시 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시적인 시공간 단위의 인구 이동 문제를 유량 데이터 기반의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있어 빅데이터가 기존 데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였다.

미시적인 시공간 단위의 이동성에 대한 문제는 해거스트란트의 ‘시간

지리학'(time geography) (Hägerstrand 1985)을 통해 그 이론적 기반이 다져졌다. 이후 시공간 경로(space-time path), 시공간 프리즘(space-time prism) 등의 개념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Miller 2017), 새롭게 등장한 시공간 빅데이터와 분석방법을 활용한 실증적 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Yuan and Nara 2015). 이러한 시공간 연구의 학문적 전통에 기반을 두면서도 코로나19 라는 새로운 위기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실증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하여 학습데이터 구축과 머신러닝 적용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나리오에 따른 도시 간 인구이동 수요 예측하는 연구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장기적인 예측 연구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인구 이동 변화에 대한 빅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단기적인 인구 이동 변화에 대한 예측은 적절한 조건 하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 이동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도시권 구조의 재편을 전제로 하였을 때, 향후 증거기반정책 수립의 근간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수도권 도시 간의 위상 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경기도와 각 시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현재는 거주인구가 기반이 되어 사회기반시설 및 행정서비스 수요를 산정하게 되어있다. 이미 수도권 내 빈번한 인구 이동과 거주지역-생활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기존의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특히 코로나19 로 인해 더욱 그 변동 양상이 단기적이고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그에 대한 분석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휴대전화 기반의 유출입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간 인구이동 네트워크 분석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참고문헌〉

- 강태경, 김유미, (2020), 모바일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발생 후 인구 이동과 개인 소비 변화, 통계프리즘 2020년 여름호, 통계청, pp. 37-45.
- 김동근,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 방향,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연구원
- 김영룡, (2020),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와 시사점, 정책브리프, 경기연구원
- 서울연구원 빅데이터분석팀,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 사회경제적 변화 분석, 인사이트리포트, 서울연구원
- 이왕진, (2020),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 장요한, 이영주, 박정환 (2020), 빅데이터로 살펴본 코로나19의 기록(1): 뉴스기사와 유동인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연구원.
- Batty, M., 2020. The Coronavirus crisis: What will the post-pandemic city look like? *Environment and Planning B: Urban Analytics and City Science*, 47 (4), 547-552.
- Fang, W. and Sameh Wahba, 2020. Urban Density Is Not an Enemy in the Coronavirus Fight: Evidence from China. *Sustainable Cities*, 20 Apr.
- Florida, R., 2020. The Geography of Coronavirus. *CityLab*, 3 Apr.
- Gao, S., Rao, J., Kang, Y., Liang, Y., Kruse, J., Dopfer, D., Sethi, A.K., Mandujano Reyes, J.F., Yandell, B.S., and Patz, J.A., 2020. Association of Mobile Phone Location Data Indications of Travel and Stay-at-Home Mandates With COVID-19 Infection Rates in the US. *JAMA network open*, 3 (9), e2020485.
- González, M.C., Hidalgo, C.A., and Barabási, A.L., 2008. Understanding individual human mobility patterns. *Nature*, 453 (7196), 779-

782.

- Hägerstrand, T., 1985. Time geography: Focus on the corporeality of man, society and environment. In: S. Aida, ed. *The Science and Praxis of Complexity*. Tokyo: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193-216.
- Hong, B., Bonczak, B.J., Gupta, A., Thorpe, L.E., and Kontokosta, C.E., 2020. Exposure density and neighborhood disparities in COVID-19 Infection Risk: Using Large-scale geolocation data to understand burdens on vulnerable communities. *arXiv*, 1-28.
- Jia, J.S., Lu, X., Yuan, Y., Xu, G., Jia, J., and Christakis, N.A., 2020. Population flow drives spatio-temporal distribution of COVID-19 in China. *Nature*, 582 (7812), 389-394.
- Kolko, J., 2020. Where COVID19 death rates are highest.
- Miller, H.J., 2017. Time Geography and Space-Time Prism. In: D. Richardson, N. Castree, M.F. Goodchild, A. Kobayashi, W. Liu, and R.A. Marston,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Geography: People, the Earth, Environment and Technology*. Oxford, UK: John Wiley & Sons, Ltd, 1-19.
- Nathan, M. and Overman, H., 2020. Will coronavirus cause a big city exodus? *Environment and Planning B: Urban Analytics and City Science*, 47 (9), 1537-1542.
- Rosenthal, B.M., 2020. Density Is New York City's Big 'Enemy' in the Coronavirus Fight. *New York Times*, 23 Mar.

제4절 종합 토론

1. 김근태 교수 (고려대학교)(코로나19 시기의 연애·결혼·출산 변동)

2020년 예기치 않게 시작된 코로나19의 전지구적 유행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류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몰고 올 여러 가지 사회변화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방역, 백신개발, 소득 격차 해소 등에 집중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연애, 결혼, 출산 등의 변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렇게 볼 때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인구학적 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도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여지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센서스 자료와 결합한 뒤 SMAM 기법을 도입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면 한층 완성도 높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1. <코로나 19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는 25-49세 성인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가치관 변화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지만, 성별 비교와 혼인 상태별 차이점에만 집중하고 있어 지나치게 단조롭다는 인상을 준다. 기초적인 사회경제학적 변인인 교육수준이나

소득 또는 직업 등에 따른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면 내용이 한층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이 분석에서는 동거중인 응답자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들을 따로 구분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다. 대부분이 결혼식을 유보하고 있는 커플로 보여지는데, 이들을 기혼자로 분류해도 전체적인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지침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로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을 기혼자로 분류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3.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2015년 센서스 자료에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19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는 25-49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즉 두 자료의 대상 인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SMAM 시뮬레이션 결과를 2020년 자료에 대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4. SMAM의 기본적인 가정은 미혼자와 기혼자의 사망확률에 차이가 없으며, 동시에 이 두 집단의 (국제) 이주 확률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이 대체로 성립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질병의 특성상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평균 연령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연구에서 수행된 SMAM 결과에는 이러한 연령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력 차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5.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출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한 여성의 비율(%)과 긍정적으로 변한 여성의 비율(%)의 차이를 “출산의향이 하락한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한 시점에서 측정된 긍정과 부정의 비율 차이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 정도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6.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출산과 혼인율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코로나가 한창 진행된 2020년 한 해 동안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 또한 급격하게 상승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미혼에서 결혼으로, 또 무자녀에서 유자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정된 주거의 역할이 큰 만큼, 이러한 효과가 코로나 효과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7.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2021년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료의 부재로 인해 이 연구는 대안적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론이나 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가령 2020년 동안 발생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자료 등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실제 출산율에 근접한 수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우혜경 교수 (공주대학교) (코로나19 사망률 국제 비교: 연령별 인구 비중·확진율·치명률 분해 분석)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우리나라 사망원인통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성의 변화가 질병 및 사망패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사망률은 2009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연령별 사망자 구성비에 있어서 80세 이상 연령층의 증가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09년 32.1%, '19년 47%). 또한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에서 두드러진 주요변화 중 하나는 폐렴 및 치매질환(알츠하이머)에 기인한 사망의 빠른 증가세다(통계청, 2020). 폐렴은 2018년부터 우리나라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고령화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폐렴 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은 80세 이상의 환자였으며, 80세의 이상의 연령층의 경우 18-39세 젊은 연령층에 비해 폐렴사망률의 위험비가 10배 이상으로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2013년 80세 이상 연령 위험비 10.04; 2017년 80세 이상 연령 위험비 15.92)(안미선 외, 2020).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선진국에서도 사망패턴에 있어서 이러한 양상은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국가별 치명률의 차이도 국가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표 자료의 통계청 코로나19의 초과 사망 분석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85세 고령자 집단은 거의 모든 기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10%가 넘는 초과사망을 보였고, 고령화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다. 발표 자료에서 분석결과를 통해 지적하였듯이 유럽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국 보

다 고령화된 인구 구조가 한국보다 높은 코로나19 사망률을 보이는데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보건학적으로 숙주요인은 병원체 및 감염경로와 더불어 감염병발생의 3대 조건에 해당한다. 특히 연령의 증가는 숙주의 감수성을 높이는 특성을 가진다. 즉, 연령은 특정 질환에 대해 이전에 노출된 적이 없어 감수성이 있는 미감염자가 병원체에 접촉되었을 때 감염되어 발병하는 비율인 감수성 지수를 높이는 주요 결정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어지는 가운데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따른 치명률의 크기는 숙주요인으로만 살펴보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 천착하여 병원체 등의 감염원이나 감염경로의 차단에 집중된 국가 질병관리 매뉴얼을 숙주요인까지 확장하여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노인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은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명률을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노인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노인인구 집단의 분포를 고려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노력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발표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는 국가 간 코로나19 사망률 차이를 설명하는데 치명률의 차이가 서로 다른 크기로 나타났고, 한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이 코로나19가 확산된 대표적인 유럽 국가 보다 낮은 이유가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적인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등 사회적 접촉 빈도를 감소시켜 감염원의 전파경로를 차단한 정책적 개입과 감염병 관리, 그리고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신속한 감염병 대응 정책과 이를 유연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의 분석결과에 기반 하여 추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기존 알려진 감염병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새롭게 경험하고 대응해야 할 미래를 누구나 예상한다. 우리는 과학적인 인구추계 방법을 통해 큰 오차 없이 30년 이후의 인구의 구조와 크기를 예측한다. 고령화의 진전은 보건의료체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처럼 개선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고령화의 진전과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치명률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는지 효과(기울기)값을 인구추계자료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예측 및 진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감수성 높은 숙주관리를 위한 감염병 대응관리 정책도 발 빠르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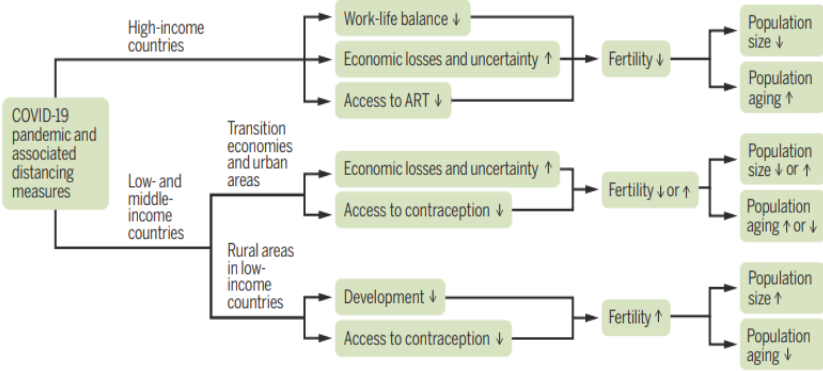
3. 이상립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19 시기의 수도권 인구 이동 빅데이터 분석)

인구학 연구는 인구현상을 단순기술하는 것이 아닌, 사회와 인구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학적 맥락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인구변동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 시기의 인가지표의 변화에 대한 기술이나,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학적 위기와 인구학적 현상 사이에 어떠한 사회적 맥락이 투영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사이언스>에는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다른 인구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이탈리아 인구학자들의 글이 실렸다.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출산력을 저하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저개발국가 특히 농촌에는 오히려 출산

력 상승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지역 소득수준에 따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능한 출산력 변화경로



영향 매개요인: 고소득/중·저소득 국가, 지역(도시/농촌), 일가정균형, 경제적 손실과 불확실성, 난
 인보조술 접근성, 피임 접근성, 발전
 출처: Aassve et al.(2020) -SCIENCE 369(6502), 24 July 2020.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인구학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코로나19(또는 그 위험인지)에 따른 직접적 영향이나,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매개로 한 이차적 영향에 국한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예외적으로 인구이동(daily mobility)가 코로나 확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도 존재하는데, 김영룡 박사님의 발표도 그와 연관성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 연구환경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연구는 직접적 혹은 2차적 파급효과를 넘어 인구학적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맥락들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변동 요인들 중 가장 덜 생물학적인 요소인 인구이동에 관해서는 더욱 다양한 주제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사회의 인구이동건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마 1) 도시봉쇄(lockdown)가 있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성 제한이 크지 않았고, 2) 주택가격 폭등 등 및 관련 정책변화로 인한 이동성 증가의 요인이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사회가 원래부터 워낙 이동성이 높았다는 점도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나, 2002년 카드대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를 보면 발생연도의 1~3년 후 이동량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의 인구이동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 잠복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동성(mobility)의 변동은 대상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제도적 맥락에서 전혀 다른 문제들로 발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 예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주택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청년의 이동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이 어디에 더 집중되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수도권 또는 대도시의 경기침체는 지방 청년들에 대한 pulling 요인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지방출신 청년들의 귀환이동(return migration)을 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방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면 청년들에 대한 pushing 요인이 더 강화되어 인구이동의 양을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이거나, 지역별 또는 개인특성(학력,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이동 또는 총이동의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만약 그 파급효과가 가시화된다면 지역의 인구위기(소위 지방소멸)나 균형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이동에 대해서도 변화를 가정할 수 있다. 국제이동의 위축은 국제혼인의 감소를 통해 출산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취업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과 입출국 제약으로 인한 체류기간 초과자(불법체류자)의 누적은 앞으로 우리사회 외국인의 체류와 관리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 고용구조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유학생의 감소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고, 지역의 인구위기와도 연동될 위험성이 있다.

더 나아가 감염병의 위험과 인종주의적 경향이 결합되면서 세계적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이동력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것은 세계적인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하여 이주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 상승이 예상되는 우리사회에서는 또 다른 양상으로 문제가 발전될 수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부연하자면, 코로나19의 위기가 미친 인구학적 파장은 아직 그 형상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자료의 위거나 사회적 인식의 한계로 인하여 본격적 연구 접근이 제약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이 갖는 특유의 접근 프레임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더 많은 연구와 인식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장

제25회 인구포럼 : 신중년 노후준비: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제1절 신중년 노후준비 현황과 경험

제2절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제3절 좌담회



제 3 장

제25회 인구포럼 : 신중년 노후준비: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제1절 신중년 노후준비 현황과 경험

1. 경제활동, 가족부양¹²⁾

□ 일상생활 보내기, 현재 경제활동

- 현재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 과거 경제활동 이력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가족관계 및 가족부양

- 현재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따로살고 있는 부모님, 자녀가 있습니까?
- 부모부양이나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비경제적인 지원(가사도움, 간병, 병원동행, 손자녀 돌봄 등) 을 하고 있습니까?
- 부모부양이나 자녀부양은 본인의 노후준비와 관련이 있습니까?

□ 노후계획

-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은 활동이나 살고 싶은 지역 등등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12) 발표자 : 서형수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 노후준비 실태와 인식

□ 현재 노후 준비 정도

- 현재 본인의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나요?
- (노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노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노후준비를 할 때 내가 고려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EX)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하고 있지 않다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노후준비를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본 적은 있으신가요?
- 노후준비는 언제 혹은 몇 살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노후준비 인식

-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사항은 무엇인가요?

3.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 노후준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참고: 노후준비 관련 정부 서비스 예시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생활 4대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2016년부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109개 지사의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노후준비수준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 제공

(생애경력설계서비스)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진단 및 제2의 인생 경력설계를 통해 체계적인 재취업 계획을 수립하고 능력개발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제공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생애설계뿐 아니라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사발전재단이나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주로 운영
-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워크넷으로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재취업지원서비스) 2020년 5월부터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비자발적 퇴직자를 대상으로 이직 예정일 3년 전부터 법안에 명시한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1,000인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 이직 예정일 3년 전부터 ①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② 취업알선, ③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④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제공토록 추진

(서울시50+,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대전 중장년지원센터 등 50+지원기관) 지자체 차원에서 신중년 대상 정책 개발 및 상담, 교육, 취미여가, 일자리, 창업활동,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 제공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전화상담-온라인 상담, 귀농설계, 컨설팅, 1:1 맞춤형 귀농 닥터 연계 등 귀농귀촌을 위한 종합상담과 농업농촌 현장 사례 중심의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실시

□ 인터뷰 대상자

연번	이름	소속	나이
1	이○영	더쓰임라이프연구소	50대
2	전○인	강화실타로드 협동조합	50대
3	마○자	주부	60대
4	황○성	은퇴 구직중	60대
5	허○우	은퇴 구직중	60대
6	최○희	백화점 아르바이트	50대
7	김○문	백화점 아르바이트	60대

□ 최종 질문 문항

- 질문1: 가족부양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줄까요?
- 질문2: 노후에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 질문3: 노후준비 하고 계시나요?
- 질문4: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이용해 보셨나요?
- 질문5: 노후준비,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 질문6: 노후준비 잘 되고 있나요?
- 질문7: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제2절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¹³⁾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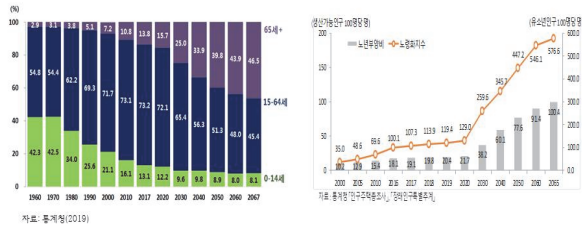
- I. 노후준비 필요성
- II. 노후준비 실태와 인식
- III.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
- IV. 향후 과제

13) 황남희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노후준비 필요성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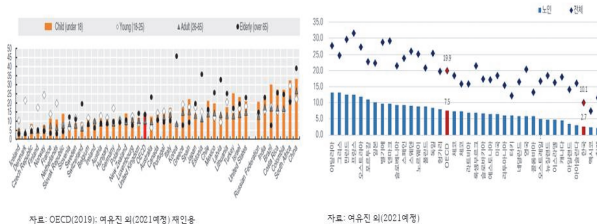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인인구 증가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사회보장지출(연금, 보건 등)을 가중 → **사회적 부담부담 증가**
 - * 노인인구 비율: 2000년 7.2%(고령화사회) → 2018년 14.3%(고령사회) → **2025년 20.3%**(초고령사회)
 - * 노년부양비(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00년 10.2 → 2018년 19.8 → 2030년 38.2



I. 노후준비 필요성

PART 1.

-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3.8%로 OECD 회원국(평균 14.2%) 중 1위이나,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낮은 편
 - 우리나라 전체 공적 지출은 GDP의 10.1%이며, 이중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은 1/3 수준인 2.7%에 불과. OECD 37개국(평균 7.5%) 중 35위 해당
 -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1988년 도입)으로 공적 지출 규모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상대빈곤율과 낮은 노인 공적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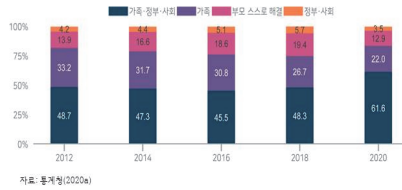


I. 노후준비 필요성

PART 1.

● 전통적인 가족부양의식이 약화되면서 사회적 부양에 대한 요구 증가

- 부모님의 노후는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2012년 48.7%에서 2020년 61.6%로 증가
- 부모님의 노후는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같은 기간 33.2%에서 22.0%로 감소



I. 노후준비 필요성

PART 1.

● 즉 공적연금제도를 비롯하여 복지제도가 성숙하기 전,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가족부양의식 약화를 경험하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개개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필요(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2020)
-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노년기 진입 이전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전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중

노후준비와 노후준비서비스(노후준비지원법 제2조)

-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며,
-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임

II. 노후준비 실태와 인식

PART 2.

- 노후준비수준은 100점 만점에 68점
 - 2016년 63점에서 2019년 68점으로 조금 증가하였으나, 절대적인 점수는 낮은 편
 - 분야별로 건강>대인관계>재무>여가 순으로 노후준비점수가 높음

(단위: 점/100점)

구분	2019년	2016년	차이
종합	67.5	62.8	4.7
-재무	60.3	54.8	5.5
-건강	74.1	73.1	1.0
-대인관계	67.3	61.1	6.2
-여가	59.6	60.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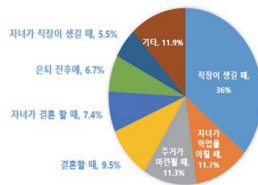
자료: 청년희망(2020)

II. 노후준비 실태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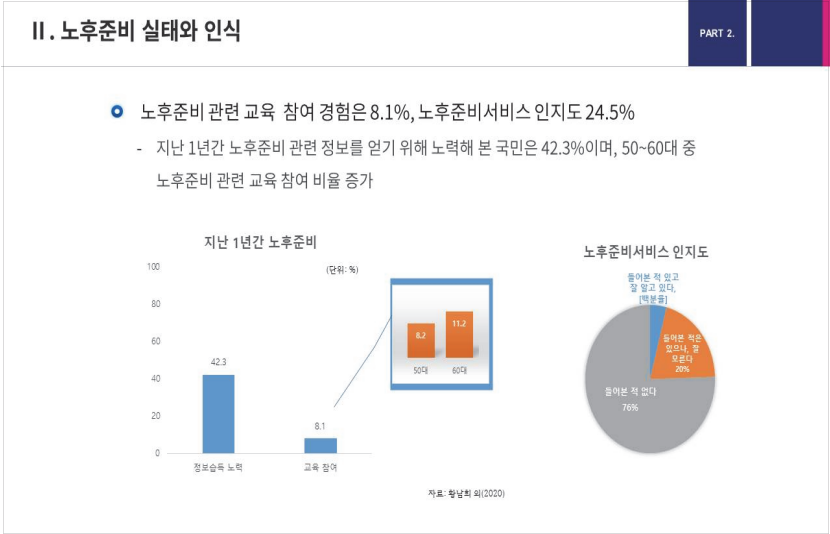
PART 2.

- 노후준비 적정 시작 연령은 40대, 적정 시작 시기는 직장이 생길 때
 - 노후준비를 시작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40.2세
 - 노후준비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직장이 생길 때(36%), 자녀가 학업을 마칠 때(11.7%), 주거가 마련될 때(11.3%), 결혼할 때(9.5%) 순

노후준비 적정 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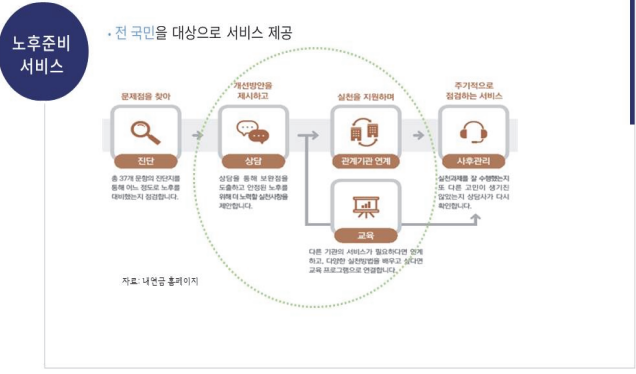
자료: 청년희망(2020)



III.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

PART 3.

●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III.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

PART 3.

●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노후준비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재무?

· 노후준비와 관련성 높은 지자체 및 전문기관 서비스 연계

구분	지자체 서비스 연계	전문기관 연계
재무	기초연금, 장애연금, 희망키움통장, 노인일자리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 한국농어촌공사(농지연금),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지원제도) 등 10개 기관
건강	치매관리, 금연클리닉, 구강보건, 일반건강검진, 노인특감 예방접종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증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공공의료복지)
여가	취미·문화 프로그램, 통합문화이용권	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 종합사회복지관(취미·여가), 지방문화원(지역문화), 아름다운가게(자원봉사), 한국관광공사(여행 지원)
대인관계	노인돌봄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관계 상담)

자료: 황남익 외(2020)

III.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

PART 3.

-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 장년에 진입하는 40세부터 생애경력설계를 통해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도록 함
-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제공
- * 2015년부터 실시하며, 재직자와 구직자로 구분하여 지원

생애경력설계 지원단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생애경력설계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신청·접수·상담·평가·후속지원 등 생애경력설계서비스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재직자	구직자
<p>1순위 40대 경력직 여성</p> <p>중장년 경력직 여성은 경력개발,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음(여성고용촉진법 제24조)</p>	<p>생애경력설계 지원단</p> <p>중장년 경력직 여성은 경력개발,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음(여성고용촉진법 제24조)</p>
<p>2순위 50대 경력직 여성</p> <p>중장년 경력직 여성은 경력개발,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음(여성고용촉진법 제24조)</p>	<p>생애경력설계 지원단</p> <p>중장년 경력직 여성은 경력개발,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음(여성고용촉진법 제24조)</p>
<p>3순위 60대 경력직 여성</p> <p>중장년 경력직 여성은 경력개발,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음(여성고용촉진법 제24조)</p>	<p>생애경력설계 지원단</p> <p>중장년 경력직 여성은 경력개발,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음(여성고용촉진법 제24조)</p>

생애경력설계 지원단

자료: 장년일자리희망센터

III.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

PART 5.

-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 만 50세 이상 신중년을 대상으로 단계별 및 유형별로 특화된 맞춤 서비스인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운영
- * 생애 3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기회 제공을 통해 인생후반기 계획수립 및 경력관리·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평생 현역준비 프로젝트

단계별 서비스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p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생애경력설계서비스</p> <p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p>	<p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경력경로별 준비지원</p>	<p style="background-color: #e69d00; color: white; padding: 2px;">경력 심형</p>	<p style="background-color: #c00000; color: white; padding: 2px;">사후관리</p>														
<p style="font-size: 8px;">1순위 대상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6px;"> <tr> <td style="width: 50%;">연령별</td> <td style="width: 50%;">업·직종별</td> </tr> <tr> <td>40대 경력직 여성</td> <td>사무직</td> </tr> <tr> <td>50대 경력직 여성</td> <td>생산직(제조업)</td> </tr> <tr> <td>60대 경력직 여성</td> <td>서비스직(서비스업)</td> </tr> </table> <p style="font-size: 8px;">구직자과정</p>	연령별	업·직종별	40대 경력직 여성	사무직	50대 경력직 여성	생산직(제조업)	60대 경력직 여성	서비스직(서비스업)	<p style="font-size: 8px;">1순위 대상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6px;"> <tr> <td style="width: 50%;">원칙스쿨 프로그램 ·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td> <td style="width: 50%;">직무특화 프로그램</td> </tr> <tr> <td>· 직무능력개발 · 창업지원사업 · 귀농·귀촌·지역개발사업</td> <td>· 사회적응 지원사업</td> </tr> </table> <p style="font-size: 8px;">2순위 대상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6px;"> <tr> <td style="width: 50%;">장년직할직무 개발 및 발굴, 알선</td> <td style="width: 50%;">신중년 직할직무 고용지원금 지원</td> </tr> </table>	원칙스쿨 프로그램 ·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직무특화 프로그램	· 직무능력개발 · 창업지원사업 · 귀농·귀촌·지역개발사업	· 사회적응 지원사업	장년직할직무 개발 및 발굴, 알선	신중년 직할직무 고용지원금 지원	<p style="font-size: 8px;">11 심층상담</p> <p style="font-size: 8px;">· 동아리</p> <p style="font-size: 8px;">· 실용역량강화교육</p>	<p style="font-size: 8px;">수혜대상자 모니터링 정보제공</p>
연령별	업·직종별																
40대 경력직 여성	사무직																
50대 경력직 여성	생산직(제조업)																
60대 경력직 여성	서비스직(서비스업)																
원칙스쿨 프로그램 ·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직무특화 프로그램																
· 직무능력개발 · 창업지원사업 · 귀농·귀촌·지역개발사업	· 사회적응 지원사업																
장년직할직무 개발 및 발굴, 알선	신중년 직할직무 고용지원금 지원																

자료: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III.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

PART 5.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재취업지원 서비스

- 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5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정년 포함)로 이직 예정인 경우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①진로설계, ②취업알선, ③취·창업 교육, ④그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 등의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근로자가 전문기관에 바우처 방식으로 참여 가능
 - * 고용차고용범의 개정으로, 2020년 5월부터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실시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업교육
· 이직 이후 변화 관리 등에 관한 교육	· 취업알선 및 상담(지역·사·차)으로서	· 구직,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
· 소질·직능, 경력에 관한 상담을 바탕으로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가능	·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포함	· 실용·협동 시기가 위한 교육·훈련
· 16시간 이상 교육과 상담 제공	· 이직전 3개월 이상 2주 이상 취업알선 실시	· 2일 이상, 16시간 이상 실시
· 개인별 '진로 설계서' 작성	· 1회 이상 대면 서비스 제공	· 실제 현상실시 원칙, 실용 능력 평가 방식 병행수용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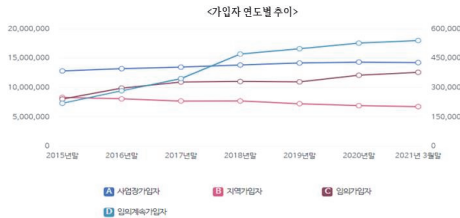
III.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

PART 3.

노후준비 정책 기반

국민연금

- 산업화 시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대비한 사회보험제도
-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업으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
- * 2020년 가입자 2,210.7만 명, 수급자 530.6만 명(평균 월 48.6만원)



자료: 국민연금 홈페이지

III.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

PART 3.

○ 노후준비 정책 기반

퇴직연금

·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장제도

*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도입

* 20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5%), 593만명 가입(가입률 51.5%)

주요 산업별 전체 도입 사업장(기업 근로자) 및 도입(가입)률 현황



주: 2019년 기준
자료: 통계청(2020b)

III.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

PART 3.

○ 노후준비 정책 기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 베이비붐세대 은퇴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장년층과 재정구조가 열악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을 매칭하여 사회공헌 활동 및 일자리 지원

· '사회공헌'은 실비·활동수당 시간당 2천원(신비·교통비 9천원), 월 최대 120시간(연 최대 480시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수당 지급

* (참여자) 만 50~69세 미취업자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전문자격 소지자

* (참여단체)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단체·기관, 행정·공공기관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 (공익활동) 65세 이상 월 30시간 이내 참여, 월 27만원, 평균 11개월

* (재능나눔활동) 65세 이상 월 10시간 이하 참여, 월 10만원, 10개월

* (사회서비스형) 일부 60세 이상 참여 가능,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월 최대 71.3만원, 10개월

* (시장형 일자리) 60세 이상 참여 가능, 사업단 혹은 근로계약 기준을 따름

III.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

PART 3.

● 노후준비 정책 기반

직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Korea Polytechnics) 신중년 특화과정 운영
- 50~60대 맞춤 기술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추구하고 취업과 연계
 - * 7개 대학 13개 캠퍼스에서 비학위과정으로 운영
 - * 교육비, 실습재료비, 기술사비, 식비 등 전액 국가 지원
 - *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실시

고용연장 지원을 위한 장려금

-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을 위해,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2년간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근로자 1인당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중견기업 40만원), 1년간 지원'
 - * 정규직 채용이며, 3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지원금 지급

IV. 향후 과제

PART 4.

● 노후준비서비스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의 보편화

- ✓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 및 생애단계별 실천행동 촉진) 생애단계별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생애단계별 실질적 준비 방안 제안- 경력설계 포함
 - 노후는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며, 준비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 (신중년)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수급 점검
 - (신중년) 일, 사회공헌, 교육 등에 대한 이용기관, 서비스 정보
- ✓ (제공기관 확대) 국민연금공단 16개 거점 및 109개 지사 + 지자체 운영 50플러스재단과 일자리센터, 평생학습관 등
 - 전국 약 32개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등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기관 등
 - ☞ 보다 나아가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및 노후준비 정책 기반' 수행 기관

IV. 향후 과제

PART 4.

- 노후준비서비스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의 보편화(계속)
 - ✓ (서비스 간 협력 및 연계) 유사 서비스 간 협력 공식화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통합 조정 등 개편
 - ✓ (서비스의 내실화) 영역별로 균형잡힌 노후준비 지원, 생애경력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 보수교육 지속
 - 신중년 대상 일거리와 할거리에 대한 기회 제공 및 정보 지원 강화, 신중년 커뮤니티 지원

IV. 향후 과제

PART 4.

- 노후준비서비스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의 보편화(계속)
 - ✓ (서비스 간 협력 및 연계) 유사 서비스 간 협력 공식화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통합 조정 등 개편
 - ✓ (서비스의 내실화) 영역별로 균형잡힌 노후준비 지원, 생애경력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 보수교육 지속
 - 신중년 대상 일거리와 할거리에 대한 기회 제공 및 정보 지원 강화, 신중년 커뮤니티 지원

IV. 향후 과제

PART 4.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조기 안착 및 단계적 확대
 - ✓ (서비스 표준모델 제시 및 교육 지원) 기업의 서비스 운영모델 제공 및 운영자 교육 지원
 - ✓ (서비스 연계 활용) 노후준비서비스와 연계하여 민간강사, 교육 콘텐츠 등 활용
 - 생애경력설계서비스와 연계하여 강사 풀 확보 및 서비스 콘텐츠 등 활용
 - ✓ (적용기업의 확대) 1,000명 이상 대기업 → 300명 이상 기업 → 300명 미만 기업 등

참고문헌

PART 5.

- ✓ 고용노동부(2021), 2021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2020),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 ✓ 여유진 외(2021예정),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 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과제: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통계청(2020a), 2020년 사회조사 결과, 2020.11.18.자 보도자료
- ✓ 통계청(2020b), 2019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0.12.24.자 보도자료
- ✓ 황남희 외(2020),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OECD(2019), Society at a Glance
- ✓ 내연금 홈페이지. <https://csa.nps.or.kr>
- ✓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 노사발견재단 홈페이지. <https://www.nosa.or.kr>
- ✓ 장년워크넷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

감사합니다

제3절 좌담회

1. 참석자

- 좌 장: 이금룡 학회장(한국노년학회)
- 토론자
 - 성혜영 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황윤주 센터장(서울50+재단), 김연숙 과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성인 대표(강화실크로드), 진경배 전문연구위원(한국세대융합연구소)

L: 이금룡/ K: 김연숙/ S: 성혜영/ C: 전성인/ J: 진경배/ HN: 황남희/
HY: 황윤주

2. 논의 결과

1부의 인터뷰 영상들을 보고, 영국의 사회 역사학자 피터 라슬렛(Peter Laslett)이 제시한 '제3기 인생'이 생각남.

본 좌담회는 노후준비와 노후설계, 은퇴 이후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적정 시기 및 정도,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의 인지도, 서비스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신중년, 전문가, 그리고 연구자와 함께 진행할 것임.

Q1. 신중년 노후준비 및 설계란?

신중년 분들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 (부모님 부양과 자녀 양육은 자연스러운 관례라 생각하며 노후준비를 준비하지 못함.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부터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때 50+재단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게 됨.)

노후준비란 건강한 상태로 소득과 같은 일정한 경제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L: 재무적, 활동적 그리고 건강의 여건에 대해 말씀해주셨네요.

C: 신나야 하고, 모임을 통해 가치실현을 하는 것. 즉, 노후준비는 **즐겁고, 가치실현이 가능한 모임에 참여하여,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

L: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S: 기존의 노후란 제1직업에서 은퇴하는 것이었다면, 현재는 연령을 기준으로 65세 이후의 생활/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노후의 의미가 변화함. 노동 인력의 변화에 따라 종신고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임.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임.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일자리 준비와 주거 준비가 노후준비라고 생각할 수 있음.**

L: 노후의 시기와 노후준비 시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셨네요.

HY: 인생 이모작을 고민하며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수요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50대부터 기력이 쇠함을 느낀다는 결과들이 나옴. 최소 10년, 최대 20년 사이에 건강할 때 노후를 준비해야 함.

은퇴 이후 ①탐색과 배움, ② 주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일과 활동과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함. 경력 및 경험을 살려서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으로 창업/창직을 실패하지 않도록 가교적 일 자리를 만들어야 함. (현재 50+재단에서는) 은퇴 일자리 제공 서비스 등을 통해 온전하게 일자리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년 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음.

L: 스스로 나의 노후를 탐색하고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주셨네요.

HN: 노후의 계획의 기회, 어떤 노후를 보낼지, 은퇴 예정이 언제인지, 은퇴 후 소득 등에 대한 노후에 관한 생각과 계획 등 구체적으로 **노후 준비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함.

L: 노후준비의 의미를 강조하셨네요.

K: 어려서부터 장래 희망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듯이, 중년 이후에도 노년을 위한 준비, 설계, 그리고 실행이 필요함. **개개인의 관점에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미래 고령화 사회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며,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큰 틀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I: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으로 제정하여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이지만, 서비스의 인식과 이용률이 낮은 안타까운 상황임. 개인이 스스로 탐색하고 계획하여 앞서 언급된 4가지 틀(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외에도 안전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함. 재무와 건강이 안전의 욕구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나, 여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Q2. 노후준비 및 설계를 시작해야 할 적당한 연령은?

C: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어떨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인식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인식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J: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게 맞음. 경제적 소득이 생길 때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는 직장 및 정부에서 인식을 더욱 확산하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L: 두 분 모두 빠를수록, 직장 취업과 함께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의견 주셨습니다.

HN: 노후준비는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음. **직장을 가지거나 경제적 수입이 생기기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학령기(초등학교)때부터 노후준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함.

S: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말씀해주셨는데, 초등교육과정에 사회보험 등과 관련된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내용을 추가하기 보다는 전달력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40대 초중반에는 제2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 그리고 50대에는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듯이 연금 소득이 준비된 분들은 은퇴 이후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 고민 등이 많음. **나이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고민이 다름.**

L: 노후 준비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고, 영역에 따라 준비를 하는 나이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과, 인식은 빠를수록 좋다는 공통된 의견 주셨네요.

HY: **40대~50대 초중반이 재정적으로 적절한 나이**라고 생각됨. 노후 준비는 노년기를 앞둔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청·중장년층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접근도 필요함.

K: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생 4단계를 배움. 노후준비는 3단계에서 진행해야 하며, 생애말기인 4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에 담고자 추진 중임. **인식이 빠를수록 생애주기별 삶 전체를 조망하며, 영역별, 개인별 준비가 수월할 것.**

L: **Q3. 인지도와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를 높이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후준비 서비스의 공급에 비해 그 인식과 이용률이 낮아 속상함. 홍보에 노력을 더해 연금 가입 및 가입 후 예상

연금액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음. 이러한 홍보효과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 서비스 및 노사발전재단 서비스 등 효과성을 높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L: 제공자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인 수요자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C: 강화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A는 ~가 필요하며 ~한 도움을 줄 수 있고, B는 ~를 필요로함' 등을 작성해두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J: 서비스의 유무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무지할 것. **지인 추천**으로 우연히 서울시50+재단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재단을 접하여 노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처음엔 흥미가 없었지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었음. 교육도 받고,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또한 받은 교육과 기존의 경력을 기반으로 하여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음.

L: **Q4: 노후준비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50+재단의 서비스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S: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형식은 ① **진단**, ② **상담**, ③ **교육**, ④ **관계기관 연계** 형태의 사후관리 식으로 진행됨.

노후준비정도에 대한 설문에 참여하며 진단 후, 결과를 가지고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교육을 받음. 교육받은 뒤 관계 기관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 포괄적이지 않아 지자체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

L: 총 4개의 서비스체계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가장 잘 되고 있는 영역과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S: 황남희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중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2020년 기준) 월평균 약 48만원정도 받는데, 2021년엔 53만원정도이며, 20년 이상 가입자들은 93만원, 30년 이상은 130만원을 받고 있음. 소득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에 강한 만큼 재무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심층적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중. 이와 반대로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는 아직 개선을 해야할 부분임. 사후관리 시 연계가 필요한 노후 관련 사업분야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함.

L: 재무적 준비는 이른시기부터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군요. 50+재단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HY: 본 재단에서는 ① **상담**, ② **교육**, ③ **일자리**의 세 가지 카테고리에 서 서비스를 제공함. 상담은 단일화를 지양하며, 은퇴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며, 누구와 얘기할지 고민인 분들에게 제공. 교육은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한 탐색/모색하는 과정으로 관심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교육을 제공함. 일자리는 사회공헌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보람일자리’ 사업을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대인관계 형성, 교육, 사회참여, 그리고 일자리 제공 서비스를 제공함.

L: 50+재단의 운영위원회로 참여하며 현장에서도 실감하였는데, 대표적인 교육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HY: 대표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여행 관련 교육 커리큘럼이 인기가 많았는데, 여가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함. 진경배(신중년 대표)님께서도 참여하셨던 인생학교도 인기가 많았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을 때는 6:1이었음.

L: 여가가 자원봉사로, 자원봉사가 일자리로 선순환이 이뤄짐. 이러한 선순환이 가능케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함.

C: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했었음. 아이(자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상제작 교육에 참여하여 1~2달 정도 교육을 받음. 나중에는 신중년을 맞은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도구로 내가 만든 것, 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었음.

J: 다양한 교육을 받았으며, 어학당이 좋았음. 아쉬웠던 점은 **일자리가 단기적이고 단절적**이라는 것.

L: 일자리의 지속성에 있어 어려움이 분명 있음.

Q5.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제공자 의견

S: 노후준비 정책을 추진하며,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준비영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세대마다 특성이 다르고, 세대 특성은 빠르게 교체됨. 법에서 규정하는 4가지의 서비스 내용 외에도 일자리와 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함.

HY: 정부지원 및 세금으로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고민해봐야함. 일자리 지속에 재정지원의 확보가 필요하나, 일자리 창출에는 기업 및 일자리 제공 기관들이 기회를 제공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연구자 의견

HN: 정책 제언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항상 제언함. 우선, one-stop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노후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단위의 연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바탕이 되어야하므로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신중년 의견

J: 시니어 일자리는 노후준비의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함. 재생산 구조를 봤을 때 투자 개념이 되어야함. 단절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C: 국민연금공단의 신뢰도가 높은 만큼 인식 확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제공이 필요함. 예를 들어 교통수단에 있어서 버스요금 지원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후에는 택시까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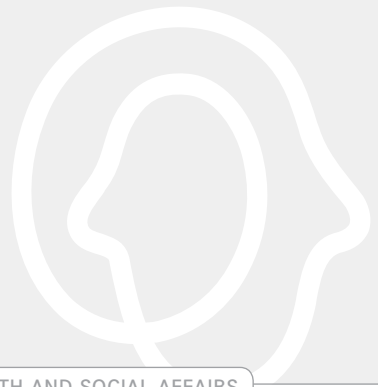
정부관계자 의견:

K: 앞서 말씀 주신 부분들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 3가지 관점에서 노력할것임.

① 노후준비 기회의 인식 보편화 (실제 경험, 사례, 인프라 및 전문성 확대/강화), ② 여러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체계를 구축, ③ 일자리 서비스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현하기 위한 다부처간, 범부처적인 수립 및 연계를 진행하고자 노력할 것.

L: 좌담회에서 논의된 노후준비 서비스 외에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보장과 건강보장 등이 있으며, 이 또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고 영위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노후준비 및 설계의 책임을 지는 것보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신경 써주면 개인의 부담을 덜며 노후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좌담회를 시청하신 여러분께서도) 노후준비 및 노후설계의 의미와 필요성을 더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인식 확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만큼 주변에도 노후준비 및 설계에 대해 널리 퍼뜨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장

제26회 인구포럼 : 청년의 노동과 결혼·출산: 젠더와 계층의 교차로

제1절 비혼의 확산과 불안정한 젠더혁명

제2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성 근로자의 출산의 기회비용

제3절 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 변화: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제4절 종합 토론



제 4 장

제26회 인구포럼 : 청년의 노동과 결혼·출산: 젠더와 계층의 교차로

제1절 비혼의 확산과 불완전한 젠더혁명¹⁴⁾

제26회 인구포럼(2021.1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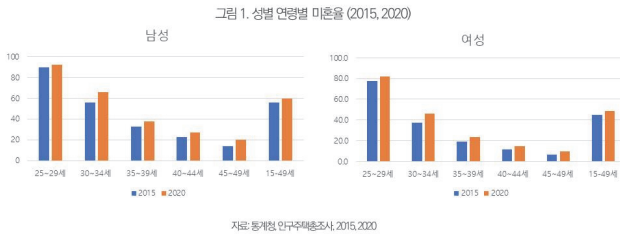
비혼의 확산과 불완전한 젠더혁명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4) 발표자 : 최선영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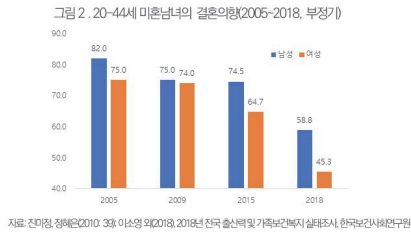
1. 문제제기(1): 비혼의 확산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동계정) 결과: 25-49세 사이 모든 연령층, 남성과 여성 모두 비혼인구 비중이 늘어남



1. 문제제기(2): 결혼의향의 감소

- 2005년 이후 20~44세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추이: 2015년 이후 결혼의향도 하락함. 특히 여성의 결혼의향이 급격히 낮아짐.



2. 연구배경

● 젠더혁명

- 일반적으로 젠더혁명이란 성역할변화를 의미하며, 주로 여성의 생산·노동참여 및 생애취업지향에 따라 기존의 여성화된 생애과정 및 결혼/출산율 등의 인구학적 결과, 가족 내 젠더 관계 등에 나타난 변화를 지칭한다(Goldin, 2006;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Goldscheider et. al, 2015).
- 젠더혁명은 교육 및 취업과 같은 실천적 특성뿐만 아니라 성평등주의라는 가치지향도 내포한다(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여성들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중산층 전업주부형 생애모델로부터 생애취업 추구로 전환하는 것은 삶의 자립성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 및 가치와 관련이 있다(Goldscheider and Sassler, 2018). 미국 등에서는 고소득여성의 규모가 커지고 생애취업에 대한 보상이 커진 데 대한 합리적 선택이기도 하다(Goldin, 2006). 핵심은 '정체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배경

● 한국사회와 젠더혁명

- 한국 기혼여성의 취업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소위 M자형 취업단절이 강하다. 중간소득층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이 덜 발달되어 있고, 강한 모성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남녀임금격차가 여전히 커서, 생애취업추구의 동기구조가 취약하다. 한국사회의 젠더혁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 그러나 젠더혁명은 일회적인 사건이거나 대대적인 격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동학으로 이루어진다. 골딘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젠더혁명은 점진적인 변화기간과 결정적인 변화기간으로 이루어진다. 에스핑엔더슨과 빌리리는 젠더혁명 개념대신에 젠더균형 개념을 주장하는데, 기존의 젠더균형에서 이탈하여 다른 젠더균형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경로가 매우 동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골드사치더 등은 명시적으로 젠더혁명이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 따라서 젠더혁명의 개시단계, 젠더혁명의 전개 및 확산, 젠더혁명의 완성 등을 분석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연구배경

- 동적 과정으로서 젠더혁명 가설: 개시, 확산, 완성

	개시	확산	완성(안정화)
혼인행동	초혼연령상승	생애비혼 확산	결혼, 비혼, 동거 등 다양화
계층	고학력/취업자의 초혼연령상승	상위안정계층 vs. 하위불안정계층	파트너십과 계층간 연관성 모호해짐
결혼규범	연령규범 침식	결혼규범 침식 (결혼의향의 분화)	새로운 결혼양식과 규범
지배적 젠더규범	전통적 젠더규범	젠더규범의 혼란	새로운 젠더 규범

3. 기존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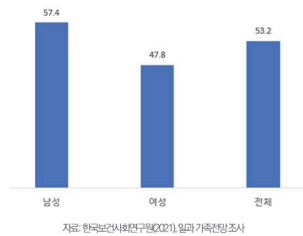
- 2000년대 연구: 결혼의향에 대한 국내 기존연구는 대부분 전국출산력조사 미혼남녀 조사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김정석(2006)은 2005년 자료를 분석하여 남녀의 결혼의향 결정요인을 분석. 성별에 따라 결혼의향의 결정요인이 다른데,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낮았지만, 여성은 학력과 결혼의향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진미정, 정혜은(2010)은 2005년과 2009년 자료 분석. 사회경제적 변수와 가치관변수(가족가치, 젠더규범 등)를 통해 남녀의 결혼의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 효과가 확인되지 않음. 성별효과는 결혼희망연령에만 영향을 미침. 취업 중이고 학력 높을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높게 나타남.
- 2010년대 연구: 고선강, 여성연(2013)은 2009년 자료를 통해 가구소득이 남성의 결혼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함. 권수연 외(2017)는 25-34세 미혼남녀 대상 온라인조사를 통해, 결혼의향을 설명함. 성별효과가 나타남. 여성의 교육년수와 정규직 지위가 결혼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 여성의 안정된 노동시장 지위가 결혼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침.

4. 연구 대상과 방법

- 연구대상: 25-44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 분석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5-44세 성인남녀의 일과 가족 전망조사
 - 조사대상: 전국 25-44세 성인남녀 3,000명(미혼1,343명)
 - 조사일시: 2021년 11월 10일-19일
 - 조사방법: 위탁조사업체의 패널활용 온라인조사
- 주요 설명변수
 - 객관적 계층지위: 교육수준, 월평균취업소득
 - 주관적 계층점수, 주관적 안정성점수
 - 가치관 변수: 성평등주의, 경제적 능력 우선주의
 - 고용안정성 변수: 직장유형, 이직횟수, 고용형태, 이직희망여부, 결혼후고용자속문화 등
 - 희망 근로시간형태

5. 조사결과(1): 결혼지연에서 비혼선택으로

그림3. 25-44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 결혼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 57.4%, 여성 47.8%로 나타남.
- 2018년 전국출산력조사 결과와 유사함.
- 2000년대 후반에는 결혼의향이 남녀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만 결혼희망연령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진미정, 정해은, 2010).
- 그러나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자체가 큰 폭으로 떨어짐(이소영 외, 2018).
- 결혼시점을 연기하는 것(2015년 이전)으로부터, 결혼의향을 낮추는 것(2015년 이후)으로 전환됨.
- 특히 2015년 이후 여성의 결혼의향이 더 크게 떨어짐.

5. 조사결과(2) : 희망 근로시간형태와 결혼의향의 관계

그림 4. 미혼남녀의 5년 후 원하는 근로시간형태(%)



- 여성: 일/커리어 중심태도 강하지 않고, 결혼의향과의 관계도 없음.
- 남성: 상대적으로 일/커리어 지향강하고 결혼의향과 관계가 있음. 특히 고소득 남성의 응답율(25.9%) 높음.
- 대체로 전일제 고용을 지향함.

	남성 의향없음	남성 의향있음	여성 의향없음	여성 의향있음
1) 최대한 일하고 싶다	22.6	24.5	14.0	15.1
2) 법정 근로시간만 일	60.6	67.3	73.2	72.5
3) 시간제로 일	7.3	2.4	5.8	6.6
4) 일을 안 하고 싶다	9.5	5.9	7.0	5.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3,1692***		0,764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일과 가족생활조사

5. 조사결과(3) : 가치관과 결혼의향의 관계

표 1.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 또는 '아이들 양육만 낯이 낫다'의 동의 비율(%)

	남성	여성
의향없음	25.4	14.5
의향있음	42.2	23.5
전체	35.1	18.8
(chi2)	(24.17***)	(7.68***)

- 전반적으로 미혼남녀의 가치관의 차이는 크다.
- 남녀 모두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혼의향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남성은 경제적 능력과 자녀출산의 관계에 대한 문항이 결혼의향과 관련이 높았고, 여성은 여성이 자녀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문항에 대한 태도가 결혼의향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양육에 더 적합하다의 동의 비율(%)

	남성	여성
의향없음	46.9	16.4
의향있음	49.7	25.4
전체	48.5	20.7
(chi2)	(0.81)	(6.87***)

6. 결혼의향의 결정요인 분석: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치관

- 분석대상: 25-44세 취업한미혼 남성, 미혼 여성
- 분석방법: 다항로지분석
- 종속변수: "귀하는 현재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에 대해 있다(=1), 없다와 '모르겠다'(=0)
- 독립변수: 5세연령집단, 교육수준, 월평균취업소득, 주관적 계층점수, 주관적 안정점수, 가치관 1, 가치관 2
- 그의 고용안정성 및 근로시간형태 등은 결혼의향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관적 안정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표3. 25-44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치관의 관계

독립변수		<전체>	<남성1>	<여성1>	<남성2>	<여성2>
성별(남성)	여성	-0.29*				
연령집단(25-29세)	30-34세	-0.17	-0.55*	0.23	-0.45*	0.27
	35-39세	-0.70***	-0.86**	-0.62*	-0.82**	-0.57
	40-44세	-1.11***	-1.21***	-1.10***	-1.01***	-1.20***
학력(고졸이하)	초대졸	0.44*	0.49	0.43	0.41	0.25
	대졸	0.63***	0.87***	0.43	0.76**	0.29
	대학원이상	1.08***	1.01**	1.23**	0.88*	1.00*
월평균취업소득 (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0.14	0.41	-0.11	0.26	-0.26
	250-300만원	0.56**	0.61*	0.59*	0.47	0.43
	300-350만원	0.73**	0.84**	0.62	0.63	0.35
	350-400만원	0.94*	0.87*	1.41*	0.49	0.94
	400만원 이상	1.05***	1.02**	1.37*	0.71*	0.90
주관적 계층점수(10점척도)				0.15	0.10	
주관적 안정점수(10점척도)				0.07	0.17*	
경제력과 자녀 태도	변태				-0.65**	-0.63*
성역할 가치관	변태				0.1	-0.57*
	정면	-0.19	-0.24	-0.44	-0.74*	-0.50
PseudoR2		0.0629	0.0616	0.0720	0.1023	0.1226
사례수		1,053	597	456	597	45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5-44세 성인남녀의 일과 가족 전망 조사

주: 주관적 계층과 생활안정성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계층이 높거나 안정적인, 자녀가치관은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녀를 원하면 낳아야 한다"이고 '성역할 가치관은 "여성! 남성보다 자녀양육에 적절하다"임.

- 첫번째 로짓분석에서, 연령집단을 통제했을 때,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취업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수와 무관하게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의향이 낮음. 성별은 결혼의향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표3. 25~44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치관의 관계

독립변수		<전제>	<남성1>	<여성1>	<남성2>	<여성2>
성별(남성)	여성	-0.29*				
연령집단(25~29세)	30~34세	-0.17	-0.55*	0.23	-0.45*	0.27
	35~39세	-0.70***	-0.86**	-0.62*	-0.82**	-0.57
	40~44세	-1.11***	-1.21***	-1.10***	-1.01***	-1.20***
학력(고졸이하)	초대졸	0.44*	0.49	0.43	0.41	0.25
	대졸	0.63***	0.87***	0.43	0.76**	0.29
	대학원이상	1.08***	1.01**	1.23**	0.88*	1.00*
월평균취업소득 (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0.14	0.41	-0.11	0.26	-0.26
	250~300만원	0.56**	0.61*	0.59*	0.47	0.43
	300~350만원	0.73**	0.84**	0.62	0.63	0.35
	350~400만원	0.94*	0.87*	1.41*	0.49	0.94
400만원 이상	1.05***	1.02**	1.37*	0.71*	0.90	
주관적 계층정수(10점척도)				0.15	0.10	
주관적 안정정수(10점척도)				0.07	0.17*	
경제력과 자녀 태도	반대			-0.65**	-0.63*	
성역할 가치관	반대			0.1	-0.57*	
절편		-0.19	-0.24	-0.44	-0.74*	-0.50
Fvalue/R2		0.0629	0.0616	0.0720	0.1023	0.1226
사례수		1,053	597	456	597	45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5~44세 성인남녀의 일과 가족 전망 조사

주: 주관적 계층과 생활안정성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계층이 높거나 안정적인, 자녀가치관은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녀를 원하면 낳아야 한다'이고 '성역할 가치관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양육에 적합하다'임.

- 남성1과 여성1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즉,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상위계층의 남성과 여성이 결혼의향이 높고, 반대로 사회경제적하위계층이 결혼의향이 낮으며, 남녀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줌.
- 젠더역명의 확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2. 25~44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치관의 관계

독립변수		<전제>	<남성1>	<여성1>	<남성2>	<여성2>
성별(남성)	여성	-0.29*				
연령집단(25~29세)	30~34세	-0.17	-0.55*	0.23	-0.45*	0.27
	35~39세	-0.70***	-0.86**	-0.62*	-0.82**	-0.57
	40~44세	-1.11***	-1.21***	-1.10***	-1.01***	-1.20***
학력(고졸이하)	초대졸	0.44*	0.49	0.43	0.41	0.25
	대졸	0.63***	0.87***	0.43	0.76**	0.29
	대학원이상	1.08***	1.01**	1.23**	0.88*	1.00*
월평균취업소득 (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0.14	0.41	-0.11	0.26	-0.26
	250~300만원	0.56**	0.61*	0.59*	0.47	0.43
	300~350만원	0.73**	0.84**	0.62	0.63	0.35
	350~400만원	0.94*	0.87*	1.41*	0.49	0.94
400만원 이상	1.05***	1.02**	1.37*	0.71*	0.90	
주관적 계층정수(10점척도)				0.15	0.10	
주관적 안정정수(10점척도)				0.07	0.17*	
경제력과 자녀 태도	반대			-0.65**	-0.63*	
성역할 가치관	반대			0.1	-0.57*	
절편		-0.19	-0.24	-0.44	-0.74*	-0.50
Fvalue/R2		0.0629	0.0616	0.0720	0.1023	0.1226
사례수		1,053	597	456	597	45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5~44세 성인남녀의 일과 가족 전망 조사

주: 주관적 계층과 생활안정성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계층이 높거나 안정적인, 자녀가치관은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녀를 원하면 낳아야 한다'이고 '성역할 가치관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양육에 적합하다'임.

-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성격의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남성2와 여성2모형을 구성함.
- 주관적 계층점수와 주관적 안정점수를 모형에 포함한 결과, 기존 학력 및 소득 변수의 회귀계수값이 작아지거나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함. 남성2보다는 여성2에서 두드러짐.
- 여성2 모형에서만 주관적 안정점수의 효과가 확인됨. 현재 자기 생활이 안정적인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짐.

표3. 25~44세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치관의 관계

독립변수	<전체>	<남성1>	<여성1>	<남성2>	<여성2>
성별(남성)	-0.29*				
연령집단(25~29세)	30~34세	-0.17	-0.55*	0.23	-0.45*
	35~39세	-0.70***	-0.86**	-0.62*	-0.82**
	40~44세	-1.11***	-1.21***	-1.10***	-1.01***
학력(고졸이하)	초대졸	0.44*	0.49	0.43	0.41
	대졸	0.63***	0.87***	0.43	0.76**
	대학원이상	1.08***	1.01**	1.23**	0.88*
월평균취업소득 (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0.14	0.41	-0.11	0.26
	250~300만원	0.56**	0.61*	0.59*	0.47
	300~350만원	0.72**	0.84**	0.62	0.63
	350~400만원	0.94*	0.87*	1.41*	0.49
400만원 이상	1.05***	1.02**	1.37*	0.71*	
주관적 계층집수(10점척도)				0.15	0.10
	주관적 안정집수(10점척도)			0.07	0.17*
경제력과 자녀 태도	변태			-0.65**	-0.63*
	변태			0.1	-0.57*
성역할 가치관	평면	-0.19	-0.24	-0.44	-0.74*
	Progress	0.0609	0.0616	0.0700	0.1003
사례수	1,053	597	456	597	45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5~44세 성인남녀의 일과가족 전망 조사

주: 주관적 계층과 생활안정성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계층이 높거나 안정적인, 자녀가치관은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녀를 원하면 낳아야 한다"이고 '성역할 가치관은 '여성' 남성보다 재취업에 적합하다'임

- 가치관은 남녀 모두의 결혼의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녀를 원하면 낳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결혼의향이 높았음. 남녀 모두에서 나타난 경향임.
- 여성은 성평등주의 가치관을 가질수록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남.
- 결론적으로,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위계와 젠더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관적 평가와 가치관을 매개하여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7. 연구결과 요약

- 1) 2010년대 이후 결혼규범(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은 크게 약화되었고, 이에 더하여 개인의 결혼의향도 분화되고 있음. 결혼의향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의향이 더 낮게 나타남.
- 2)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이 결혼의향의 차이를 설명해줌.
- 3) 여성은 현재 삶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성평등가치관을 가질수록 결혼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4)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생애과정 의사결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경제중심적 사고가 널리 확산되어 있고, 남녀 모두의 결혼의향과 상관관계가 높음.
- 5) 2000년대 초부터 나타난 결혼행동의 변화(젠더혁명의 개시)는 질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결혼행동 뿐만 아니라 결혼의향이 계층적으로 분화되고 있음.

8. 토론

- 여성들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변수보다 주관적인 안정성 척도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가 개인이 체감하는 안정성 정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음.
- 주관적 안정성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OLS분석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직장유형, 정규직여부, 현직장이직의향, 결혼후고용유지전망 등이 현재 삶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확인됨. 노동시장제도와 문화로부터 불리한 경험이 축적된 것이 '불안정성'을 높이고 이것이 여성들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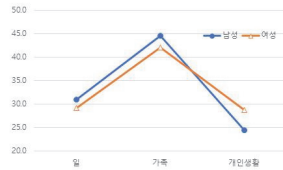
8. 토론

- 일반적으로 결혼의향은 결혼행동의 예측지표로 간주됨. 그러나 현재 결혼의향 수준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도 함. 따라서 결혼의향을 결혼에 대한 태도나 의미를 표현하는 지표로 재해석해볼 수도 있음.
- 남녀 모두 가족(자녀) 생애과정 결정을 경제적 능력에 종속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태도는 합리적이거나 현실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음. 그러나 결혼의향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 생애과정 변화에 따르는 위험이 집단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위험으로 인식될 수록 결혼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성평등주의 가치관을 가질 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의 현실이 성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내포되어 있음. 다만, 여성 행위자들이 성평등주의를 동원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함.

8. 토론

-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향후 일-가족-개인생활의 상대적 비중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음.

그림 5.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남녀의 결혼 후 지향하는 일-가족-개인생활의 비중(%)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5~44세 미혼남녀의 일과 가족 전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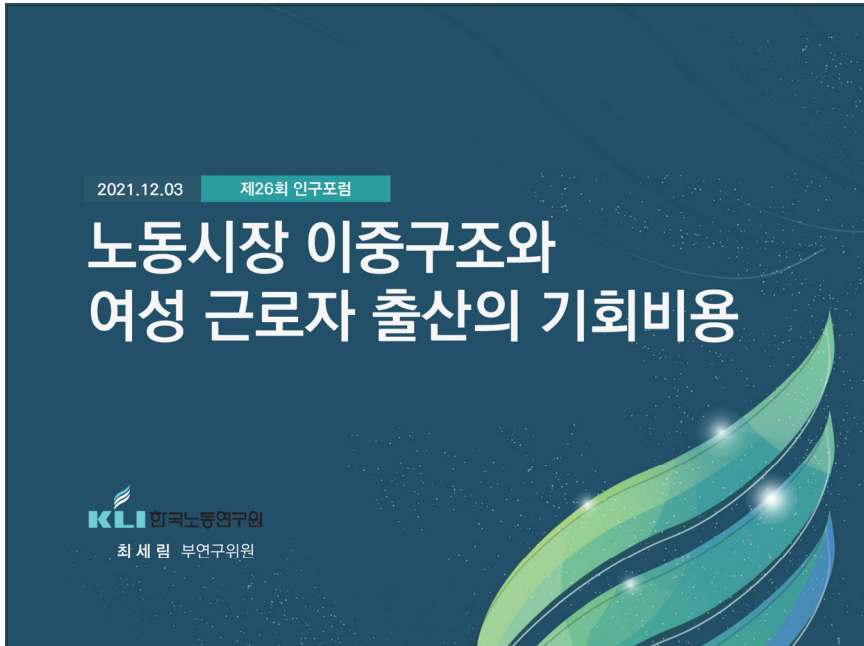
-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은 남녀 모두 가족에 가장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으로 일과 개인생활을 중요시함.
- 다만, 여성은 일과 가족을 의무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개인생활에 중요성을 높게 부여한 반면, 남성은 일 중심 시간을 할피하여 가족생활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보임.

	남성	여성	F값	Prob>F
일	31.0	29.2	3.05	0.0814
가족	44.6	42.1	5.78	0.0165
개인생활	24.4	28.7	18.51	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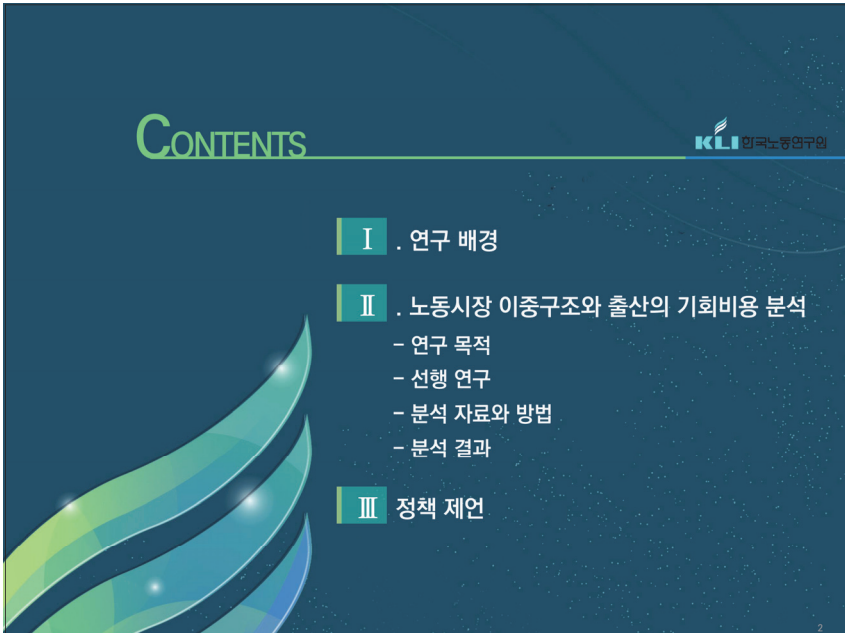
8. 토론

-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실제로 결혼이행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결혼의향도 높고, 반대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실제로 결혼이행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결혼의향도 낮다는 것은 실제 결혼생활과 젠더관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축할 수 있는 역량과 기대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
- 최근 10년 간의 결혼은 어떻게 성사되고 그 속의 젠더관계는 어떠한가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혼인의 보편성을 전제했던 정책에서 혼인의 선택성과 사회계층적 위계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젠더혁명이라는 사회구조적 변화 동안 발생하는 위험을 개인화하기보다는 집단화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함.

제2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성 근로자의 출산의 기회비용¹⁵⁾



15) 발표자 : 최세림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CONTENTS

KLI 한국노동연구원

- I . 연구 배경**
- II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 분석**
 - 연구 목적
 - 선행 연구
 - 분석 자료와 방법
 - 분석 결과
- III 정책 제언**

2



KLI 한국노동연구원

I 연구 배경

3

01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개인의 출산 선택의 관련성 KLI 한국노동연구원

- ❖ **노동~출산 결정의 관계:**
경제학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출산 결정을 살펴보면, 출산 선택은
 - 단기적으로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 장기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추가시간 투입을 위하여 노동시장에 투입하는 시간을 대체하여야 해서, 노동 소득 손실을 유발 → 출산의 기회비용(Becker, 1965; Mincer, 1962 등)
 - * 대체되는 기회비용: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시간, 미래 소득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교육, OJT, 임금 고정성형 직무/일자리 선택 등)
-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 노동시장 이중구조: 일자리의 좋은 요소들이 좋은 요소는 좋은 요소끼리, 나쁜 요소는 나쁜 요소끼리 결합되어 일자리들이 양분화 되는 현상(Dickens and Lang, 1987)
 -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1차 노동시장")들은 높은 임금, 높은 고용안정성, 다양한 복지혜택, +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모성보호제도 활용의 용이성이 높음.
 - 반면 좋지 않은 일자리("2차 노동시장", 외부 노동시장)은 반대.
 - 공공부문/대기업 근로자의 자녀 출산이 활발하고, 제도 활용이 활발한 것을 볼 때 분명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

4

01 | 기업 규모별 출산여건-임신·출산 KLI 한국노동연구원

항목	응답 내용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출산 휴가	인지도	잘 알고있다	50.3	54.9	66.1	73.6	89.5
	활용 가능성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42.6	59.8	70.6	82.5	95.8
		활용 가능하나, 직장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23.0	29.9	19.4	15.0	3.8
		전혀 활용할 수 없음	34.3	10.3	10.0	2.5	0.3
배우자 출산 휴가	인지도	잘 알고있다	36.6	52.1	59.8	73.7	87.1
	활용 가능성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41.0	46.1	60.9	68.4	76.5
		활용 가능하나, 직장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26.5	33.0	25.3	22.1	17.8
		전혀 활용할 수 없음	32.5	20.9	13.7	9.5	5.6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인지도	잘 알고있다	24.8	36.2	51.9	59.1	79.8
	활용 가능성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39.2	46.9	62.2	68.9	81.9
		활용 가능하나, 직장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27.5	35.8	25.3	23.3	13.9
		전혀 활용할 수 없음	33.2	17.3	12.6	7.8	4.2
기타 모성 보호 제도	유사산 휴가	활용가능(예 응답)	47.6	71.4	84.5	85.6	92.2
	임신 중 시간외 근무 금지	활용가능(예 응답)	49.2	74.0	85.4	86.5	93.7
	임신 중 위험 유해 직무 금지	활용가능(예 응답)	25.0	38.5	43.9	46.3	57.6
	출산 후 시간외 근무 금지	활용가능(예 응답)	42.1	69.1	82.2	82.2	92.4


5

01 | 기업 규모별 출산여건-육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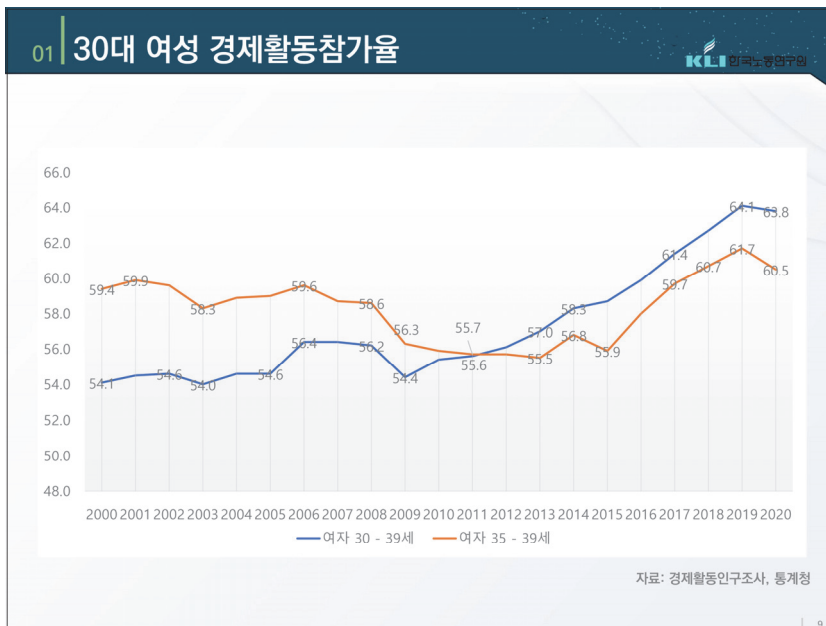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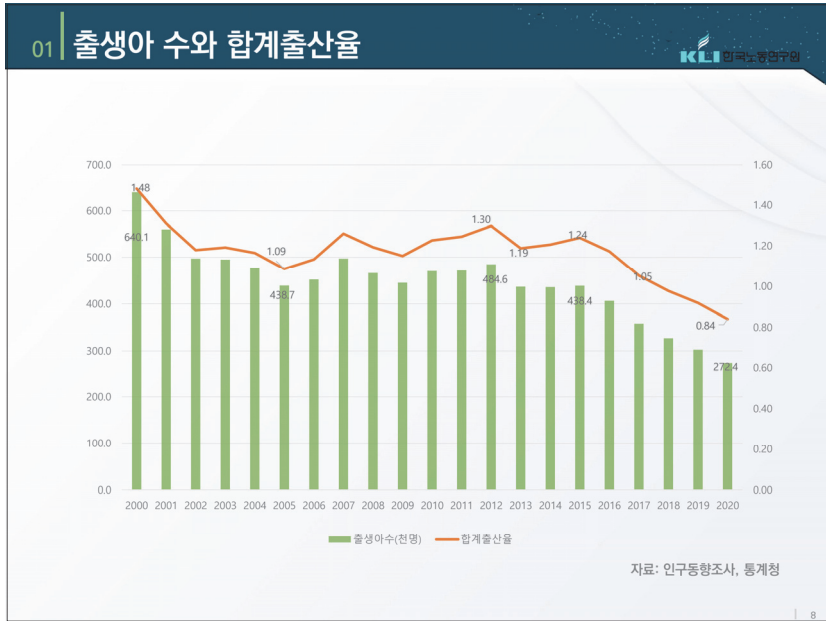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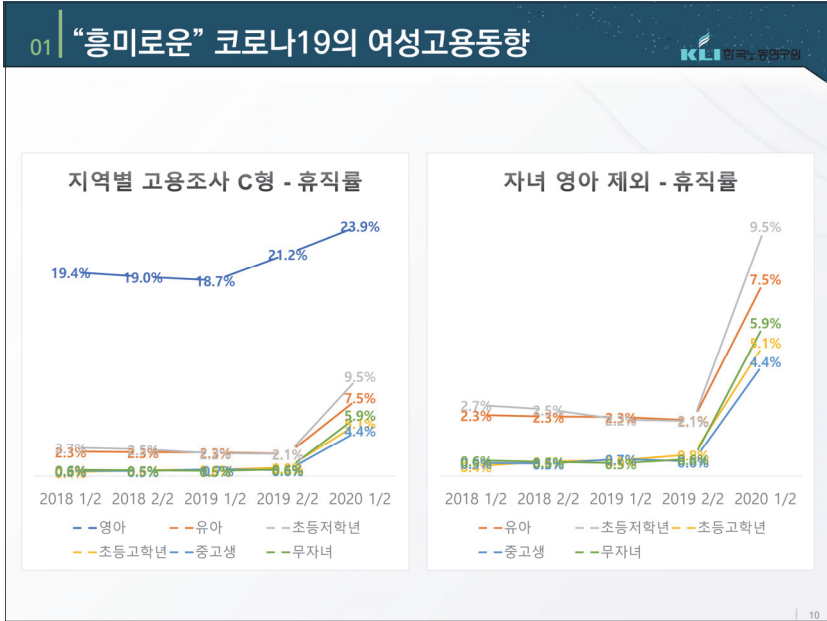
항목	응답 내용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육아 휴직 제도	인지도	잘 알고 있다				
		25.0	37.3	56.5	63.1	86.2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36.3	46.7	60.4	65.5	85.4
	활용가능성	활용 가능하나, 직장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24.2	34.0	24.3	19.5	8.8
		전혀 활용할 수 없음				
		39.5	19.3	15.3	15.0	5.8
	활용 실적	"있다" 비중				
		2.5	5.7	14.2	39.3	89.9
육아휴직 사용 부담 정도	활용실적 없는 이유	대상자가 없어서				
		89.0	89.0	85.0	83.0	84.0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11.0	11.0	15.0	17.0	16.0
		연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				
		44.4	44.0	52.1	64.5	74.7
	신청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낌					
	36.1	35.8	39.0	27.4	24.0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					
	19.5	20.2	8.9	8.1	1.4	
육아기 근무 단속 제도	인지도	잘 알고 있다				
		14.8	24.5	41.8	49.3	72.7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36.1	43.0	50.9	56.0	67.7
	활용 가능하나, 직장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36.6	41.8	40.8	26.8	21.1	
	전혀 활용할 수 없음					
	27.3	15.2	8.3	17.2	11.1	

01 | 기업 규모별 출산여건-임신·출산



자료 및 표본 구분		지역별고용조사 C형 2019년 하반기(여성 25-45세)			한국노동패널 12-21차(기준, 25-39세)		
		자녀있음(%)	평균 자녀 수	유자녀자 자녀 수	자녀있음(%)	평균 자녀 수	유자녀자 자녀 수
경제 활동	참가	49%	1.07	1.74	78%	1.33	1.75
	비참가	68%	1.72	1.76	88%	1.53	1.73
고용 형태	정규직	47%	1.65	1.73	82%	1.2	1.66
	계약종료되는 상용직	47%	1.67	1.74	88%	1.45	1.81
	임시/일용직	55%	1.69	1.77			
	비임금근로	57%	1.69	1.77	87%	1.61	1.95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69%	1.76	1.82	85%	1.57	1.85
	200만원 이하	48%	1.65	1.75	72%	1.23	1.7
	300만원 이하	42%	1.62	1.68	72%	1.19	1.66
	300만원 이상	62%	1.65	1.68	81%	1.41	1.74
사업체 유형	소기업(50인 미만)				82%	1.29	1.76
	중기업(50-300인)				80%	1.07	1.55
	중견기업(300-1,000인)				81%	1.25	1.68
	대기업(1,000인 이상)				87%	1.28	1.66
	공공부문				88%	1.35	1.69





II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 분석

• 본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출산과 여성노동’의 제2장으로 수록된 내용입니다.

11

02 연구 목적

- ❖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출산의 기회비용 격차를 확인
- ❖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비슷한 상황의 “선배”의 경험이 미출산 여성들의 출산의 기대 기회비용을 형성하는 정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출산의 기대 기회비용에 포함되는 항의 값을 이중 노동시장으로 구분되는 집단별로 추정하여 출산의 기대 기회비용의 격차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02 자녀출산의 생애 기대 기회비용

- ❖ 현재($\tau=0$) 노동시장에서 상태(L_0), 기타 자신의 조건(X_0)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예상 임금 흐름(income stream), 출산을 하게 될 때, 생산성 손실이나 경력 손실로 인하여 얻게 될 임금 흐름을 예상한다고 가정

- $\{W_1, W_2, W_3, \dots, W_T\}$: L_0, X_0 바탕으로 한 비출산 시 예상 임금 흐름
- $\{\bar{w}_1, \bar{w}_2, \bar{w}_3, \dots, \bar{w}_T\}$: L_0, X_0 바탕으로 한 출산 시 예상 임금 흐름
- $\{\pi_1, \pi_2, \pi_3, \dots, \pi_T\}$: L_0, X_0 바탕으로 한 출산 시 생산성 및 경력 손실 확률
- $\{\tilde{\pi}_1, \tilde{\pi}_2, \tilde{\pi}_3, \dots, \tilde{\pi}_T\}$: L_0, X_0 바탕으로 한 출산 시 노동 이탈(무소득/비경활 이행) 확률

- ❖ 이 경우, t 시점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출산의 생애 기대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다.

$$E^t_{C_0} \text{자녀출산의 생애 기대 기회비용} = \text{투자자녀 기대 생애임금} - \text{유자녀 기대 생애임금}$$

$$E^t_{C_0} | L_0, X_0 = E^t(\text{total wage}_{nochild} | L_0, X_0) - E^t(\text{total wage}_{haschild} | L_0, X_0)$$

02 | 자녀출산의 생애 기대 기회비용

❖ 즉, 생애 기대 기회비용은 각 기 예상 임금 손실 규모와 생산성 및 경력 손실 가능성, 노동 이탈 가능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 't'시점 출산의 기회비용을 현재(0)시점에서 예측한 값은, 출산의 임금 패널티 수준, 노동시장 이탈 확률, 생산성 하락 확률, 무자녀 임금이 높을수록 크다.

$$\begin{aligned}
 E(C_{it}|L_{0t}, X_{0t}) &= \left[W_{1t} + \frac{1}{1+r} W_{2t} + \frac{1}{1+r^2} W_{3t} + \dots + \frac{1}{1+r^t} W_{it} + \dots + \frac{1}{1+r^T} W_{Tt} \right] \\
 &\quad - \left[W_{1t} + \frac{1}{1+r} W_{2t} + \dots + \frac{1}{1+r^t} (W_{it}(1-\pi_t - \tilde{\pi}_t) + \bar{W}_t \pi_t) \right. \\
 &\quad \quad + \frac{1}{1+r^{t+1}} (W_{t+1}(1-\pi_{t+1} - \tilde{\pi}_{t+1}) + \bar{W}_{t+1} \pi_{t+1}) \\
 &\quad \quad + \dots + \frac{1}{1+r^T} (W_{Tt}(1-\pi_T - \tilde{\pi}_T) + \bar{W}_T \pi_T) \left. \right] \\
 &= \frac{1}{1+r^t} (\pi_t (W_t - \bar{W}_t) + \tilde{\pi}_t W_t) + \dots \\
 &\quad + \frac{1}{1+r^T} (\pi_T (W_T - \bar{W}_T) + \tilde{\pi}_T W_T) \\
 &= \sum_{j=t}^T \frac{1}{1+r^{j-t}} [(W_{jt} - \bar{W}_{jt}) \pi_{jt} + W_{jt} \tilde{\pi}_{j-t}] \\
 &\quad \text{where } r = \text{discount rate (이자율)}, T = \text{은퇴시점}, t+K = T
 \end{aligned}$$

14

02 | 연구 내용

❖ 다음에 대하여 추정함

- (1) 노동시장 위치 별 자녀 출산이 임금 손실 규모 격차
- (2) 노동시장 위치 별 자녀 출산이 노동 이동 이탈 확률 격차

❖ 그 후, 집단별 생애 기대 기회비용의 격차를 가능할 수 있는 수치를 계산함.

15

02 | **선행연구**

❖ **모성패널티 관련 연구**

- 1) 규모추정:
 - 국가별로 수준이 상이하지만 존재(7~20%대)
 - 대체로 패널모형, PSM 사용, 표본선택편의에 대한 논의는 부족
(Waldfoegel, 1998; Killewald et al, 2013; Lundberg & Rose, 2000; Adda et al, 2015; Kahn et al, 2014 등)
- 2) 원인 및 영향 요인:
 - 단기, 장기 경력단절
(Lundberg & Rose, 2000; Bertand et al, 2010; Budig & England, 2001; Grunner & Aisenbrey, 2016; Baum, 2002 등)
 - 생산성 하락(Gallen, 2018)
 - 가구내 가사노동 부담(Juhn & McCue, 2017; Siegel, 2017 등)
 - 일자리 유지 보장하는 모성보호제도: 모성패널티를 낮춤
(손연정 & 김근주, 2018; Baker & Milligan, 2008; Rossin-Slater et al, 2013; Lalive & Zweimuller, 2009; Yamaguchi, 2019 등)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에는 주로 자녀출산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이었다면, 본 연구는 노동시장 계층별 격차에 초점을 둔 연구

02 | **분석자료**

❖ **노동패널 1~22차 75~95년생 표본 중 20~45세이며(가임기) 처음으로 전일제 임금근로자로 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를 포함한 패널 표본 추출**

- 노동 및 출산 선호, 노동 환경 등이 유사한 집단(예-80년대생) 추출이 이상적이지만 표본 수 제약
- 코호트 특성은 패널 고정효과로 통제

❖ **표본 수 2,725개 627명**

❖ **계량 분석은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기(t+1) 이행과 현재(t기)의 임금에 대한 분석을 함.**

❖ **따라서 t기에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표본이 유효표본**

❖ **표본 수 2,050개(전일제 한정: 2,009개)**

❖ **선별적 노동참여 선택 이슈**

- 패널 고정효과 모형 사용으로 어느정도 해소
- * 시간불변 요인으로 인한 선별적 참여는 통제됨
- * Wooldridge(1995)방식으로 패널 표본선택 모형 추정시, 표본선택편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횡단면에서는 존재)

02 분석 표본 기초 통계



변수	관측 첫째 전체 표본			전체 패널 표본			임금근로자			전일제 임금근로자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연령	627	30.86	5.34	2,725	33.10	4.93	2,050	32.97	5.13	2009	32.93	5.12
75~79년생	627	0.26	0.44	2,725	0.39	0.49	2,050	0.39	0.49	2009	0.39	0.49
80~89년생	627	0.56	0.50	2,725	0.53	0.50	2,050	0.51	0.50	2009	0.50	0.50
90~95년생	627	0.18	0.39	2,725	0.08	0.27	2,050	0.10	0.30	2009	0.10	0.30
교육연수	627	14.78	1.76	2,725	14.86	1.75	2,050	14.94	1.79	2009	14.94	1.79
기혼	627	0.62	0.49	2,725	0.79	0.41	2,050	0.74	0.44	2009	0.74	0.44
자녀있음	627	0.30	0.46	2,725	0.61	0.49	2,050	0.54	0.50	2009	0.53	0.50
자녀 수(유자녀자)	190	1.57	0.68	1,661	1.63	0.63	1,098	1.66	0.63	1066	1.65	0.62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	160	4.03	4.03	1,596	4.05	3.36	1,040	4.27	3.48	1008	4.23	3.50
일할	627	1.00	0.00	2,725	0.77	0.42						
임금근로자로 일할	627	1.00	0.00	2,725	0.75	0.43						
서울거주	627	0.25	0.43	2,725	0.21	0.40	2,050	0.22	0.41	2009	0.22	0.42
광역시/특별시 거주	627	0.26	0.44	2,725	0.28	0.45	2,050	0.29	0.45	2009	0.29	0.45
경기도 거주	627	0.25	0.43	2,725	0.24	0.43	2,050	0.23	0.42	2009	0.23	0.42
기타 도 거주	627	0.24	0.43	2,725	0.27	0.44	2,050	0.26	0.44	2009	0.22	0.41

02 분석 방법



❖ Kahn et al(2014) 모형 참조

- 모성패널티(임금, 경력단절 위험)의 장기효과를 NLS-YW를 이용하여 분석
- 엄마의 연령대(20, 30, 40, 50대) × 자녀 수 변수 중심으로 FE 모형 추정

❖ 노동패널은 패널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 막내 자녀의 연령대 구간×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분석

❖ 노동시장 상대적 위치 별 효과 격차를 추정하여야 하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구분 변수를 생성 후 자녀연령대×자녀유무×노동시장위치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

❖ 막내 자녀 연령대×자녀 유무 (Cage)

- 0: 무자녀
- 1: 자녀 있음, 0~3세; 2: 자녀 있음, 4~9세; 3: 자녀 있음, 9세 이상

❖ 노동시장 구분: 윤희규 외(2018)과 Hudson(2007) 차용

- 구분변수: 저임금여부(법정 개인회생 3인 가구 소득기준), 비정규직 여부, 퇴직금 유무
- 0개 해당: 1차 노동시장
- 1~3개 해당: 중간 이하 노동시장
- 추가로, 공공부문/대기업(정규직)은 1차 노동시장 근무자 중에서도 별도로 구분함.

→ 총 3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변수 (D)

02 | 분석 방법

❖ 노동 이탈 확률 분석

- Drop1(노동이탈), Drop2(임금근로 이탈), Drop3(현재일자리 이탈)

$$Drop_{i,t+1} = \beta_0 + [D_0 \times CAge]_{i,t} \theta + X_{i,t} \gamma + t_t + a_i + \epsilon_{i,t}$$

- LPM + FE를 사용함(*패널길이 짧고, 불균형)

❖ 임금 손실 분석

$$\log wage_{i,t} = \beta_0 + [D_0 \times CAge]_{i,t} \theta + X_{i,t} \gamma + t_t + a_i + \epsilon_{i,t}$$

❖ 통제변수(X)

- 연령, 교육연수, 근로시간, 경력, 경력제곱, (월평균 실질임금, 임금제곱), 비근로실질소득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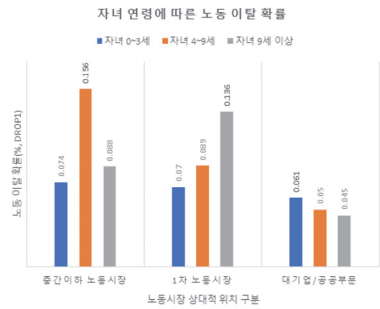
02 | 주요 변수 기초 통계

변수 내용	변수명	임금근로자		전일제 임금근로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노동이탈1	Drop1_t+1	0.07	0.26	0.07	0.25
노동이탈2	Drop2_t+1	0.08	0.27	0.08	0.27
노동이탈3	Drop3_t+2	0.39	0.49	0.39	0.49
실질임금	Wage_real	226.78	101.72	229.38	100.89
가장 어린 자녀 연령 3세 미만	Cage=1	0.26	0.44	0.26	0.44
가장 어린 자녀 연령 4-9세	Cage=2	0.20	0.40	0.20	0.40
가장 어린 자녀 연령 9세 이상	Cage=3	0.06	0.24	0.06	0.24
동거자녀 없음	Cage=0	0.47	0.50	0.48	0.50
중간 이하 노동시장	dualmkt=0	0.41	0.49	0.40	0.49
1차 노동시장	dualmkt=1	0.25	0.43	0.25	0.43
대기업 정규직/공공부문	dualmkt=2	0.34	0.47	0.35	0.48
주당 총 근로시간	total_hours	42.56	6.53	42.80	6.14
상봉직 총 경력(mo)	ttenure2	94.45	65.50	94.71	65.84
비근로가구소득	nonlabor_inc	242.53	203.77	241.17	204.39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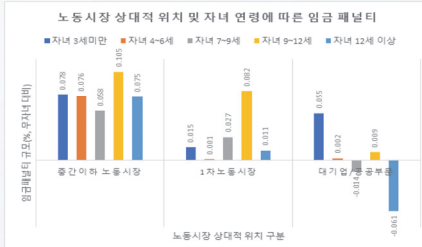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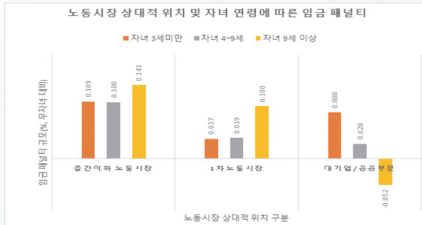
02 분석 결과 1: 노동 이탈 확률

FE	전체 임금근로자		전일제 임금근로자	
	Drop1	Drop2	Drop2	Drop3
중간이하 노동시장×자녀 3세 미만	0.074 (0.075)	0.102 (0.076)	-0.101 (0.096)	
중간이하 노동시장×자녀 4-9세	0.156** (0.076)	0.173** (0.081)	-0.017 (0.119)	
중간이하 노동시장×자녀 10세 이상	0.088 (0.101)	0.069 (0.100)	-0.029 (0.216)	
1차 노동시장×무자녀	0.007 (0.042)	0.013 (0.042)	-0.058 (0.064)	
1차 노동시장×자녀 3세 미만	0.077 (0.053)	0.084 (0.054)	-0.015 (0.071)	
1차 노동시장×자녀 4-9세	0.096 (0.059)	0.108* (0.060)	-0.015 (0.082)	
1차 노동시장×자녀 9세 이상	0.143* (0.080)	0.157* (0.084)	0.071 (0.110)	
대기업&공공부문×무자녀	0.045 (0.055)	0.058 (0.056)	-0.065 (0.073)	
대기업&공공부문×자녀 3세 미만	0.106* (0.056)	0.123** (0.056)	-0.005 (0.073)	
대기업&공공부문×자녀 4-9세	0.095 (0.068)	0.116* (0.069)	0.03 (0.087)	
대기업&공공부문×자녀 10세 이상	0.09 (0.070)	0.11 (0.073)	-0.07 (0.104)	




02 분석 결과 2: 임금 손실

logrealwage	임금근로자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간이하 노동시장×자녀 3세 미만	-0.109** (0.047)	-0.120*** (0.041)
중간이하 노동시장×자녀 4-9세	-0.108** (0.045)	-0.140*** (0.044)
중간이하 노동시장×자녀 10세 이상	-0.141* (0.080)	-0.140* (0.075)
1차 노동시장×무자녀	0.255*** (0.031)	0.238*** (0.027)
1차 노동시장×자녀 3세 미만	0.218*** (0.043)	0.197*** (0.040)
1차 노동시장×자녀 4-9세	0.216*** (0.050)	0.197*** (0.048)
1차 노동시장×자녀 9세 이상	0.155** (0.069)	0.124* (0.070)
대기업&공공부문×무자녀	0.172*** (0.043)	0.152*** (0.040)
대기업&공공부문×자녀 3세 미만	0.084 (0.053)	0.057 (0.048)
대기업&공공부문×자녀 4-9세	0.144*** (0.053)	0.114** (0.049)
대기업&공공부문×자녀 10세 이상	0.224* (0.117)	0.178 (0.117)



02 | 기회비용 격차



❖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출산의 기회비용 격차


$$\begin{aligned}
 Cost &= \sum_{j=0}^K \frac{1}{1+r^{t+j}} [(W_{t+j} - \tilde{W}_{t+j})\Pi_{t+j} + W_{t+j}\tilde{\Pi}_{t+j}], \\
 &\text{where } t+K = T \\
 &= \sum_{j=0}^K \frac{1}{1+r^{t+j}} W_{t+j} \left[\left(\frac{W_{t+j} - \tilde{W}_{t+j}}{W_{t+j}} \right) \Pi_{t+j} + \tilde{\Pi}_{t+j} \right] \\
 &\approx \sum_{j=0}^K \frac{1}{1+r^{t+j}} W_{t+j} [\theta^{\text{wage}}_{d,t+j} + \theta^{\text{drop1}}_{d,t+j}]
 \end{aligned}$$

Where, $\left(\frac{W_{t+j} - \tilde{W}_{t+j}}{W_{t+j}} \right) \Pi_{t+j} \approx \theta^{\text{wage}}_{d,t+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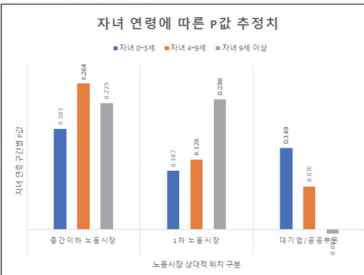
❖ 출산의 임금 기회비용 항: $[\theta^{\text{wage}}_{d,t+j} + \theta^{\text{drop1}}_{d,t+j}] = \rho_{d,t+j}$

| 24

02 | 기회비용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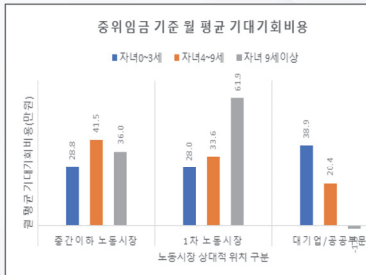


자녀 연령에 따른 p값 추정치



노동시장 상대적 위치 구분	자녀 0-3세	자녀 4-9세	자녀 9세 이상
풀타임의 노동시장	0.253	0.264	0.229
1차 노동시장	0.107	0.128	0.236
대기업/공공부문	0.149	0.07	0.000

중위임금 기준 월 평균 기대기회비용



노동시장 상대적 위치 구분	자녀 0-3세	자녀 4-9세	자녀 9세 이상
평균이상의 노동시장	29.8	41.5	36.0
1차 노동시장	29.0	33.6	61.9
대기업/공공부문	36.9	20.4	0.0

| 25



03 |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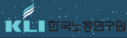
KLI 한국노동연구원

❖ 총평

- 모성보호, 육아휴직 보장 등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패키지는 마련되어 있고, 관대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청년정책 기본계획)
- 하지만 출산-양육 여건과 관련된 노동시장 격차는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일하는 부부의 출산선택에 중요한 제약요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책별 문제점 파악 & 정책 보완책 마련 필요.
 - 예)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 확대 및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각 일터에서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생적 변화를 유도해야 함.
- 자녀 돌봄 환경 측면에서, 자녀 연령대별 '단절'이 발생함
 -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 문제 심각
 - 초등학교 운영시간 연장 or 보편적/질 높은 돌봄 공급 필요

03

정책 제언



- 돌봄 여건 격차 문제에 역량 집중 필요
 - 해외 주요 연구에서 다양한 가족정책 중 아동 돌봄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출이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유일한 정책임이 확인됨. (Olivetti and Petrongolo, 2017)
- 초등 진학 이전 돌봄: 어린이집 or 유치원: 보편적 지원 (지역별 공급률 80~100 + α %)
 - 어린이집 & 유치원은 돌봄(심)+교육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전국 표준 과정과 일과가 있고, 만 2세 이상부터 각 어린이집, 유치원 별로 특별활동(미술, 음악, 체육, 외국어 등)을 월 15만원 한도내에서 일과시간 내 운영
 - 운영시간은 오전 7시~7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체로 8시~7시 부모 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의 질 제고로 인해 최근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 경단여성실태조사 2016 vs 2019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돌봄 방법 중, 친인척 및 돌보미 이용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어린이집 이용 비중 성장(1+2순위 기준)
- 하지만 초등학교 돌봄 공백은 지역별-고용형태별 격차가 뚜렷
 - 돌봄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고 질이 낮음 → 선호: 사교육+친인척/본인>>공적 돌봄
 - 초등돌봄교실은 아이들을 '보는데' 초점
 - 특히, 정규직/풀타임 근무 여성은 공적 돌봄(e.g. 온종일돌봄)에 의존하지 못함
 - 서울지역 vs 그 외 격차
 - 앞선 분석에서도, '중간이하' 노동시장 집단에서 유치원-초등저학년 연령대 노동이탈이 급증하는 것 확인

→ 초등학교 운영시간 연장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처럼 체계적인 오후 돌봄이 희망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인프라 마련 필요



감사합니다



29

제3절 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 변화: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¹⁶⁾

제26회 인구포럼 발표문

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 변화: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2021. 12. 3.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직

sangjiclee@nafi.re.kr

1

16) 이상직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 I. 들어가며
- II. 전환기 성인 이행 구조 변화와 그 함의
 - 1. 사회 변동과 생애 구조 변화
 - 2. 사회적 시간표의 구조와 성격
 - 3. 한 연구 사례: 2000년의 성인 이행 구조
- III. 자료와 분석 방법
 - 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 2. 측정
 - 1) 학업-노동지위
 - 2) 가족지위
 - 3. 분석 방법
- IV. 분석 결과
 - 1. 1998년의 성인 이행 구조
 - 1) 학업-노동지위
 - 2) 가족지위
 - 2. 2017년의 성인 이행 구조
 - 1) 학업-노동지위
 - 2) 가족지위
 - 3.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의 관계 변화
 - 1) 생산 영역에서의 탈젠더화와 재생산 영역에서의 분화
 - 2) 결합 지위 구조 변화
 - 3) 이행 구조 변화의 성격: 노동시장을 매개로 한 성인 이행 경로의 계층화?
- V. 성인 이행 구조 변화: 탈젠더화와 계층화?

연구 질문

- 1.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는 어떻게, 얼마나 변했나?
 - 1) 성인 이행기 구조: 특정 연령대의 이들이 생산-재생산 영역에서 점유하는 지위의 분포
 - 2) 1998년과 2017년의 15-34세 집단(1964-83년생/1983-2002년생)이 드러내는 구조 비교
 - 3)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시간표의 변화
- 2. 젠더와 계층 차원에서 성인 이행기 구조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 1) 남녀 차이는?
 -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성인 이행기 위치와 관계 맺는 양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 3. 변화 양상은 같은 시기 한국의 교육, 노동, 가족 제도의 변동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 1) 고등 교육 팽창(기회의 확대), 서비스업 전환/임금 노동 확대와 기업규모-고용지위에 따른 위계화, 가족 관계의 재편(만혼, 비혼, 비출산)
 - 2)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의 관계 변화

연구 배경

- 2000년대 이래 문제 집단으로서 ‘청년’ 등장
- 두 가지 접근: 이행(계층)론과 문화(세대)론
 - 이행론: 학교·노동시장 이행론/결혼·출산 이행론 [추상적 인과 관계론]
 - 문화론: 추상적 정체성론
- 라이프코스 연구의 관점
 - 장기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코호트 연구(최선영·장경섭, 2004; 이순미, 2014; 계봉오·황선재, 2016; 최성수·이수빈, 2018; Chung and Park, 2019; 최선영, 2020)
 -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계봉오·김영미, 2014; 이순미, 2017; 김은지 외, 2019; Choi et al., 2020; 함선유, 2020; 최세림, 2021)
 - 한국인의 생애를 규정하는 역사,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는 국가 비교 연구 (Park and Sandefur, 2005; 김영미, 2012)

4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ume 646

March 2013

IN THIS ISSUE:

Transitioning to Adulthood in Asia: School, Work, and Family Life
Special Editors: WEI-JUN JEAN YEUNG, CHERYLL ALIPIO,
and FRANK F. FURSTENBERG JR.

Transitioning to Adulthood in Asia: School, Work, and Family Life	6
<i>Wei-Jun Jean Yeung and Cheryll Alipio</i>	
Transitions to Adulthood: What We Can Learn from the West	25
<i>Frank F. Furstenberg Jr.</i>	
The Changing Transitions to Adulthood across Southeast Asia: A Census Approach to Cross-National Comparisons	42
<i>Quannan Nohar, Peter Xenos, and Jeffrey Abalos</i>	
The Transition Tempo and Life Course Orientation of Young Adults in Taiwan	69
<i>Lang-Wei Wen and Huang</i>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ong Japanese Youths: Understanding Courtship in Japan	86
<i>Hiroshi Ishida</i>	
The Changing Role of Women's Earnings in Marriage Formation in Japan	107
<i>Setonja Fukuda</i>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ong Korean Youths: Transition Markers in Productive and Reproductive Spheres	129
<i>Hyeonjin Par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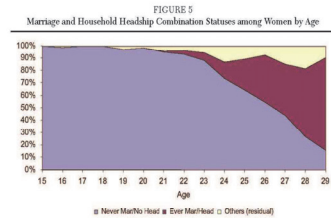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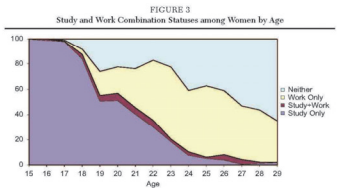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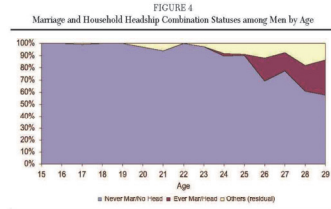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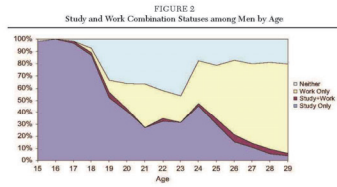
Coming of Age in Times of Change: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China	149
<i>Wei-Jun Jean Yeung and Shu Hu</i>	
Lost in Transformation? The Employment Trajectories of China's Cultural Revolution Cohort	172
<i>Quannan Lin</i>	
Negotiating Marriage and Schooling: Nepalese Women's Transition to Adulthood	194
<i>Yingzhun Ji</i>	
Young Men in the Philippines: Mapping the Costs and Debts of Work, Marriage, and Family Life	214
<i>Cheryll Alipio</i>	
Youth, Gender, and the Workplace: Shifting Opportunities and Aspirations in an Indonesian Industrial Town	233
<i>Suzanne Naef</i>	

FORTHCOMING

*Reconsidering the Urban Diaspora: The Role of System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pecial Editors: MARIO L. SMALL AND SCOTT W. ALLARD
Youth Migration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in Developing Countries
Special Editor: FATMA JUAREZ-CARCANO

5

한국인의 성인 이행 구조(2000)



Park(2013)

6

TABLE 1
Multinomial Logit Model of Study and Work Combination Statuses (Aged 15-29)

	Men			Women		
	Study + Work vs. Study Only	Work Only vs. Study Only	No Study, No Work vs. Study Only	Study + Work vs. Study Only	Work Only vs. Study Only	No Study, No Work vs. Study Only
Age	0.541 (0.202)***	0.900 (0.118)****	0.836 (0.099)****	0.850 (0.218)****	1.412 (0.144)****	0.825 (0.125)****
Age ²	-0.017 (0.013)	-0.027 (0.007)****	-0.038 (0.007)****	-0.034 (0.015)**	-0.063 (0.009)****	-0.017 (0.008)**
Father's education (reference = LT high school)						
High school	-0.504 (0.409)	-0.749 (0.190)****	-0.377 (0.180)**	-0.354 (0.368)	-0.681 (0.193)****	-0.644 (0.196)***
Tertiary	-0.408 (0.240)	-1.337 (0.296)****	-1.137 (0.298)****	0.022 (0.494)	-1.163 (0.286)****	-1.209 (0.300)****
Father's occupation (reference = unskilled)						
Skilled labor	0.434 (0.470)	-0.095 (0.217)	0.024 (0.210)	0.504 (0.397)	0.160 (0.229)	-0.248 (0.234)
Clerical/sale/service	0.098 (0.497)	-0.414 (0.224)*	-0.208 (0.221)	-0.650 (0.455)	-0.411 (0.223)*	-0.522 (0.225)**
Professional/management	0.609 (0.588)	-0.229 (0.307)	-0.118 (0.300)	-1.028 (0.578)*	-0.828 (0.298)***	-1.183 (0.321)****
Intercept	-5.351 (0.781)****	-4.729 (0.476)****	-3.658 (0.352)****	-5.500 (0.800)****	-5.916 (0.535)****	-3.871 (0.442)****
Log-likelihood		-1,236.7			-1,402.7	
N		1,513			1,702	

*p < .10. **p < .05. ***p < .01. ****p < .001.

Park(2013)

7

TABLE 2
Multinomial Logit Model of Marriage and Household Headship Combination Statuses (Aged 15-29)

	Men		Women	
	Ever Married/Head vs. Never-Mar/No Head	Others vs. Never-Mar/No Head	Ever Married/Head vs. Never-Mar/No Head	Others vs. Never-Mar/No Head
Age	3.290 (1.323)**	0.605 (0.240)**	1.293 (0.388)**	0.412 (0.231)*
Age ²	-0.119 (0.055)**	-0.018 (0.012)	-0.031 (0.018)*	-0.004 (0.012)
Father's education (reference = LT high school)				
High school	-0.071 (0.301)	-0.926 (0.344)***	-0.220 (0.225)	0.005 (0.265)
Tertiary	-0.050 (0.494)	-0.793 (0.504)	-0.161 (0.395)	0.345 (0.416)
Father's occupation (reference = unskilled)				
Skilled labor	-0.417 (0.314)	-0.925 (0.392)**	-0.583 (0.255)**	-0.906 (0.318)***
Clerical/sale/service	-0.264 (0.336)	0.457 (0.293)	-0.377 (0.250)	-0.535 (0.294)*
Professional/management	-0.468 (0.496)	0.149 (0.498)	-0.516 (0.378)	-0.782 (0.453)**
In school (reference = yes)	-0.647 (0.649)	0.503 (0.415)	-3.333 (1.038)***	-1.721 (0.599)***
Respondent's education (reference = LT high school)				
High school	-0.087 (0.528)	-0.322 (0.562)	-1.319 (0.610)**	-0.936 (0.671)
Tertiary	-1.256 (0.643)**	-0.839 (0.558)	-2.056 (0.623)***	-1.779 (0.698)**
Currently working (reference = yes)	1.906 (0.422)***	1.445 (0.344)***	-1.369 (0.192)***	-0.460 (0.228)**
Intercept	-24.060 (7.597)**	-6.630 (1.244)***	-8.090 (2.075)***	-3.477 (1.171)**
Log-likelihood	-472.2		-574.4	
N	1,513		1,702	

*p < .10. **p < .05. ***p < .01. ****p < .001.

“성인 이행기 (순조로운) 이행에서 가족 자원이 미치는 영향력은 확실히 여성에게서 더 크다.” (Park, 2013: 145)

자료와 분석 방법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1998년)/20차(2017년)
- 성인 이행기 구조 드러내기
 - 언제(만15-34세), 누구와 함께 지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 학업·노동지위: ① 학업, ② 학업+노동, ③ 노동, ④ 기타
 - 가족지위: ① 부모, ② 혼자, ③ 배우자, ④ 배우자+자녀, ⑤ 부모+배우자, ⑥ 부모+배우자+자녀, ⑦ 자녀
- 로짓 분석
 - 종속변수: 학업·노동지위의 특정 범주, 가족지위의 특정 범주
 - 독립변수: 연령, 성별, 아버지 교육수준[+어머니 교육수준][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15세 무렵) 부모 중상상지위[비정규직/기타, 정규직, 자영업], (15세 무렵) 가정 경제형편(평균 하회, 평균 이하, 평균, 평균 이상, 평균 상회)

학업·노동지위

설문지

※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인 설문지에 포함

[예비 설문지] (p**0201)

[문 6]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 중 어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일자리입니까?
가) 일자리가 여러 개인 경우 가장 중요한 일자의 일자의 번호를 응답하
여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_____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자
리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특히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가장 많은 시간 등
한 일하는 일자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하는 시간이 동일할 경우 수입
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 예) 나 1

⑧) 미취업자 (→ 유형 1, 3, 5, 7이 있는 응답자)

[원인지 개인, 미취업자 개인 설문지] (p**0202, p**0203)

[문 1] _____님께서는 평소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평소'란 조사일 이전 6개월 동안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
목의 일을 일급을 받게 하고 있는 경우(주급 가족 종사자)는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음
 - ① 주로 일을 하고 있음
 - ② 주로 가사일을 맡으며 일을 하고 있음
 - ③ 주로 통학(학교, 학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 ④ 가사 및 통학 이외의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 ⑤ 가사를 맡고 있음
 - ⑥ 어린이돌 맡고 있음
 - ⑦ 통학(학교, 학원)만 하고 있음
 - ⑧ 아무 일도 하지 않음
 - ⑨ 기타 (_____)

[문 2] _____님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 ① 일한일을 _____로 가십시오.
- ② 임시 용직: 임시 용직이지만, 일그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경으로 인해 일을 잠시 중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 ③ 구직활동
- ④ 가사
- ⑤ 육아
- ⑥ 정주교육기관 통학
- ⑦ 일시적인 통학
- ⑧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 ⑨ 연로
- ⑩ 심신상해
- ⑪ 취업준비 (통학 제외)
- ⑫ 전학준비 (통학 제외)
- ⑬ 군입대 대기
- ⑭ 병명대기
- ⑮ 결혼준비
- ⑯ 지난 1주일은 일하지 않았으나 조사 진행 후에 일자리를 구했음
_____로 가십시오.
- ⑰ 쉬었음
- ⑱ 기타 (_____)

① 학업, ② 학업+노동, ③ 노동, ④ 기타

가족지위

<부표 5-2> 가구자료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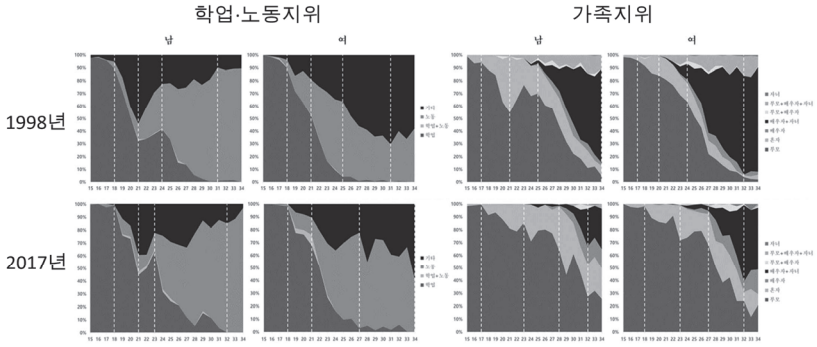
hhid1	pid1	pid2	...	sex1	sex2	...	relation1	relation2	...
1	101	102	...	여	여	...	가구주	자녀	...
2	201	202	...	남	여	...	가구주	배우자	...
5000	50001	50002	...	여	남	...	가구주	부	...

- ① 부모, ② 혼자, ③ 배우자,
- ④ 배우자+자녀, ⑤ 부모+배우자,
- ⑥ 부모+배우자+자녀, ⑦ 자녀

<부표 5-3> 가족형태와 가구원 관계[단위: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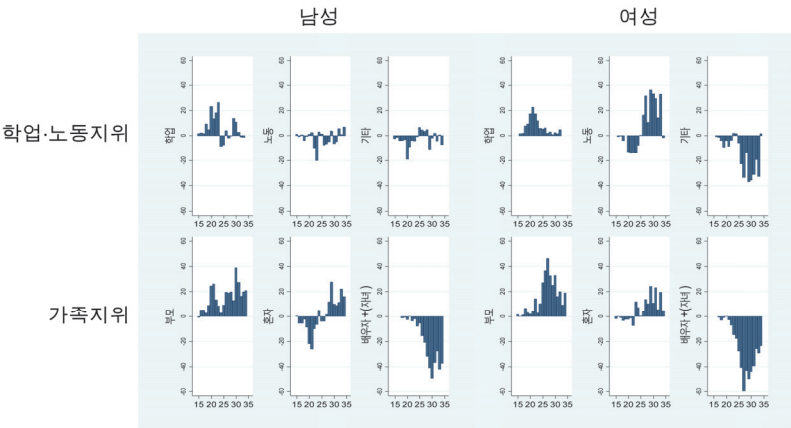
수준 1	수준 2	가구주의 관계								합계		
		가구주	배우자	자녀	자녀	배우자	부모	손자녀	형제			
가 족 형 태	1. 단독	① 단독(6.9)	2,650 (95.1)						112 (4.0)	25 (0.9)	2,787 (100.0)	
	2. 부(위)모-자녀 (7.8)	② 권부모+비혼자녀(7.0)	908 (32.0)	1,916 (67.0)					2 (0.1)	9 (0.3)	2,833 (100.0)	
		③ 자녀+부모(0.8)	157 (50.5)				123 (39.6)		29 (9.3)	2 (0.6)	311 (100.0)	
		3. 부부	④ 부부(14.3)	2,769 (48.1)	2,961 (51.4)					18 (0.3)	11 (0.2)	5,759 (100.0)
	4. 부부+비혼자녀	⑤ 부부+비혼자녀(55.4)	5,050 (22.0)	4,895 (21.9)	12,306 (55.1)				26 (0.1)	42 (0.2)	22,319 (100.0)	
	5. 부부-부모 (2.0)	⑥ 부(부)+양(위)친(1.1)	178 (40.4)	173 (39.2)			72 (16.3)	12 (2.7)	6 (1.4)		441 (100.0)	
		⑦ 양(위)친+부(부)(0.9)	98 (26.3)	56 (15.1)	129 (34.7)	88 (23.7)			1 (0.3)		372 (100.0)	
		⑧ 부(부)+양(위)친+자녀(8.3)	677 (20.4)	584 (17.6)	1,639 (49.3)	5 (0.2)	324 (9.7)	50 (1.5)		34 (1.0)	12 (0.4)	3,325 (100.0)
	6. 3대 이상 (13.7)	⑨ 양(위)친+(부)부+손자녀(4.4)	302 (17.0)	218 (12.3)	495 (27.8)	206 (11.6)	3 (0.2)		542 (52.0)	7 (0.8)	7 (0.5)	1,780 (100.0)
		⑩ 양(위)친+부(부)+손자녀 (1.0)	114 (28.8)	70 (17.7)			1 (0.3)		206 (52.0)	3 (0.8)	2 (0.5)	396 (100.0)
합계		12,903 (32.0)	8,957 (22.2)	16,485 (40.9)	299 (0.7)	523 (1.3)	62 (0.2)	748 (1.9)	110 (0.0)	228 (0.6)	40,325 (100.0)	

연령별 학업·노동지위와 가족지위 분포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차, 20차)

연령별 학업·노동지위/가족지위 분포 변화(1998/2017)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차, 20차)

<표 5> 학업·노동지위의 가족지위의 관계(1998/2017)

1998년	남성				여성			
	부모	혼자	배우자+ 자녀	합계	부모	혼자	배우자+ 자녀	합계
학업	85.4	13.4	1.2	100.0	89.3	9.5	1.2	100.0
	56.0	30.1	1.3	34.8	55.9	33.6	0.8	29.7
	29.7	4.7	0.4	34.8	26.5	2.8	0.4	29.7
노동	28.8	14.1	57.1	100.0	43.6	13.3	43.1	100.0
	25.9	43.1	87.0	47.7	29.8	51.5	31.5	32.4
	13.7	6.7	27.2	47.7	14.1	4.3	14.0	32.4
기타	55.2	23.8	21.0	100.0	17.8	3.3	78.9	100.0
	18.2	26.8	11.7	17.5	14.3	14.9	67.6	38.0
	9.7	4.2	3.7	17.5	6.8	1.3	30.0	38.0
합계	53.1	15.6	31.3	100.0	47.3	8.4	4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3.1	15.6	31.3	100.0	47.3	8.4	44.3	100.0

2017년	남성				여성			
	부모	혼자	배우자+ 자녀	합계	부모	혼자	배우자+ 자녀	합계
학업	88.7	11.1	0.2	100.0	91.3	8.4	0.3	100.0
	49.0	20.7	0.5	36.7	51.2	20.7	0.5	35.8
	32.6	4.1	0.1	36.7	32.6	3.0	0.1	35.8
노동	42.0	29.7	28.3	100.0	52.8	24.4	22.8	100.0
	29.5	70.5	94.7	46.6	32.5	65.6	41.1	39.2
	19.6	13.9	13.2	46.6	20.7	9.5	8.9	39.2
기타	85.5	10.4	4.0	100.0	41.5	7.9	50.6	100.0
	21.5	8.9	4.8	16.7	16.3	13.7	58.4	25.1
	14.3	1.7	0.7	16.7	10.4	2.0	12.7	25.1
합계	66.4	19.7	13.9	100.0	63.7	14.5	21.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6.4	19.7	13.9	100.0	63.7	14.5	21.7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차, 20차)

1998년과 2017년

- 전체
 - 학업·노동지위: ‘학업’ 지위 비중 증가(특히 여성), ‘노동’ 지위 비중 증가(여성만), ‘기타’ 비중 감소(여성만)
 - 가족지위: ‘부모’와 함께 지위 비중 증가(특히 여성), ‘혼자’ 지위 비중 증가, ‘배우자(+자녀)와 함께 지위 대폭 감소
 - 결합지위
 - 남성: ‘학업-부모’(29.7%), ‘노동-배우자(+자녀)’(27.2%), ‘노동-부모’(13.7%) → ‘학업-부모’(32.6%), ‘노동-부모’(19.6%), ‘기타-부모’(14.3%)
 - 여성: ‘기타-배우자(+자녀)’(30.0%), ‘학업-부모’(26.5%), ‘노동-부모’(14.1%) → ‘학업-부모’(32.6%), ‘노동-부모’(20.7%), ‘기타-배우자(+자녀)’(13%), ‘노동-혼자’(9.5%)
- 시점별
 - 남성: 20대 초반과 20대 후반-30대 초반에서 소폭 변화
 - 여성: 20대 전반과 30대 중반에서 대폭 변화
- 종합
 - 생애 시간표의 남녀 수렴 경향, 뚜렷하게 구별되는 생애 ‘경로들’ 등장
 - 분화인가? 증화인가?
 -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의 연계가 느슨해지는 것인가, 재편되는 것인가?

제4장 제26회 인구포럼 : 청년의 노동과 결혼·출산: 젠더와 계층의 교차로 163

<표 6> 학업 노동지위 귀속 가능성에 대한 로짓분석(1998, 2017)

	1998년				2017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노동	기타	노동	기타	노동	기타	노동	기타
	기준: 학업		기준: 학업		기준: 학업		기준: 학업	
연령	1.02*** (0.18)	0.78*** (0.15)	1.55*** (0.23)	1.87*** (0.27)	0.88*** (0.32)	1.45*** (0.25)	2.57*** (0.35)	1.74*** (0.30)
연령제곱	-0.01*** (0.00)	-0.01*** (0.00)	-0.02*** (0.01)	-0.03*** (0.01)	-0.01 (0.01)	-0.02*** (0.01)	-0.04*** (0.01)	-0.03*** (0.01)
아버지 교육수준(기준: 중졸 이하)	-0.82*** (0.17)	-0.76*** (0.16)	-0.72*** (0.17)	-0.89*** (0.18)	-0.36 (0.36)	-0.43 (0.35)	-0.34 (0.36)	-0.56 (0.36)
고졸	-1.71*** (0.23)	-1.46*** (0.25)	-1.45*** (0.21)	-2.06*** (0.24)	-0.94** (0.38)	-0.97*** (0.37)	-0.98** (0.39)	-1.07*** (0.39)
어머니 교육수준(기준: 중졸 이하)								
고졸								
진문대졸								
진문대졸								
부모 종사상지위(기준: 정규직)	0.31 (0.24)	0.60*** (0.23)	0.42 (0.28)	0.40* (0.29)	0.85** (0.33)	0.09 (0.32)	0.57 (0.38)	0.22 (0.40)
비정규직/기타	0.17 (0.16)	0.21 (0.16)	0.21 (0.16)	0.36*** (0.17)	0.26 (0.26)	-0.02 (0.25)	0.51** (0.25)	0.67*** (0.26)
자영업								
가정 경제활동								
Constant	-17.97*** (2.77)	-12.65*** (1.66)	-25.75*** (2.67)	-28.47*** (3.13)	-16.57*** (4.03)	-20.40*** (2.85)	-34.44*** (4.43)	-26.87*** (3.68)
N	2,655		2,803		1,371		1,479	

* < 0.10. ** < 0.05. *** < 0.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차, 20차)

<표 7> 가족지위 귀속 가능성에 대한 로짓분석(1998, 2017)

	1998년				2017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혼자	배우자+ 자녀	혼자	배우자+ 자녀	혼자	배우자+ 자녀	혼자	배우자+ 자녀
	기준: 부모		기준: 부모		기준: 부모		기준: 부모	
연령	0.30*** (0.13)	0.63*** (0.32)	0.68*** (0.20)	1.00*** (0.34)	0.70*** (0.25)	0.45 (0.58)	2.19*** (0.69)	0.75*** (0.25)
연령제곱	-0.00* (0.00)	0.00 (0.01)	-0.01** (0.00)	-0.01 (0.01)	-0.01** (0.00)	0.02** (0.01)	-0.01 (0.00)	-0.02** (0.00)
교육수준(기준: 고졸 이하)	0.04*** (0.15)	-0.12 (0.19)	0.09 (0.19)	-0.86*** (0.19)	0.09 (0.30)	0.72** (0.42)	0.3 (0.31)	-0.24 (0.35)
고졸	0.24 (0.20)	-0.07 (0.17)	0.19 (0.24)	-0.03*** (0.21)	0.25 (0.33)	0.62 (0.39)	0.2 (0.34)	-0.43 (0.32)
노동지위(기준: 기타)								
학업	-0.50*** (0.19)	-0.74** (0.38)	0.70*** (0.29)	-2.33*** (0.43)	0.93** (0.37)	2.03* (1.23)	0.43 (0.41)	-2.80*** (0.79)
노동	-0.18 (0.16)	0.83*** (0.19)	0.88** (0.22)	-1.64*** (0.16)	1.37*** (0.30)	4.38*** (1.03)	0.69** (0.33)	-1.46*** (0.30)
아버지 교육수준(기준: 중졸 이하)	-0.82*** (0.14)	-0.81*** (0.17)	-0.41** (0.17)	-0.54*** (0.17)	-0.24 (0.27)	-0.01 (0.37)	-0.17 (0.29)	-0.22 (0.32)
고졸	-0.09 (0.19)	-0.09 (0.25)	-0.24 (0.24)	-0.32 (0.26)	-0.14 (0.33)	0.02 (0.45)	-0.35 (0.34)	-0.35 (0.38)
어머니 교육수준(기준: 중졸 이하)								
고졸								
진문대졸								
부모 종사상지위(기준: 정규직)	-0.24 (0.22)	0.38 (0.24)	-0.08 (0.28)	-0.52** (0.26)	0.35 (0.31)	0.70 (0.51)	-0.15 (0.29)	-0.57 (0.35)
비정규직/기타	0.52*** (0.13)	0.49*** (0.16)	0.49*** (0.16)	0.64*** (0.16)	0.13 (0.23)	-0.22 (0.31)	-0.04 (0.24)	0.23 (0.26)
자영업								
가정 경제활동								
Constant	-6.20*** (1.47)	-16.65*** (4.55)	-11.57*** (2.34)	-20.88*** (4.50)	-11.85*** (3.04)	-5.38 (8.27)	-8.69*** (2.77)	-39.21*** (10.05)
N	2,655		2,803		1,371		1,479	

* < 0.10. ** < 0.05. *** < 0.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1차, 20차)

결론

- 경제위기 이후 성인 이행 구조 변화
 - 생산 영역에서의 젠더화된 이행과 재생산 영역에서의 보편 이행 → 생산 영역에서의 보편 이행과 재생산 영역에서의 분화된 이행
 - 부모 영향력의 차별적 강화?
 - 남성 내 총화, 여성 내 분화 -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 관계의 균형이 깨짐
- 해석의 지점
 - 성인 이행 구조 변화와 가족배경 영향력 강화(?)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총화는 맞으나 이것이 능력주의 강화의 결과인지 약화의 결과인지 말하기 어려움
 - 두 가지 균형 시나리오 : 재생산 영역에서 여성에게서도 계층화가 뚜렷해질 경우, 젠더/계층 차원 모두에서 차이가 작아지는 경우
- 더 나아가야 할 지점
 - 생애 시간표의 형식과 내용의 차이를 밝혀야
 - 교육, 가족, 노동 제도(산업구조) 변화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18

감사합니다.

19

제4절 종합 토론

1.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비혼의 확산과 불안정한 젠더혁명)

□ 여성의 혼인행동 변화 vs 남성의 근대적 혼인행동 강화 : 젠더혁명의 이행기에 놓여있는가 아니면 함정에 빠져있는가?

○ 한국에서 비혼화와 저출생 현상에 대한 설명은 첫째, 여성들의 가족출산 파업, 둘째, 가족주의 복지체제로 인한 가족의 과부하임. 전자는 여성들의 변화에 주목하고, 후자는 핵가족의 물질적 기반, 특히 남성 생계부양체제의 불안정화에 주목하며, 가족주의 가치관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됨. 따라서 가족의 변화는 드라마틱할 수 있으나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구조적 내몰림으로 설명되고 젠더 관계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기도 함(개인주의없는 개인화, 가족지향적 개인화 등).

○ 연구자의 지적처럼 현재의 혼인을 둘러싼 변화는 확실히 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여성들의 혼인행동 변화는 두드러짐. 그러나, 남성의 혼인행동 변화는 뚜렷하지 않음. 남성 생계부양체제의 불안정화에 조용히는 새로운 남성성과 파트너십 모델이 구축되기보다 오히려 '남성 가장' 역할 강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의적 혼인행태가 더 강화되었음.

○ 백, 기든스 등은 후기 근대의 개인화가 '여성의 개인화'이고, 남성

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의 혁명’이라 설명함. 현재 한국의 혼인행동 변화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연구자가 말한 젠더혁명의 ‘불완전성’은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인가? 이 ‘불완전성’이 남성의 변화 없음을 의미한다면 젠더혁명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혼인’이라는 특정 생애단계에서의 변화와 ‘혼인 이후 가족실천’의 장기적 행위성에서 여성들의 변화가 여전히 관찰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가족의 과부하’ 설명처럼 젠더혁명 이행기라기보다 ‘함정’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 볼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 하층 여성의 미혼화 vs 상층 여성의 가족화 : 결혼의 선택성이 하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 계층화되고 성별화된 현상이라면, 이것이 젠더관계 변화를 가져올 동력이라는 근거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 2018년에 발표된 연구논문 중 ‘하층 여성의 혼자되기의 불가능성’을 진단한 연구가 있음. 즉 하층 여성이 미혼기를 확장하는 행위성을 보이지만, 혼자되기의 불가능성 때문에 남성과의 결합이 부모 의존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함의는 이성애 혼인제도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인 여성의 의존이 가족주의적 미혼기에서도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미혼기 확장이 이성애 혼인의 일시적 유예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함.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혼인연령 상승과 미혼자 비율의 증가가 ‘미혼화’로 진단될 만하지 않고 ‘혼인의 지연’이라고 진단하기도 함.
- 이상의 논의들과 이 연구의 주장은 사뭇 다르게 읽힘. 계층화되고 성별화된 현상인 혼인의 선택성이 젠더관계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이 될 수 있는지? 혹시 그러한 해석이 과도한 낙관주의는 아닌

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 일, 가족, 개인 중 '가족' 중시의 증가 : 혹시 청년층의 '탈정치화'의 징후일 가능성은 없는가?

- 연구자는 남성의 일 중심성 약화와 가족생활 중시라는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하였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탈경쟁을 지향하는 청년들에게서 '가까운 관계로의 결집, 자족적 승인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고 이것이 '사회적인 것'에서 관심을 거두고 '나와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함.
-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족' 중시 경향이 '돌보는 노동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나의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는 제한적 혹은 반(反)사회적인 것일 가능성이 있는 바, 삶의 영역에 대한 개인의 우선순위는 그 자체로는 젠더혁명과 관련해서 중요 지표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함.

2.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성 근로자의 출산의 기회비용)

- 출산과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
 - 출산은 여성의 일과 삶에 핵심적인 변화를 일으킴에도 여성의 일 관점에서 출산 선택과 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본 연구와 정책적 접근은 드문 상황임.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등 저출산에 대응한 정책 중 일과 관련한 대

응은 육아휴직의 확대 등에 집중됨.

- 육아휴직이 노동시장으로 완전한 이탈을 방지하는 측면은 있으나, 단기라도 휴직에 따른 경력의 소실은 불가피한 상황임.
- 더구나 육아휴직 이후 동일 직장으로 복직하는 비율이 60% 내외에 불과한 상황에서(정한나, 윤정혜, 최숙희, 2016) 육아휴직 등의 저출산 정책이 커리어를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적절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그럼에도 여성이 출산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비용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은 미진한 상황임.

○ 노동시장 내 이질성 강화와 출산의 기회비용.

-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30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성 내 이질적인 경험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출산에 따른 여성의 기회비용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계층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아동 연령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 본 연구의 결과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이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음. 통상 3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노동시장 이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지배적이거나 이러한 양상은 대기업/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만 적용되고, 그 이외의 노동시장에서 3세 이하 아동에 비하여 4~9세, 10세 이상 아동이 있는 가구

에서 더 높은 노동시장 이탈확율을 나타냄.

-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저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문제 등을 지적하였음. 돌봄의 문제는 여성의 노동참여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문제이나, 동일한 연령의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도 대기업/공공부문의 경우 임금이나 노동참여 상의 패널티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
- 일자리의 위치에 따라서 동일한 연령의 자녀를 키우고 있음에도 감당해야 하는 노동시장 내 패널티가 다르다는 점은 보편적인 돌봄의 문제보다도 저자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 특성과 관련한 결과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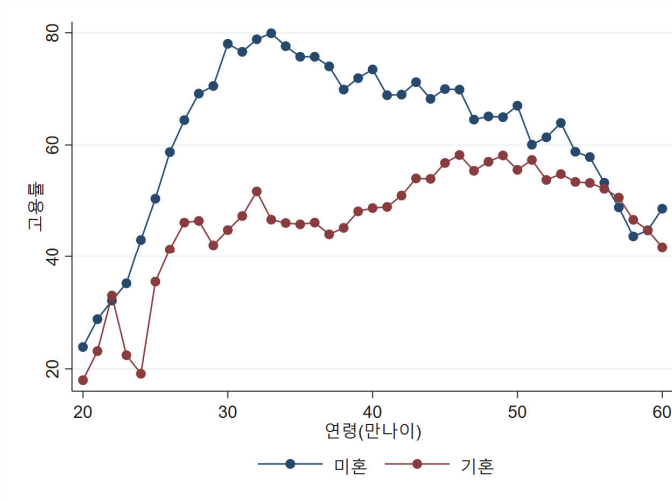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모성패널티

- 임금분포별 모성패널티를 다룬 논문들은 어머니에 대한 임금패널티가 저소득 분위에서는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고소득 분위에서는 모성패널티가 관측되지 않거나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냄.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함.
- 고소득 여성의 모성패널티가 관측되지 않은 이유로는 고소득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이탈 시 기회비용이 더 크고, 소득, 또는 기업 내 정책을 통하여 돌봄을 위한 보충적 자원을 구매할 여력도 높음.
-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대기업/공공부문의 경우 연공급의 적용에 따른 임금보상 수준의 증가(대기업의 경우)에 따라 기회비용의 크기가 크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도(공공부문의 경우)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높을 수 있음. 반면 정규직에, 저임금이 아닌 일자리더라도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경우 노동시장 이탈하는 별도의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본 연구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내에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떠한 조건으로 이뤄지는지가 검토되기를 바랍.

○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선택과 코호트 효과를 통제하고는 있으나, 연령대에 따라서 샘플에 포함될 수 있는 이들의 자녀 나이는 한정되어 있음.
- 1975년생의 경우 1~22차 패널 내에서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12살 이상을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반면, 1990년생은 2020년 현재 25~30세, 1980년생은 30대라는 점에서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나이가 낮은 연령일 경우만 관측될 가능성이 있음.
- 이처럼 자녀의 나이와 어머니의 연령이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자녀 연령에 따른 효과가 자녀 연령의 영향과 더불어 특정 연령대 혹은 코호트의 경향을 반영할 수 있음. 즉, 가장 어린자녀가 10세 이상인 여성의 경우 주로 40대 여성의 노동시장 패턴을 반영할 여지가 있음. 예를 들어 10세 이상 아동을 가진 여성의 결과는 특정 연령(40대 여성)이 특정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노동경험과 혼합된 결과일 수 있음.
- 30대 중후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미혼인 여성일지라도 노동시장 이탈이 관측되며, 기혼 남성과 대조적으로 임금상승이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2021)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저자가 계산함.

- 즉, 저자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은 자녀가 없더라도 대면 서비스업과 같은 특정부문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므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휴직자 수가 늘어난 바와 같이, 1차 노동시장에 있는 여성이 30대 후반이나 40대에 이르러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산업적, 직업적 요인이 있을 수 있음.
- 향후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람.

3. 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 변화: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이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게 필요하며, 분석과 해석의 완성도까지 높은 연구로 평가합니다. 최근에 본 연구들 중 가장 인상적인

연구의 하나이고, 좋은 연구를 토론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출산율이 1.0 이하로 내려간 후에도 바닥없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며, 최근 분석들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 2015년 이후의 재생산 관련하여 이전과는 다른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관련 연구를 수행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청년세대의 젠더관계 변동에 대해 기성세대는 받아들이기를 무척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논의들에서 여전히 ‘저출산’은 단순히 돈이 없어 아이를 못낳는다는 ‘삼포세대’ 또는 ‘오포세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다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결혼 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와 같은 단순한 가정들부터, 어떤 정책을 펴도 소용없다는 정책무용론까지 다양한 저출산 담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낳고 안낳고의 문제를 넘어 청년세대의 노동과 가족에 대한 생애전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출산’ 자체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보다 청년세대의 생애전망 구조 변화에 우리 사회와 제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그 변동이 무엇인가를 날카롭고 정확하게 포착하여 전체 변동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젠더와 계층이라는 두 개의 변수에 주목하여 생애전망의 변동과정을 흥미롭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에 동의하면서, 연구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질문과 토론지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연구의 제목을 “경제위기 이후”로 이름을 붙였는데, 경제위기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은 이 연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을 수정하

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부분을 아예 빼거나 ‘2000년대 이후’ 등으로 시기만 특정해 주는 것이 연구의 함의에 더 부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분석대상을 만 15-34세로 설정하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15세부터 보여주더라도 본 분석은 만2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분석의 의미가 보다 명쾌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 1, 2의 분석을 살펴보면, 만 19세 정도까지는 학업·노동지위와 가족지위에서 의미가 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후 분석에서 ‘학업’과 ‘부모동거’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지위변화가 발생하는 연령으로 분석범위를 좁힐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변수설정 부분에서 종속변수로 ‘학업·노동지위’와 ‘가족지위’ 변수를 설정하고 있는데, 매우 적절한 변수설정으로 판단합니다. ‘학업·노동지위’ 변수는 앞부분 기술적 분석에서는 학업, 학업+노동, 노동, 기타로 분류한 뒤 최종 분석에서는 학업, 노동, 기타(비취업)의 3분류로, ‘가족지위’ 변수는 부모, 혼자, 배우자, 배우자+자녀, 부모+배우자, 부모+배우자+자녀, 자녀의 7범주로 나눈 후 부모, 혼자, 배우자나 자녀(기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년의 이행기 구조를 보여주기 적절한 변수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지위의 다양성과 가족지위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예컨대 1998년과 2017년의 ‘노동’ 지위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직업의 안정성과 지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혼인상태도 혼인관계 지속과 자녀 유무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세부분석이 향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노동패널로는 사례수 부족으로 상세한 분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더 상세하고 사례수가 많은 자료로 이 연구가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립변수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성별과 계층을 중요한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는데, 성별은 모든 분석을 남녀를 구분함으로써, 계층은 가족자원

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여 귀납적으로 해석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성별을 하나의 변수 중의 하나로 투입하여 젠더 변수의 교차성을 분석하는데 실패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분리 분석 전략을 취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젠더차원을 규명해 내었다고 판단합니다. 계층변수의 경우 특히 청년세대의 계층변수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현재의 가구소득으로 할 경우 부모와 동거여부에 따라 소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본인의 교육수준으로 할 경우 본인의 연령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본인의 교육수준과 함께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과 14세 무렵 가족상황을 변수로 투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직관적 이해와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청년 연구에서 계층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가장 적절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변수를 투입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표로는 <표5>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의 경우 청년세대 인구집단의 30%에 가까운 비율을 특정한 집단이 차지하게 되는데, 남성은 ‘학업+부모’, ‘노동+기혼’, 여성은 ‘학업+부모’, ‘기타+기혼’입니다. 즉 그러나 2017년이 되면 남녀 모두 ‘학업+부모’만이 3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노동+부모’, ‘노동+혼자’, ‘노동+기혼’, ‘기타+부모’가 각기 10% 수준의 비율을 차지하며, 여성의 ‘기타+기혼’도 10%대에 불과해 집니다. 연구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남성 1인 생계 부양자 모델은 현격하게 약화된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향후 정책방향 수립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전제한 정책들은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연구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의 핵심 분석은 <표6> 과 <표7>의 분석입니다. 이 분석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분석들이나 좀더 고려할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모형과 관련하여, 본인의 교육수준 변수는 학업·노동지위

분석(표6)에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족지위 분석(표7)에는 포함됩니다. 물론 종속변수에 학업지위가 포함되는 모델에서 교육수준을 포함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두 가지 분석에서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동일하게 넣거나 동일하게 뺀 모델을 시도해 보셨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학업·노동지위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족배경 변수의 영향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연구자는 이를 가족배경 변수가 학업·노동지위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기 때문에 가족지위 결정에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이에 더해 가족지위 변수가 학업·노동지위 변수를 매개하여 가족지위 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학업·노동지위 변수를 삭제한 모형에서도 가족배경 변수의 영향력이 가족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이 매우 복잡한 여러 모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변수를 구성하거나 재정리하는 표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다항로짓 모형들은 종속변수도 3범주인데 독립변수도 3범주인 경우가 많아서 모형의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수투입의 경우에도 예컨대 학업·노동지위 변수의 경우 학업 상태를 reference로 두고 분석표를 제시하는 것이 학업에서 노동, 또는 학업에서 기타로의 이행을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공항이 포함되어 있는 연령 변수는 plotting을 보여주는 방식이 좋을 듯하고, 변수들의 효과도 한눈에 주요 효과를 표시해주는 간략한 요약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그 함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자는 여러 중요한 함의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소제목에서는 ‘노동시장을 매개로 한 계층화’, 결론에서는 ‘탈젠더화와 계층화’를 제안합니다. 또는

‘생산 영역에서의 젠더화된 이행 + 재생산 영역에서의 보편이행’에서 ‘생산 영역에서의 보편이행 + 분화된 이행’이라고 설명하며, 재생산 영역의 이행을 계층화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계층 변수가 제한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연구질문 중의 하나가 가족의 계층지위가 청년세대의 생애이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미친다면 그 영향력은 더 커졌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연구가 인용하는 Park의 연구는 가족자원의 중요성은 여성에게서 더 크다. 즉 가족자원이 많은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하거나 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연구자의 분석에서는 가족자원의 함의는 남성에게서 가장 분명하고 일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남성에게 가족자원의 함의가 더 두드러지는 것은 두년도 분석에서 동일하며, 여성의 경우 최근 자료에서 더욱 가족자원의 함의가 불분명합니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자는 이를 ‘기타 상태의 의미가 성격이 복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성인기 이행에서 여성의 경우 가족자원의 영향력은 부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즉 이 연구는 청년세대의 성인기 이행이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자원변수의 영향력은 남성에게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은 성인기 이행의 경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유예되고 있을 뿐이며 그 유예의 속도는 가족자원, 곧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여성은 성인기 이행의 고정된 경로가 해체되고, 가족자원의 영향력도 분명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통해 젠더화된 경로를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낳는다’는 단선적인 가정이 남성 청년에게는 맞을지 모르

지만 여성 청년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은 일을 통해 독립적인 생애전망을 가질 수 있다면 억압적인 가족제도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는 가족제도 내의 성평등과 성역할 분리가 해소되는 것이 중요한 제도적 과제임을 함축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해석은 2020년 제가 수행한 청년층 생애전망 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연구자료가 노동패널인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연구자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패널분석 연구는 아니고, 패널의 긴 자료 중에서 횡단 자료 두 개를 뽑아 분석한 것입니다. 비록 노동패널일지라도 기본적으로 패널자료가 가지는 횡단대표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와 같이 청년세대의 생애전망 변동을 보여줄 수 있는 분석자료가 잘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자료들이 노동 변수만 다루거나 가족 변수만 다루고 있고, 두 가지 변수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여성만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생애전망의 변동은 남성과 여성의 상황을 함께 관찰할 때 전체적인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패널이 아닌 횡단자료로 대규모 자료가 많이 생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더 많은 연구들, 특히 데이터에 기반하여 전체를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 나와서 현재의 청년세대가 보여주는 생애전망의 거대한 변동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인구포럼 영상제작



제 5 장 인구포럼 영상제작

□ 주제 : 신중년이 나타났다

□ 목적

- 베이비붐세대의 단계적 은퇴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중년세대에 대한 개념과 특성, 현황 등을 짚어보고 향후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모색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 장소: 예쁜오늘렌탈 스튜디오
- 녹화시간: 1시간 반 내외

□ 출연진

역할	성명 및 직위(소속)
진행자	최동석 아나운서
원내 전문가1	이윤경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원내 전문가2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원내 전문가3	조성은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원의 전문가1	김미곤 원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CENE		VIDEO	Audio / MENT
#		*타이틀	신중년이 나타났다
#		*오프닝 멘트(프로그램 소개)	-사회자 : 오프닝 멘트(프로그램 소개)
#		*패널소개(원내 전문가 소개, 이미 착석) 이윤경 연구위원 / 조성은 연구위원 / 황남희 연구위원	-사회자 : 원내 전문가 소개 -전문가 : 자기소개
#		*패널소개(원의 전문가 소개, 소개와 함께 입장) 김미곤 원장	-사회자 : 원의 전문가 소개 -전문가 : 자기소개
#		*화두 던지기 [신중년 세대의 정의, 세대 구분의 필요성, 특성(은퇴전환기 특성, 세대 자체의 특성)에 대한 담화] [신중년 관련 뉴스 송출] ※현장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영상 편집 시 삽입 # 말이 희망퇴직이지... 선택지가 없는 - 루악인간 https://youtu.be/yiSURS6dzok	-사회자(예시) : 앞선 영상에서 봤다시피,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세대로 청년세대를 넘어 '신중년'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신중년을 '인생 3모작'이라고 빗대기도 합니다. 신중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1) '인생 3모작' 비유의 출처, 신중년 정의 설명(이윤경) 2017년 6월 일자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라, 같은 해 8월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SCENE	VIDEO	Audio / MENT
	<p># "은퇴하는 순간 다 끊겨"... 60% "생활비 마련 어려워" https://www.youtube.com/watch?v=mH8SeAPgdrl</p> <p><준비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판넬</p> <p>*패널소개(원의 전문가 소개, 소개와 함께 입장) 김미곤 원장</p> <p>[신증년 관련 드라마, 영화 한 장면 송출]</p> <p>#디어마이프렌즈(드라마)</p>	<p>을 마련, 여기에서 처음 나온 비유</p> <p>▶20초 : 시대의 흐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관심 가지는 이슈임을 설명하고 신증년의 정의 설명</p> <p>2) 신증년 범위 설명(항남회)</p> <div data-bbox="756 837 1045 1082" style="text-align: center;"> <p>1목적</p> <p>주된일자리</p> <p>취업 (30세 전후) 주된일자리 퇴조 (50세 전후)</p> </div> <p>▶40초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시각화 자료로 활용하여 설명</p> <p>-사회자(예시): '증년'과 다른 '신증년'만의 특성이 있을까요?</p>

SCENE	VIDEO	Audio / MENT
	<p>[연애관] 썸남이 연주하는 카페에 친구들 데려간 고두심,, 나이는 들어도 마음만은 아직 소녀다 https://youtu.be/oUFDLJAJKbc</p> <p>#아모르파티(TVN예능) 엄마도 흥이 있다! 잠시 잊고 있던 엄마의 흥을 찾아서. https://www.youtube.com/watch?v=sgOLuCxOj84</p>	<p>3) 신중년 특성 설명(김미곤) 노후관(독립적,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부부끼리 사는 경향), 연애관(자신의 삶에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 황혼이혼도 고려) 등</p> <p>▶40초 : 위에서 언급한 신중년 범위와 연결지어 은퇴 전환기의 중년 특성, 과거 중년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현재 중년 세대만의(베이비부머) 특성 설명</p> <p>-사회자(예시) : 혹시, 성별에 따른 특성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p> <p>4) 신중년의 성별에 따른 특성 설명(조성은) ▶40초 : 신중년의 분포를 보면, 남성은 60~69세의 비율이 40.1%로 여성 32.9%보다 7.2%포인트 더 높는데 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신중년</p>

SCENE	VIDEO	Audio / MENT
		의 남, 여 특성 설명 (출처:신중년의 안정적 노후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	<p>[담화 관련 콘텐츠]</p> <p># 유튜버 아저씨즈(중년모델 모임)</p> <p># 중년을 다룬 광고 : https://youtu.be/LkXir0Oy4Sw</p> <p># 신중년 채널 TVN STORY : https://youtu.be/XJSgLOShmk</p> <p># 당구장 청소 삼 년이면 당구왕이 된다? 당구 천재가 된 64세 할머니 이야기 https://youtu.be/QGYugSKZ_sM</p> <p># 나빌레라 - 70세 노인이 발레하겠다고 찾아온 곳 https://www.youtube.com/watch?v=Fo-Zd_g26IA</p>	<p>-사회자(예시):</p> <p>지금까지 신중년의 정의, 범위, 특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신중년에 대해 세밀하게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영상 한 편 보시죠.</p> <p>(영상재생)</p> <p>앞서 본 영상에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신중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중년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p> <p>5-1) 신중년의 생애일자리 경험(이윤경)</p> <p>▶40초 : 사회 전반적으로 한 과업을 오래 수행한 장인을 인정해주는 분위기, 그에 따라 계속 본업을 이어갈 기회 증가</p>

SCENE	VIDEO	Audio / MENT
		<p>5-2) 신중년의 여가활동(이윤경) ▶40초 : 일하느라 잊고 있던 본인의 꿈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p> <p>5-3)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김미곤) ▶40초 : 노동 측면에서 사회에 책임을 다했다는 여유, 은퇴 이후 남은 시간을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으로 펼치는 사회공헌활동</p> <p>-사회자(예시) : 그렇군요. 신중년은 정년 후 또 다른 일, 자기계발, 사회공헌 활동에 열중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활동과 별개로 신중년이 염두에 두는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p> <p>6) 신중년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설명(조성은)</p>

SCENE	VIDEO	Audio / MENT
		<p>▶60초 : 일, 은퇴, 가족과 부양, 사회관계에 대한 설명</p> <p>-사회자(예시) :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전반적인 활동과 고민은 안정적인 소득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사는 세대이다 보니 소득분야와 소득수준이 궁금한데요.</p> <p>7) 신중년 소득분야, 소득수준 설명(황남희)</p> <p>▶40초 : 주로 어떤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지(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연금소득 등) 그 금액은 얼마쯤인지 설명</p>
		<p>-사회자(예시) : 신중년은 어떻게 노후준비를 하고 있나요?</p> <p>8) 노후준비 수준 설명(이윤)</p>

SCENE	VIDEO	Audio / MENT
		<p>경) ▶40초</p> <p>9) 노후준비 방법 설명(조성은) ▶40초</p>
#	<p>*마무리 신증년 지원 정책 및 지원기관 영상 ※현장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영상 편집 시 삽입</p> <p>[신증년의 안정적인 노후정착을 위한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담화(일반적인 노후지원정책, 신증년 특화된 중앙정부 정책, 지자체 정책)]</p>	<p>-사회자(예시): 영상으로도 확인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의 노력을 넘어 국가에서는 신증년의 안정적인 노후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p> <p>10) 일반적인 노후지원정책 (소득보장, 고용 등) 설명(김미곤) ▶40초</p> <p>11) 신증년 특화된 중앙정부 정책, 지자체 정책 설명(황남희) ▶40초 : 노후준비서비스,</p>

SCENE		VIDEO	Audio / MENT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재취업 지원서비스, 귀농귀촌종합센 터 등을 설명
#		*클로징멘트(진행 소감, 자 유 소감)	
#		*시그널 음악 대본을 정리하고, 인사 나누 는 모습	
	엔딩	*보사연 CI	